

2011

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총괄보고서 (2011~2020)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의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경기도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함께
30개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국제NGO인 Global Footprint Network(GFN,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Green Map(세계그린맵운동)과
국제기구인 ICLDI(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치단체국제협의회),
United Nation Global Compact(UNGC, 유엔글로벌컴팩트)의 공식 협력 기관입니다.

C O N T E N T S

4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추진개요

17 제3차 경기의제21 소개

- 17 - 생물다양성의제
- 49 - 기후행동21의제
- 69 - 녹색사회경제의제
- 105 - 마을의제
- 131 - 삶의질의제
- 163 - 지속가능성평가의제
- 189 - 시·군의제협력의제
- 217 - 국제교류협력의제

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추진 개요

| 『경기의제21』이란 |

『경기의제21』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지방의제21』의 고유이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자원고갈 등으로 점차 황폐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는 세계 79개국의 국가정상들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의제21’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는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2년 리우선언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의제21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제(Agenda)’란 함께 토의할 과제, 해야 할 일’이란 뜻이다. 또한 ‘의제21’이란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한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이러한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지방의제21은 지구환경 보호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원칙을 세우고, 행동 목표를 정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여성, 청소년, 주민, 기업, 행정기구, 노동자, 농민, 과학자, 시민단체 등 자치단체 주요 그룹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다. 경기도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도민, 행정당국, 기업 등의 참여주체가 수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며, 이의 실천은 환경친화적인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기도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나온 말로,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의미한다.

| 『경기의제21』 재작성 역사 |

▶ 1차 경기의제21

- 1998년 3월 20일 경기의제21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1998년 9월 4일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대회
- 1999년 6월 3일 경기도 의제 『경기의제21(8개 분야 21개 의제)』 선포식 개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로 명칭 변경
- 1999년 6월 ~ 2003년 1차 『경기의제21』 실천

▶ 2차 경기의제21

- 2004년 총괄위원회 구성하여 의제재작성 사업 총괄, 의제 선정 및 2개년 추진계획 검토조정
2차 『경기의제21(4개 분과 13개 의제)』 중 산림 및 녹지, 습지, 하천, 폐기물, 도시계획, 주민자치, 성평등, 보육의제 등 8개 영역 의제 작성
- 2005년 1월 2차 『경기의제21』 중 8개 영역 의제 작성완료 보고회
- 2005년 2차 『경기의제21』 중 농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너지, 사회복지, 문화 의제 작성
2004년 작성된 8개 영역 의제 실천
- 2006년 1월 2차 『경기의제21』 중 5개 영역 의제 작성 완료 보고회
- 2006년 ~ 2010년 2차 『경기의제21』 실천
- 2010년 3차 『경기의제21』 작성을 위한 2010 미래위원회 구성, 3차 경기의제21의 방향 제시

▶ 3차 경기의제21

- 2011년 3차 『경기의제21』 작성
- 5개 영역위원회 + 3개 특별위원회로 재편하여 의제 작성.
- 2012년 1월 3차 『경기의제21』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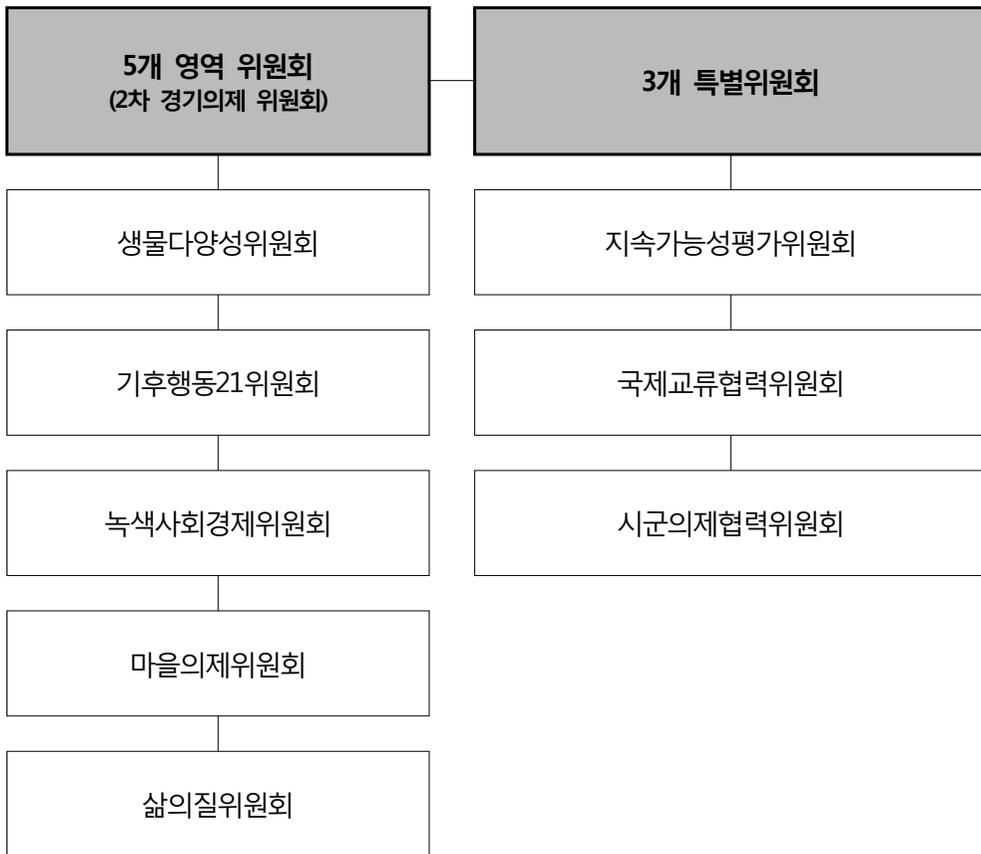
| 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2010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차 『경기의제21』의 실천사업에 대한 상향식 참여평가와 3차 『경기의제21』의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인 미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였다. 미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한 해동안 2차 『경기의제21』의 협력 성과를 진단, 환경·사회분야 13개 의제와 지표를 담고 있으며 해당 의제실천위원회별로 활발한 모니터링이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주요 주체 간 협력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적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다양한 계층의 폭 넓은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의 대표적 거버넌스인 지방의제21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3차 『경기의제21』은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민참여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를 갖춘 ‘성찰적 거버넌스’로의 위상전환을 모색하고, 동시에 시의성과 경기도 정책수요를 고려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 및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한 효과적 조직운영을 통해 ‘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기존 13개 영역의 의제실천위원회를 사회적경제(기업)를 포함한 5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3개의 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꾀하고 더불어 영역별 위원회 통합을 통한 공동사업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3차 『경기의제21』을 작성하게 되었다.

| 3차 『경기의제21』 위원회 구성 |



|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과정 |

기간(월)	주요내용	세부내용
2월	소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총괄워크숍을 통한 7기 전체 위원 상건례 - 의제별 재작성 소위원회(TF팀) 구성
3월 ~ 4월	의재재작성 일정 및 추진방법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별 재작성 소위원회 구성 완료 - 의제별 재작성 일정 및 추진방법(방향) 정리
5월	현황조사 및 분석 의제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별 소위원회 위원간 세부 역할분담 - 의제별 현황조사 및 분석 - 의제별 재작성의제 개요 및 주요내용 설정 * 필수점검사항 의제별 목표(비전), 현황, 주요지표, 추진전략 및 과제, 실천지침 등
6월 ~ 9월	1차 초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별 초안 작성 * 필수점검사항 의제명(안), 주요지표(2011~2020), 현황 및 배경, 추진전략, 행동지침 등
10월	2차 초안작성,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별 2차 초안 작성 - 전문가, 기초의제, 위원회, 지역간담회 등 재작성의제 내용관련 의견수렴 * 필수 점검사항 의제별 모니터링계획 수립 및 실효성 검토
11월 ~ 12월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완료,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별 재작성의제 최종안 검토 - 3차 경기의제 재작성 완료 - 총괄워크숍을 통한 전체위원 내용공유 및 의견수렴
12년 1월	제3차 경기의제21 제작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경기의제21 총괄보고서 제작 및 201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정기총회 선포를 거쳐 배포

| 재작성 된 의제 구성 체계 |

재작성된 『제3차 경기의제21』은 생물다양성, 기후행동21, 녹색사회경제, 마을의제, 삶의질 등의 5개 핵심의제와 지속가능성평가, 국제교류, 시군의제협력 등 3개 영역의 특별의제로 구성되었다.

(1) 의제 작성 배경

- 의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이유, 재작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의제 재작성의 핵심개념들과 의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2) 의제명

- 의제명만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 의제지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의제명으로 작성하였다.

(3) 의제목표

- 위원회의 비전, 목표, 세부달성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 지표모니터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 혹은 목표과제를 말하며 달성목표는 수치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여 (5),(6),(7)항목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를 지양하고 민관협력차원에서 달성가능한 목표를 수치화하여 목표화하였다.

(4) 의제 현황

- 경기도의 현황과 문제점, 변화 예상내용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 해당 분야의 실태 및 변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 경기도 현황 관련 주요 자료들을 충실히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5) 주요 지표

- 달성하고자 하는 의제지표를 제시하고 연도별 달성목표 제시하였다.
- 지표선정의 이유와 활용통계자료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지표로 지수화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 주요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달성목표를 현실성 있고 모니터링 가능하게 설정하였다.
- 현황과 연계하여 주요지표 설정 시 기본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 현재 상황과 그에 기준한 지표설정내용을 기술하였다.

(6) 추진 전략

- 의제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실천전략을 구체적이지만 간략하게 제시하며 경기도 및 시·군, 시민단체, 관련분야 당사자 집단, 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방안, 각각의 역할 수행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장기 전략과 추진사업(실천과제)을 설명하였다.

(7) 이렇게 합시다

- 경기도 및 기초시군, 도민, 시민단체, 기업분야, 지방의제21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의 행동지침을 실천주제별로 폭넓은 행동계획 제시하였으며 필요시 세부 중점 참여 집단(교육청, 언론사 등등)의 역할을 함께 제시하였다.

(8) 모니터링 평가방법

- 선정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추진체계, 실천주체, 시기, 발표 및 정책에의 반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9)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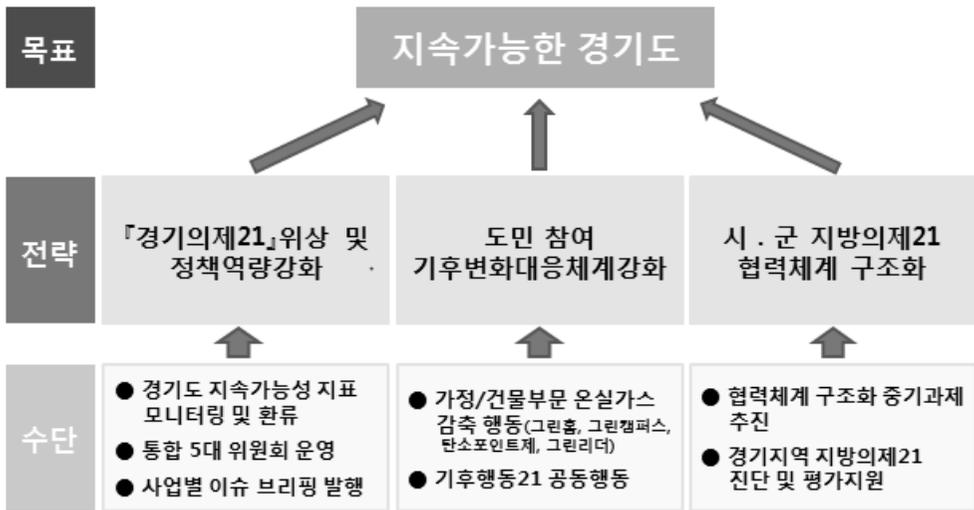
- 관련 통계 및 정보 첨부

(10) 참고문헌

| 3차 『경기의제21』 실천기간 : 2011년 ~ 2020년 |

지표달성 목표 년도는 향후 10년으로 설정하여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을 추진하되, 매 4년마다 평가(진단)를 통해 지표수정 및 이행전략 보완, 추진체계 조정

| 3차 『경기의제21』 추진 목표와 방향 |



| 3차 『경기의제21』 주요 사업 |

요약

1.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저탄소 녹색 삶의 질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2. 통합 5개위원회 운영 및 지속가능성 행동계획 이행
3. 시군 기초의제21 협력강화 및 활성화 지원
4. 기후변화대응 운동 확산 및 지원

주요사업 1.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저탄소 녹색 삶의 질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1) 추진목적

- 2차 『경기의제21』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푸른경기21의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개발 필요.
- 『경기의제21』의 기여와 성과를 도민, 행정과 함께 측정하고 공유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체계 필요.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의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중점적인 실천 활동 분야 개발.

(2) 추진방안

-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 지표평가 : 2012년 1차 평가, 2014년 2차 평가(도단위 평가 + 31개 시·군 비교평가)

주요사업 2. 5개 분야별 위원회 운영 및 지속가능성 행동계획 이행

(1) 추진목적

- 2차 『경기의제21』 13개 의제실천에 따른 문제점 해결. 이를 통한 위원회 간 공동사업 확대 및 민관협력과제 발굴과 정책화
-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

(2) 추진방안

- 5개 핵심위원회 및 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개편

- 통합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추진 / 기존 2차 『경기의제21』 지표 중 유효한 과제의 지속추진 및 성과 확대 등

주요사업 3. 시·군의제21 협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1) 추진목적

- 시·군의제21과의 협력정도를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실천사업의 광역-기초 간 구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시·군의제21의 향상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시·군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시·군의제21의 정책 역량 및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 지원

(2) 추진방안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사업’을 시·군의제21 사업으로 확산 및 지원(중기과제1)
- 3차 경기의제21 5개 위원회를 시·군의제21 해당 분과위원회(주요 분과위원) 네트워크로 재편(중기과제2)
- 사무처 내 시·군의제 협력지원 전담 팀장 배정(중기과제3)
- 특별과제 : 동두천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 및 지원

주요사업 4. 기후변화대응 운동 확산 및 지원

(1) 추진목적

- 기후변화대응분야 정책, 홍보, 교육, 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의제21 및 시민 사회 역량강화 유도
- 기후변화대응에 부문별 녹색실천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녹색역량 증진
- 시·군의제21이 지역녹색역량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2) 추진방안

- 경기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환경교육종합계획 시민참여 확산(탄소포인트, 그린 리더 통합관리 등)을 위한 정책대응지원
- 우리동네 그린맵, 그린홈컨설턴트, 그린캠퍼스 운동 등 기획사업 확산
- 국제 동향 및 해외사례 보급 및 확산

| 3차 『경기의제21』 8개 위원회 의제명 및 픽토그램 소개 |

위원회	의제명	픽토그램
기후행동21위원회	기후 회복을 위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	
생물다양성위원회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생물+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마을의제위원회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	
삶의질위원회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풍요롭고 안전한 저탄소 사회	
시·군의제협력위원회	따로 또 같이, 나눔과 협력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지방의제21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글로벌-로컬, 지속가능한 경기도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생물 다양성의제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생물+1”

1. 의제작성배경

1-1.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하면 자연보전은 자연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자원을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이라고 하였다. 이는, 생물다양성이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인간의 삶의 질 개선 및 녹색경제의 건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우선 의식주와 음식의 재료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의 정화, 가뭄과 홍수 완화, 토양 형성 및 보전과 비옥도 재생산, 폐기물의 분해와 독성제거, 농작물과 자연식생의 꽃가루받이, 종자 전파, 양분 순환, 농업 및 인류의 병해충 제어, 기후 안정, 인간 정신의 지적 자극 및 경관적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심지어 고품의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하는 가치를 지닌다.¹⁾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이란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생태계의 다양성 및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 하며, 생물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일반적으로 한지역내 종의 다양성 정도, 분류학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이란 종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1) 출처 : 유엔환경계획(2009).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1-2.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인류는 생존을 위한 모든 필수요소들을 모두 생물다양성에서 얻고 있음에도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산업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되고 생물종의 다양함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생물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인류의 문화와 복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은 큰 위협에 처할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제정하였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외에도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약 등이 있는데,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협약인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9년 6월 23일 독일의 본에서 채택된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일명 본협약),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이 있다.

1-3. 생물다양성 정책과 경기도

생물다양성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제사회에서 자연환경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948년10월 국가,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로 결성되었으며 2011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181개국 11,000여명의 전문가, 비정부기구 882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9개 기관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2012년 우리나라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일반시민들과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위해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

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11년 12월 29일에 제정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대비 23.5%인 1천194만명(2011년 기준)으로 매년 2%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을 위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급격한손실과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푸른경기21은 생물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물다양성 의제를 설정하여 경기도의 생물과 서식처 보호 활동을 지속하여 향후 10년을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의 제도화 원년을 삼고자 한다.

2. 의제명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생물 + 1

생물+1.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들과 또 하나의 생명인 인간이 공존하는 더 큰 온전한 세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생물+1일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지구상의 담당하고 책임 있는 1종인 인간으로서 생물+1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것이다.

3. 의제목표

목표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린다.

목표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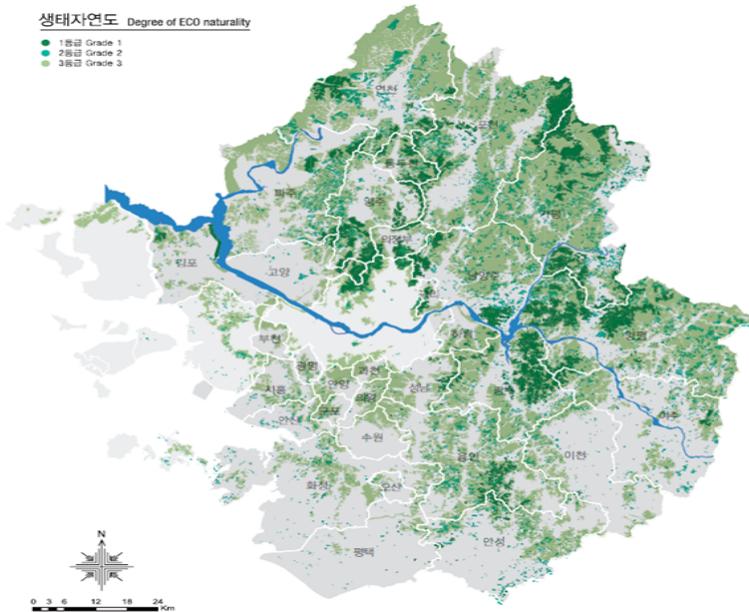
목표3.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화에 기여한다.

4. 의제현황

4-1. 생태계다양성 현황²⁾

4-1-1. 경기도의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1등급이 6.6%, 2등급이 39%, 3등급이 54.4%를 차지하고 있다. 1등급 지역은 포천시 백운산, 의정부시·양주시·고양시의 북한산, 광주시 관산, 동두천시·양주시 천보산, 안산시 갯벌, 양평군 용문산 등에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광주시, 연천군 등 동북부 지역에 넓은 면적의 1등급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의 생태자연도

2) 출처 : “박은진(2011). 경기도 보호 야생동·식물 선정 및 관리방향 연구”와 “경기도(진행중).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참고하여 정리

〈표1〉 시·군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 및 비율

시·군명	면적 (km ²)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 (km ²)			
		1등급	2등급	3등급 / 미조사	
가평군	840.5	125.9 (15.0%)	481.8 (57.3%)	232.8 (27.7%)	
고양시	267.24	18.1 (6.8%)	68.9 (25.8%)	180.3 (67.5%)	
과천시	35.88	0.02 (0.1%)	20.3 (56.7%)	15.5 (43.3%)	
광명시	38.63	0 (0.0%)	12.2 (31.6%)	26.4 (68.4%)	
광주시	428.75	69.9 (16.3%)	203.2 (47.4%)	155.6 (36.3%)	
구리시	33.26	5.3 (16.0%)	6.9 (20.8%)	21.1 (63.3%)	
군포시	37.07	0.1 (0.3%)	13.5 (36.5%)	23.4 (63.2%)	
김포시	295.22	13.4 (4.5%)	67.6 (22.9%)	214.3 (72.6%)	
남양주시	458.8	36.0 (7.9%)	236.1 (51.5%)	186.7 (40.7%)	
동두천시	96.1	23.7 (24.7%)	34.8 (36.2%)	37.6 (39.1%)	
부천시	53.59	0 (0.0%)	7.6 (14.2%)	46.0 (85.8%)	
성남시	141.78	6.9 (4.9%)	62.6 (44.1%)	72.3 (51.0%)	
수원시	121.44	0 (0.0%)	26.9 (22.2%)	94.5 (77.9%)	
시흥시	135.85	0 (0.0%)	30.9 (22.7%)	105.0 (77.3%)	
안산시	146.19	0.3 (0.2%)	35.8 (24.5%)	110.1 (75.3%)	
안성시	554.89	8.2 (1.5%)	204.5 (36.9%)	342.2 (61.7%)	
안양시	59.04	0 (0.0%)	27.1 (46.0%)	31.9 (54.1%)	
양주시	310.47	50.3 (16.2%)	95.5 (30.8%)	164.7 (53.0%)	
양평군	878.02	116.0 (13.2%)	430.5 (49.0%)	331.5 (37.8%)	
여주시	607.83	9.3 (1.5%)	256.6 (42.2%)	342.0 (56.3%)	
연천군	672.93	41.7 (6.2%)	286.1 (42.5%)	345.1 (51.3%)	
오산시	42.59	0 (0.0%)	11.7 (27.5%)	30.9 (72.5%)	
용인시	592.27	23.2 (3.9%)	243.9 (41.2%)	325.2 (54.9%)	
의왕시	53.89	0.04 (0.1%)	29.2 (54.2%)	24.7 (45.8%)	
의정부시	81.7	14.2 (17.4%)	24.9 (30.5%)	42.5 (52.1%)	
이천시	461.43	1.2 (0.3%)	138.0 (29.9%)	322.3 (69.8%)	
파주시	679.88	20.8 (3.1%)	192.1 (28.3%)	467.0 (68.7%)	
평택시	480.21	1.4 (0.3%)	73.7 (15.3%)	405.1 (84.4%)	
포천군	826.25	80.2 (9.7%)	399.9 (48.4%)	346.6 (41.9%)	
하남시	93.66	3.9 (4.1%)	49.1 (52.4%)	40.7 (43.5%)	
화성시	682.78	0 (0.0%)	188.2 (27.6%)	494.5 (72.4%)	
합계	10,166.7	670.1 (6.6%)	3,960.2 (39.0%)	5,536.3 (54.4%)	

자료 : 경기도(2010), 경기환경백서

4-1-2. 산림면적

경기도에서 산림은 전체면적 중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가평, 양평, 포천 등 경기 북부와 동부에 많은 면적이 분포하며, 활엽수 혼효림과 침엽수-활엽수 혼효림, 잣나무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의 산림면적은 총 526,985ha이고, 이 중 침엽수 178,383ha, 활엽수 193,970ha, 혼효림 133,929ha, 무입목지 20,703ha이며, 단위면적당 축적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무입목지는 증가하고 있다.

〈표2〉 경기도 시·군별 산림면적(2010년 기준)

단위 : 면적(ha)

행정구역	총계 (비율)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무림목지
계	526,985 (51.8%)	178,383	193,970	133,929	20,703
수원시	2,641 (21.7%)	695	829	875	242
성남시	7,150 (50.4%)	1,125	4,885	967	173
의정부시	4,850 (59.4%)	648	931	2,367	904
안양시	3,019 (51.1%)	372	874	1,767	6
부천시	1,012 (18.9%)	164	640	150	58
광명시	1,494 (38.7%)	218	598	666	12
평택시	8,573 (17.9%)	4,195	1,140	2,964	274
동두천시	6,365 (66.2%)	1,398	2,361	2,413	193
안산시	6,384 (43.7%)	2,116	1,868	2,270	130
과천시	2,334 (65.1%)	96	836	1,306	96
구리시	1,341 (40.3%)	161	716	385	79
남양주시	31,621 (68.9%)	9,405	14,578	7,172	466
오산시	1,219 (28.6%)	519	288	371	41
시흥시	4,350 (32.0%)	790	1,631	1,870	59
군포시	1,678 (45.3%)	418	505	744	11
의왕시	3,470 (64.4%)	541	1,426	1,481	22
하남시	4,909 (52.4%)	571	2,496	1,761	81
고양시	9,889 (37.0%)	820	2,575	5,444	1,050

용인시	30,895 (52.2%)	10,685	11,085	6,252	2,873
파주시	27,513 (40.5%)	7,244	6,613	12,756	900
이천시	17,582 (38.1%)	7,849	3,523	5,052	1,158
양주시	16,630 (53.6%)	3,488	5,067	6,812	1,263
여주군	29,209 (48.1%)	10,581	6,016	10,630	1,982
화성시	19,823 (29.0%)	5,886	3,771	8,971	1,195
광주시	28,826 (67.2%)	9,040	12,220	6,613	953
연천군	36,808 (54.7%)	4,290	27,255	4,607	656
포천시	54,282 (65.7%)	18,576	17,537	15,489	2,680
가평군	68,996 (82.1%)	33,187	28,970	5,757	1,082
양평군	62,289 (70.9%)	30,301	26,270	5,040	678
안성시	24,359 (43.9%)	10,831	4,234	8,488	806
김포시	7,474 (25.3%)	2,173	2,232	2,489	580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4-1-3. 하천과 습지 분포

경기도 내에는 총 516개소의 하천이 분포하고 있으며, 총 연장 3,462km의 하천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하천 15개소, 지방1급 하천 4개소와 지방2급 하천 497개소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149개소의 내륙습지와 11개소의 연안습지가 있으며, 그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한강하구습지가 지정되어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총면적 60.668km²(약 1,835만평)으로 인천시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일부가 포함.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대규모의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저어새 산란지인 유도 등이 위치하고 있어 멸종위기종 I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II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매화마름 등)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하고 있다.

〈표3〉 경기도내 대표적인 내륙습지 현황

명칭	위치	유형	면적(m ²)	관할시군
원천저수지	수원시 팔달구 하동	담수습지	40,000	수원시
낙생저수지	성남시 대왕동 /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담수습지	12,000	성남시
창내습지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하천형습지	165,000	평택시
안터저수지	광명시 하안동	저수지	-	광명시
미사동습지	하남시 미사동 일대 (경안천 광동교 동측)	강변습초원	27,500,000	
보통리습지	화성시 보통리 저수지	담수습지	455,400	화성시
금사습지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담수습지	6,600,000	여주군
복대습지	여주군 흥천면 복대리 배사면 우곡리 구간(복하천)	하천형습지	1,650,000	여주군
강천습지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점도면 처리, 도리	하천형습지	430,000	여주군
이포습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대교 남측)	담수습지	198,000	여주군
서원습지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담수습지	66,000	여주군
광동원담습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원당리	하상습지	825,000	광주시
진목습지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전궁리, 방아리	하천변습지	600,000	용인시
가래울습지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하천변습지	90,000	파주시
냉정습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호소형	37,600	포천시
금주습지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저수지변습지	15,900	포천시
와초습지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하천변습지	100,000	연천군
사랑동습지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	-	연천군
신탄습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	-	연천군
대광습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	-	연천군
우정습지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	-	연천군
장못습지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담수습지	90,000	연천군
조개못습지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하천변습지	250,000	연천군
팽성습지	평택시 팽성읍 (진위천 팽성교)	하천형습지	30,000	평택시
울동습지	성남시	산지습지	-	성남시

※ 경기도내 내륙습지 생태계 조사 연구(2006) 자료 참조

〈표4〉 경기도내 대표적인 연안습지 현황

관할시	면적(km ²)	명칭	유형
김포시	8	김포갯벌	갯벌
시흥시	11	시흥갯벌	갯벌
시흥시		시흥갯골생태공원	갯벌공원
시흥시		오이도	갯벌
안산시	88	대부도갯벌	해안
안산시		시화호	해안가호수 및 간척지
화성시	196	화성갯벌	해안
화성시		남양호	해안가호수 및 간척지
화성시		화성호	해안가호수 및 간척지
화성시		궁평갯벌	사빈 및 사질갯벌
평택시	13	평택갯벌	갯벌

※ '이양주(2000). 경기도 연안습지 생태계 기초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완

4-2. 생물종다양성 현황

경기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대한 조사들이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모두 종합 정리한 자료는 없다. 2006년~2010년 실시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년~2010년)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식물 2,217종, 포유류 32종, 조류 213종, 양서·파충류 34종, 담수어류 9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림이 많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 집중 분포한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생물상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표 5〉 경기도의 생물종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생물 분류군	남한	경기도1)	DMZ 일원2)	
			전체	경기도
포유류	123	32	45	12
조류	457	213	260	152
양서파충류	43	34	31	29
어류	905	96	143	104
식물	3,971	2,217	2,451	1,346
합계	5,499	2,592	2,930	1,636

주 : 1) 환경부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결과로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에는 아직 일부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고, 성남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은 미조사됨.

2) 자료: 박은진·최성록(2010)을 인용한 것으로,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의 기존 자료들을 종합정리한 결과임.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기도 지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2종, II급 3종, 천연기념물 3종이 조사되었다. 조류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6종, II급 21종, 천연기념물 14종이 조사되었으며, 양서·파충류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1종, II급 3종으로 조사되었다. 담수어류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5종만 조사되었다. 식물의 경우 멸종위기야생식물 I급 1종, II급 21종, 천연기념물 1종이 조사되었다.

〈표6〉 경기도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현황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1)

구 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I급	II급	
포유류	수달, 산양 (2)	담비, 삿, 하늘다람쥐 (3)	수달, 산양, 하늘다람쥐 (3)
조류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두루미 (6)	큰덤불해오라기,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물수리, 벌매, 독수리, 조롱이, 참매, 말뚝가리, 잣빛개구리매, 흰죽지수리, 새홀리기, 재두루미,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수리부엉이,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비둘기조롱이 (21)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큰고니, 원앙, 흰꼬리수리, 독수리, 흑두루미,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올빼미, 소쩍새, 금눈쇠올빼미, 칼새 (14)
양서파충류	구렁이 (1)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3)	-
담수어류	-	묵납자루, 돌상어, 꾸구리, 가는돌고기, 독종개 (5)	-
식물	섬개야광나무 (1)	기생꽃, 나도승마, 개병풍, 둥근잎평의비름, 히어리, 산작약, 죽절초, 삼백초, 가시연꽃, 순채, 한계령풀, 갯쟁이풀, 연잎평의다리, 매화마름, 백부자, 세뿔투구꽃, 개가시나무, 파초일엽, 제주고사리삼, 물부추, 솔잎란 (21)	탱자나무 (1)

주 : 1)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에는 아직 일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성남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은 미조사됨.

4-3. 정책제도 및 사회적 현황

4-3-1. 보호지역

- 법정보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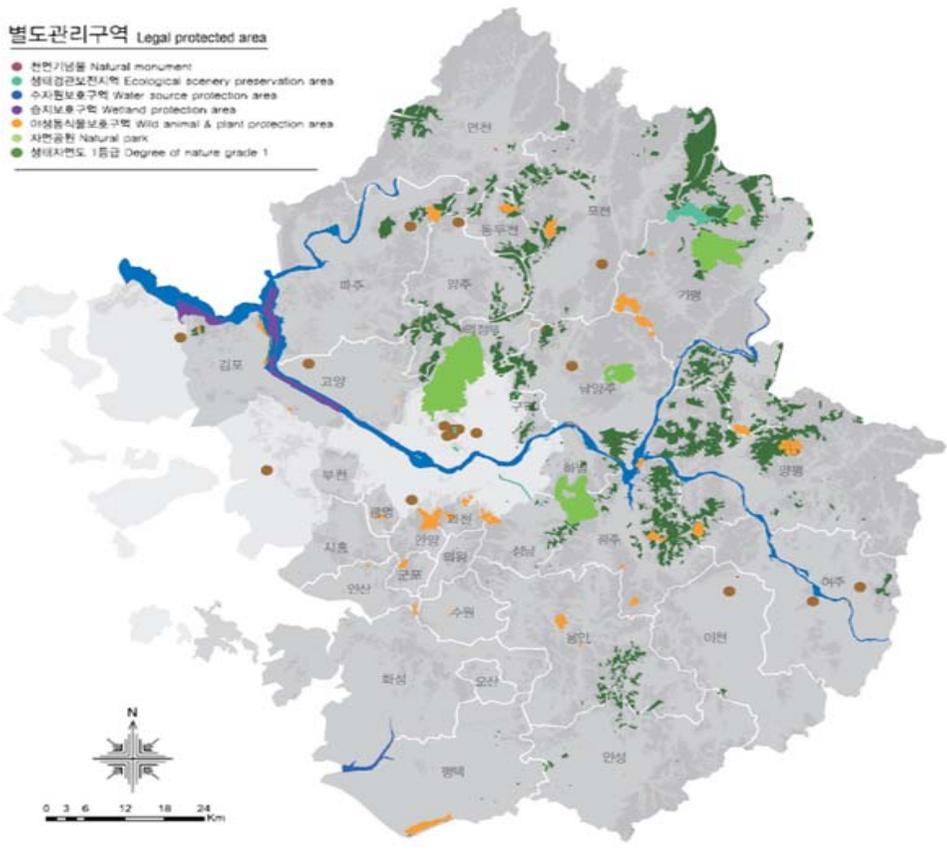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보호관리를 받는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도립공원 2개소, 군립공원 2개소, 천연기념물 22개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46개소, 수자원보호지역 4개소, 습지보호지역 1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 등 총 104개소에 약 281.96km² 면적(경기도 전체면적의 2.77%)이다.

시·군별로는 가평군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연인산, 명지산 도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넓은 면적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김포시의 경우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보호지역 면적이 약 28.39km²에 해당된다. 고양시와 광주시는 각각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부를 포함하여 고양시는 25.7km², 광주시는 24.5km²의 보호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다.

〈표 7〉 경기도의 보호지역 현황

구분	명칭	해당지역	면적(km ²)	지정주체	관련법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굴참나무	양평군 옥천면 일대	0.070	시·도지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갈나무	양평군 용문면 일대	0.130			
자연 공원	국립공원	북한산	고양, 양주, 의정부 일대	40.47	시·도지사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남한산성	광주, 성남, 하남 일대		
	군립공원	연인산	가평 일대	37.445	군수	
		수리산	군포, 안양 일대	6.969		
		천마산	남양주 일대	12.460		
명지산	가평 일대	14.027				
천연기념물	물거미 서식지	연천군 전곡읍 일대	0.051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반룡송	이천시 백사면 일대	-			
	공룡알화석 산출지	화성 일대	15.900			
	재두루미 도래지, 크낙새 서식지 외 19개소	고양, 김포, 남양주, 양주,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포천 일대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46개소)	가평 3, 고양 3, 과천 3, 광주 4, 광명 1, 김포 3, 남양주 2, 동두천 1, 수원 1, 성남 3, 안양 3, 양주 3, 양평 3, 여주 2, 용인 1, 의정부 2, 파주 3, 평택 1, 포천 2, 화성 2	54.302	환경부장관	야생동·식물 보호법		
수자원보호구역	아산호	평택 일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호	평택, 화성 일대	-			
	청평호	가평 일대	-			
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	김포, 고양, 파주 일대	54.334	내륙습지 : 환경부장관 연안습지 : 국토해양부장관	습지보전법	
생태·경관 보전지역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가평, 포천 일대	22.057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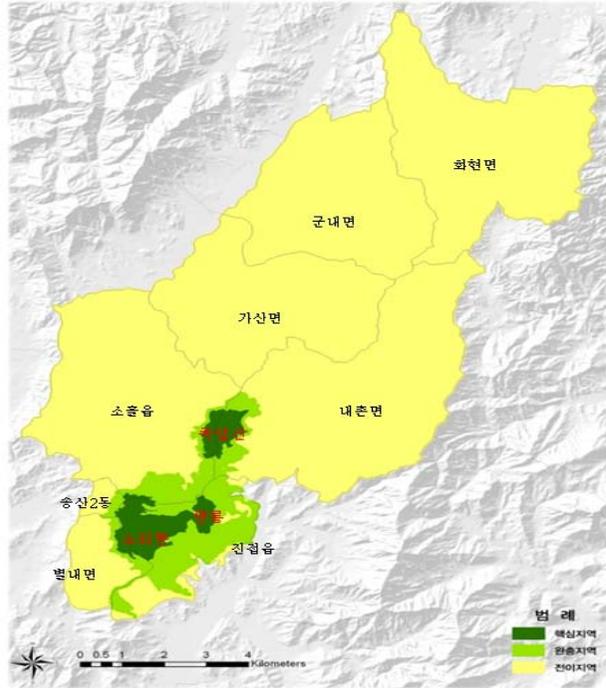
자료 : 경기도(2010), 환경백서 재구성.



〈 경기도의 별도관리구역 〉

•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안한 것으로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전, 개발,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다. 핵심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 보전가치를 활용하여 전이지역에서 지역특산물, 생태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리와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광릉숲의 245 km² 넓이의 지역이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DMZ일원에 대해서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광릉 생물권보전지역 〉

4-3-2. 관련제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로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 따라, 첫째,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총괄관리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둘째, 각 부처가 소관별 분산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며 국가 생물종 목록 및 생물다

양성 정보공유체계 등을 구축해야한다. 셋째, 환경부장관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취소에 따른 환수 명령과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허가 취소에 따른 포획·채취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근거가 마련되며 승인·허가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외래생물관리계획 수립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생물다양성 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은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이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서식환경 관리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또 다른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지사는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경기도는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제37조에 근거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도래지 등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보리재배, 벼 미수확 존치, 벼짚존치, 쉼터 조성 등 지역주민의 생태계보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1년 현재 경기도에서는 336개 농가가 약 4.24km² 면적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8〉 경기도 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실적

년 도	계약유형(천㎡)					농가수
	계	벼미수확존치	보리재배	벼짚존치	싹터조성	
2007	2,079	66	171	1,831	11	247
2008	2,717	78	298	2,284	57	200
2009	6,166	96	805	5,215	50	393
2010	2,907	55	280	2,527	45	265
2011	4,237	88	96	4,013	40	336

자료 : 경기도(2010), 경기도 환경백서 재구성

4-3-3. 민간활동 기반

경기도에서는 환경관련 민간활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환경교육단체는 자연환경보전과 생태 체험교육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식증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보전 교육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만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 경기도에는 2010년 을 기준으로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189개소와 비영리법인환경단체 24개소가 운영 및 관리 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활동 역량들은 향후 생물다양성 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9〉 경기도 환경단체 등록 현황

단위 : 개소수

지역	합계	비영리민간 환경단체	비영리법인 환경단체	지역	합계	비영리민간 환경단체	비영리법인 환경단체
수원	29	26	3	의왕	1	1	
성남	12	11	1	오산	2	2	
부천	14	10	4	하남	7	7	
안양	8	8		여주	2	2	
안산	10	7	3	양평	5	4	1
용인	13	12	1	과천	2	1	1
평택	6	6		고양	10	9	1

광명	4	4		의정부	7	6	1
시흥	11	9	2	남양주	14	13	1
군포	5	5		파주	4	4	
화성	10	9	1	구리	5	5	
이천	3	3		포천	4	4	1
김포	4	2	2	양주	5	5	
광주	9	9		동두천	2	1	1
안성	3	3		가평	1	1	
				총계	213	189	24

자료 : 경기도(2010), 경기도 환경정책과 내부자료.

4-4.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조사 현황

4-4-1. 전국 조사로 본 경기도의 야생 동·식물

경기도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나 국토해양부가 실시하는 전국 조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이루어졌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습지, 호소, 민감지역으로 선정한 몇 개 특정지역을 조사한 경우가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 등 경기도의 일부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전국조사와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조사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조사는 1967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이래 10여개 조사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이며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환경부, 2005)

- 전반적 기초조사 개념의 전국자연환경조사
- 생태계별 조사로서 전국내륙습지조사, 전국자연동굴조사, 전국무인도서조사, 전국해안사구조사, 전국하구역조사 등
- 특정종 조사로서 야생동물실태조사, 멸종위기종조사, 철새이동경로 및 도래서식지조사 등

〈표10〉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 현황 및 경기도 조사지점

구분	주체	조 사 범 위	조 사 내 용	경기도 조사지점
전국자연 환경조사	환경부	전국 (육상206, 해안145권역)	육상 : 식생, 지형, 생물상 등 9개 분야 해안 : 지형,경관, 해조류 등 4개 분야	기준 연도 : 2010년 *지형,생물상 조사지점 : 12개 둔전, 성남, 광주, 양평, 용문, 지 제, 수원, 능평, 노곡, 이천, 능서, 여주 *식생조사지점 : 16개 청계산, 검단산, 무갑산, 양자산, 광고산, 문형산, 태화산, 석성산, 국수봉, 천덕봉, 해용산, 신통산, 추읍산, 삼각산, 당산, 금왕산
야생동물 실태조사및 관리,자원화 방안연구	환경부	전국 조사구 405개소	야생동물서식밀도 및 분포조사 - 수렵동물 (16종), 환경지표동물 (10종), CITES종(34종) 들고양이, 수달	기준연도 : 2010년 총 16개시 48개소 산악 10개소, 구릉 17개소, 농경지 14개소, 인가지대 6개소, 소택지 1 개소
철새이동 경로 및 도래지조사	환경부	전국 철새도래지 30개소	도래 철새의 종, 개체수, 이동경로	기준연도 : 2010년 한강·임진강 하구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전국 120여 개소	겨울철새 종 및 개체수 조사 철새도래지로서 중요성 을 갖는 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	기준연도 : 2010년 12개 지점(전국 172개소) 팔당호, 남한강(여주), 한강하구, 임진강(파주), 김포홍도평야, 왕송 저수지, 대부도, 시화호, 시흥 물 왕저수지, 남양만, 남양호
전국하구역 정밀조사	환경부	대하천 5개소 소하천 14개소	12개 분야 지형, 유역 환경, 식생, 수생식물상, 담수 및 기수역 무척추동물, 곤 충,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한강하구역(2004)
전국내륙 습지조사	환경부	전국 6개권역, 25소권역	일반조사 : 산지습지,도심지습지, 하천습지의분포, 현황	총 173개(전국 1,129개) 한강북부(2007) 연천 조개못습지, 장못 / 파주 -

		(한강,낙동강, 금강,영산강·섬진강,동해, 제주)	정밀조사 : 기능과가치파악. : 인문사회환경 : 지형/퇴적환경 : 수리및수문환경 : 식생,생물상정밀조사	초평도습지, 백연리습지, 평화누리공원습지, 장단습지 / 가평 - 이화리습지, 북장리습지 / 가평 - 사릉리습지, 송산리습지 / 양평 - 양수리습지, 문호리습지, 고봉산습지, 안골습지 / 구리 - 장자못 / 남양주 - 송촌리습지, 조안리습지 한강남부(2008) 김포 - 조강저수지, 고막저수지 / 성남 - 낙생저수지 / 시흥 - 소래저수지 / 안성 - 만수저수지, 금광저수지, 청룡저수지, 중동저수지, 뒤방죽, 인처동저수지, 북산방죽 / 의왕 - 왕송저수지, 백운저수지 / 평택- 내리저수지, 모산골저수지, 배다리저수지 / 하남 - 당정습지, 신장습지, 선동습지 / 의왕 - 포일습지 / 화성 - 기천저수지
전국연안 습지 기초조사	국토 해양부	전국 5개 권역	기초조사 4개분야 : 퇴적환경, 저서동물, 갯벌 오염, 사회경제현황 긴급조사 4개분야 : 퇴적환경, 저서동물, 염생 식물, 물새	2009년 시흥갯골 긴급조사 2011년 기초조사 : 인천 - 경기만 전 갯벌 2011년 정밀조사 : 인천 - 시흥 지점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국토 해양부	연안해역 8개권역, 근해해역은 3개권역	부유생태, 저서생태, 유영동물	2006년 서해북부해역조사 시 2개 지점 한강영향권역, 시화 / 아산 만 영향권역

4-4-2. 경기도 실태조사

경기도는 1999년 습지 현황 기초조사를 비롯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표 11>과 같은 실태조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실행한 바 있으나 장기생태모니터링 사이트 지정 및 주기적·장기적 조사의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표11〉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구 분	연도	조사범위	조사내용
경기도 습지 현황 기초조사	1999	경기도 주요하천	경기도 주요 내륙습지의 정도에 따라 매우 양호한 곳, 양호한 곳, 보통의 습지로 구분 조사
경기도 연안습지 생태계 기초조사	2000	경기도 연안	연안습지와 관련된 일반적 환경 조사 및 현황 파악 조사자료가 빈약한 김포 연안, 향후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연안, 간척사업이 진행중인 우정 연안 세 곳 중 두 곳을 선정 기초적인 생태계 조사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2001	경기도	환경부 미조사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지역의 생물종과 지형경관의 현황과 종류, 위치 등을 현장에서 조사
경기도 6개 호소생물상 조사	2004	6개 호소	6개 저수지(금광저수지, 덕우저수지, 먹우저수지, 동방저수지, 왕송저수지, 흥부저수지) 수질과 생태계 구조 조사 수질과 담수생태계의 장기적 관리 방안 제공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용역	2010	4개 지역	경기도의 민감지역(평택시 평택호일원, 안성시 한남정맥 일원, 가평군 명지산·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의왕시 한남정맥 일원)에 대한 조사 민감지역의 변화요인 파악, 보전 및 복원대책 마련

5. 추진전략

5-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린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생물다양성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적인 성과를 확보하기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 푸른경기21 생물다양성위원회는 광역의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현장 실천 활동을 집행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 전략1.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전략2. 시민참여 생물보전탐사활동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한다.
- 전략3. 생물다양성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연도별 실천계획(안)

구분	실천활동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학교/워크숍 기획 및 시범운영(위원회 대상) ■ 인식증진 활동 현황 파악(보고서 작성) ■ 생물보전탐사활동 기획 및 매뉴얼 작성 ■ 생물다양성 디자인 개발 소위원회 구성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학교 개최(활동가) ■ 생물보전탐사활동 시범운영 ■ 디자인개발 및 보급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학교 개최 (일반인 대상) ■ 생물보전탐사활동 실시 ■ 디자인개발 및 보급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학교/워크숍 성과 평가 ■ 인식증진 활동 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

5-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

경기도의 인구과밀과 이에 따른 개발압력을 고려할 때, 생물 및 서식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활동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시급하고 당면한 실천과제이다. 경기도가 정기적인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을 독자적으로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조사 자료에 대한 문헌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장 활동가가 많은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고려해 볼 때 경기도의 주요한 생물다양성 거점과 주요생물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종류의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가 국가나 경기도 차원의 법정조사의 효과를 보완하고 경기도 차원의 자료 목록화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지역별 주요 서식지 지도를 만든다.

- 전략1. 경기도 멸종 위기 종 및 보호종을 포함한 생물종 조사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 전략2. 생물종과 서식지보존을 위한 민간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 한다.
- 전략3. 경기도의 주요 보존서식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제작한다.

* 연도별 실천계획

구분	실천활동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사이트 선정 및 시범모니터링 ■ 경기도 생물다양성 조사현황 모니터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 및 서식지 민간모니터링 활동 실시 ■ 주요 서식지 지도 작성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 및 서식지 민간모니터링 활동 실시 ■ 주요 서식지 지도 작성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및 거점선정 결과 평가 ■ 경기도 생물종목록 작성 및 보고서 작성

5-3.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화에 기여한다.

국가적으로나 경기도 차원에서나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정책은 도입 단계이며, 거버넌스나 민간차원에서도 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과 의제 설정은 국내 최초의 시도이다. 정책도입 시기가 말로 거버넌스의 장점과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때로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검토와 이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해한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미래지향적인 의제설정 방식과 상대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을 살려 전담부서 설치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10년 선포하기 등을 추진한다.

전략1. 생물다양성 경기도 추진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제안을 한다.

전략2. 생물다양성 경기도 통합 전담 부서 만든다.

전략3. 경기도 생물다양성 10년을 선포한다.

* 연도별 실천계획

구분	실천활동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제도 및 정책 모니터링 ■ 경기도 생물다양성 10년 선포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지원 ■ 생물다양성 통합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통합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자원 확보방안 마련

6. 주요지표

생물다양성의제의 지표는 첫째,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고, 둘째, 행정기구가 아닌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의제의 특성에 부합하며, 셋째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순환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지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나 생물다양성 정책이 도입 단계이며, 푸른경기21의 생물다양성 의제 설정이 거버넌스로는 최초의 시도이므로 정책 도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현장의 구체적인 경험과 실험을 우선하려는 의미가기도 하다.

중심지표와 보조지표는 선정되는 우선 의제실천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 지표1.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활동 수

지표1은 ‘목표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린다.’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인식증진활동이야말로 모든 환경보전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 보조지표 : 교육활동의 수, 홍보활동의 수, 홍보물 개발건수, 교육과정개발 건수, 교재개발 건수, 인식증진활동에 참여한 시민의 수

* 연도별 달성목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8	2020
인식증진 활동의 수	1	4	8	10	20	31

■ 지표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

생물 및 서식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활동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한 실천 과제이다. 특히 인구증가와 높은 개발 압력 등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생물다양성 위원회의 주요구성원이 현장활동가들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많은 참여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 ▶ 보조지표 : 장기 모니터링 사이트의 수와 모니터링 횟수, 경기도 보존 서식지 면적, 생물종 및 서식지 조사현황 모니터링 횟수, 경기도 보호종 멸종위기종 목록 작성 여부, 보존활동 실행횟수와 참여 인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결과 그린맵 등재 횟수, 서식지 지도 작성의 수, 지역별 생물거점 사이트 및 깃대종 선정의 수

* 연도별 달성목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8	2020
생물·서식지 보존활동 수	1	4	8	10	20	31
장기 모니터링 사이트의 수	-	1	3	5	8	10

■ 지표3.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화 기여 횟수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화에 기여한다.’는 세번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성과의 정도가 상당한 진폭을 보일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거버넌스로서 의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적극적인 지표를 설정하였다.

- ▶ 보조지표 : 정책모니터링 횟수, 정책제안 횟수, 경기도 생물다양성 통합 전담 인력과 예산 규모, 경기도 생물다양성 10년 선포 여부

* 연도별 달성목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8	2020
정책 모니터링 및 제도화 기여 횟수	5	5	5	5	3	2

7. 이렇게 합시다

7-1. 경기도

-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을 작성한다.
- 생물다양성 관리인력 및 재원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경기도 자체적으로 주요한 생물 및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생물다양성 정책방향 및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과 협력한다.
- 생물다양성 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 다양한 생물다양성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다.

7-2. 푸른경기21

-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 국가의 생물다양성 정책 중 경기도 부분의 정책시행과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의 거버넌스와 민간협력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생물다양성 인식증진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한다.
- 생물 및 서식지 민간모니터링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한다.
-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지원한다.
- 생물다양성학교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의 성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다.
- 경기도의 생물 및 서식지 조사결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다.

7-3. 경기도민 및 시민단체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참가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의 생물 및 서식지 민간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나만의(단체만의) 특별한 생물다양성 관심 분야를 갖는다.
- 거주환경 주변의 생물서식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한다.
- 어린이·청소년에게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이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7-4. 전문가 및 연구기관

- 생물다양성 정책을 위한 전문적인 대안 마련 및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 행정과 의제, 시민단체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 생물다양성 성과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 생물다양성 분야별 지역 전문가풀을 구축한다.
-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7-5. 학교

- 생물다양성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 교사들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7-6. 기초의제

- 광역의제, 일반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생물다양성 과제 및 사업을 발굴한다.
- 현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킨다.
- 일반시민을 위한 생물다양성학교를 운영한다.
- 지역의 생물 및 서식지 민간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한다.
- 지역의 공무원, 시민단체 및 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생물다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8. 모니터링

8-1. 모니터링 주체 및 방법

생물다양성 의제와 관련한 정책 및 전문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푸른경기21 생물다양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 전문가, 기초의제들과 협력하여 실시한다. 정책은 행정의 협조를 받아 계획, 예산, 실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조사결과는 공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한다. 다양한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식증진활동에 대한 자료는 기초의제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수집하고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분석한다.

특히 의제 실천 초기에는, 경기도가 생물다양성 자료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가조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추후 성과 평가와 지표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2. 모니터링 범위 및 주기

생물다양성 정책이 도입초기이므로 많은 시행착오와 실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과 현장의 인식증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의제기간 중 최소 2회를 실시하는데 가능하면 교대로 조사한다. 한편 생물 및 서식지 조사자료에 대한 수집은 매년 하여 위원회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 자료들을 의제 최종연도인 2015년에 모두 취합하고 평가하여 총괄 보고서를 작성한다.

8-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모니터링의 결과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보고서로 발간한다. 내용적으로는 결과가 푸른경기21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실천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모니터링 결과는 시기나 보고서 발간, 자료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제안 방법도 일방적인 것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의제 작성 Flow-Chart 〉

기간(월)	주요내용	세부내용
2~3월	위원회 및 임원 구성	“ 생물다양성 세미나 및 위원회 총괄워크숍 ” -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습 및 의제재작성 위원회 구성
4~5월	생물다양성 학습 통한 의제안 도출	“ 1차 소위원회 재작성 회의 ” - 의제 재작성 일정논의, 세미나 세부계획 논의
5월		“ 경기도 생물다양성 의제발굴 세미나 ” - 생물다양성 주제별 심화학습 - 의제 발굴 전체 토론회
6월		“ “ 의제재작성 워크숍 및 2차 재작성 회의 ” ” - 주요의제 발굴 및 초안 작성 논의
7월초		경기도 생물다양성 현황 검토
7월 말	의제명 선정 및 의제 심화 논의	“ 4차 소위원회 재작성 회의 ” - 주요 지표 및 추진전략논의 - 의제명 선정 : 생물+1 “ 5차 소위원회 재작성 회의 ” - 연도별 실천계획 논의 - 초안 총괄 검토
8월~10월	의제 초안 집필 전체위원 의견 수렴	“ 생물다양성 의제 초안 집필 ” “ 전체 위원 의견 수렴 ”
11월	토론회 진행	“ 생물다양성 의제 작성 대 토론회 ” - 전체위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12월	최종 문안 작성	“ 의제 초안 최종 검토 ” “ 생물다양성 의제 최종 작성 ”

※ 생물다양성의제 재작성 위원회

위원장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위원	강성주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상임이사
	김미옥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꽃마리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이미정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자문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송수경	경기도 환경정책과
	제종길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기후행동21의제

“기후 회복을 위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

1. 의제 작성 배경

1-1. 의제 작성 배경

저탄소 생활양식 전환과 기후행동파트너십 활성화

1) 상황 - 기후변화의 심각성

지구환경위기는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여름 모스크바는 이상 고온으로 화재가 빈발했고 흑서로 많은 피해자를 냈고, 방글라데시는 홍수로 국토의 1/5이 침수되었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2011년에는 태국의 수도 방콕이 홍수로 침수되었다. 한반도가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대가 바뀌면서 게릴라성 폭우 흑한과 흑서 등 불안정한 기후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생태계의 변화는 모든 인간의 일상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지구 곳곳에서 위협과 재앙이 닥칠 수 있다.

UN IPCC(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회, 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과학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의 원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인간의 인위적인 사회경제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채취와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의 단계로 이어지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으로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 급격히 늘어난 생산력은 새로운 도시산업문명의 창출로 이어졌고 진보로 이해되기도 했다. 인간 생활은 더욱 풍요해지고 편리해 졌다. 도시생활을 하는 인구가 급증했다. 도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효율성이 높고 하지만 생태 순환적이기 어려운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 주변부로부터 막대한 자원과 식량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존립할 수 있다. 집중된 주거와 활동 산업 공간은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약탈적 자원 채취와 저임금 노동에 기초한 선진국 주도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는 지구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지구평화를 위협한다는 지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 쓰나미와 함께 시작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원전을 통한 에너지 확보가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진행 중인 원전사고는 수만명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수백조원(일본 정부추산 20조원)의 피해복구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다와 대기를 통한 방사능 물질의 확산이 주변 해역과 이웃 국가들에 위험부담을 증대시키고 있고 한중일 3국의 동북아시아는 원전과밀지역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원전은 우라늄채취에서 수송 원전 건설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사용 후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막대한 재정과 불안울 수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전폐쇄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지원금을 매개로 가난한 지역에 위험한 원전을 지어 부담을 전가시키고 위험한 노동에 동원하는 방식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사회 통합에도 저해 된다.

2) 배경 :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대응 및 현실 적응 방안 필요

지난 세기 동안 무분별한 경제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개발과 보존의 압력을 함께 받고 있는 경기도는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기후행동21 의제는 기후행동 시민과 커뮤니티의 조직, 주요 영역별 파트너십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실천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사회 경제 산업 등 제 분야에서 각종 정책과 방안들이 실천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확대, 그린 빌딩 건축인증제, 패시브하우스 건설, 친환경대중교통 수단의 확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자전거타기확대, 소각과 매립이 아닌 3R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제로 도시만들기, 도시숲 조성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10월 개최된 환경협약도시 광주정상회의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원전 폐쇄를 표방하거나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선포하기도 한다. 위험하고 고비용 비민주적 원전의존적인 에너지 공급체계가 아니라 사용억제와 에너지효율의 높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대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탈원전의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도시산업 문명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는 성숙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전자수적 범위에서 진행중인 기회변화가 초래할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적,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기후행동21 의제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1-2. 의제 작성 과정

< 기후행동21의제 작성 Flow-Chart >

기간(월)	주요내용	세부내용
2월	위원회 및 임원진 구성	기후행동21위원회 위원 상건례 및 임원진 구성 ▼
3월	기후행동21의제작성 방향 설정	1차 워크숍 : 지난의제 성과 공유 1차 실행위원회 회의 : 의제 작성 방법 논의 ▼
4월	의제 실천 기획 사업 방향 토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쓰레기 제로 도시』 등 기획사업 분야 논의 ▼
5월	지난 의제 성과 지속에 관한 방안 협의	폐기물, 에너지, 녹색소비의 기존 의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 도출 ▼
6월	의제 재작성 관한 방안 협의	전문가에 의한 집필 또는 의제 위원들 중심의 집필진 구성 등에 관련 협의 ▼
7월 초	의제 재작성 관한 방안 협의	주요지표 및 추진전략 내용 브레인스토밍 기획사업 추진 ▼
7월 말	기획사업 기획	기획사업 기획 ▼
8월	의제 재작성 회의	의제명, 비전 등 구체적 토의 ▼

9월 초	기획사업 추진	쓰레기 제로 학교 기획사업 추진
		▼
9월 말	의제재작성 회의	발제자 선정 및 의제 방향 집중 점검
11월		- 1차 초안 검토 및 수정. - 1차 초안 내용 모니터링 방법 논의
		▼
11월 말	전체위원 보고	푸른경기21 총괄워크샵 최종안 보고
		▼
12월 초	전체 위원 대상 자문	전체 위원 자문 요청 및 최종 점검
		▼
12월 말	마무리	최종 정리

2. 의제명

기후 회복을 위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

2-1. 비전

- 저탄소 생활양식 전환과 기후행동파트너십 활성화
- 경기도 평균기온 2도 이상 상승 억제
- 녹색 인프라 구축 (자원, 에너지, 교통)

3. 의제목표

목표1 :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 양성

목표2 :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

- 개인이나 가정의 저탄소생활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자발적 공동노력과 기반구축

목표3 :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

- 기후행동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인다.

4. 의제현황

4-1.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 양성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학습, 현장 실습과 방문을 통해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러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 기업, 시민사회, 학교를 포함한 전문교육 기관 등은 선정(good governance)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기의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기도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홍수와 가뭄, 폭한과 혹서 등의 기상이변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산물 수확 감소와 공산품 생산 중단 사태는 특정 국가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노력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실천하는 시민, 즉 기후 행동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경기도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실천하려는 시민들은 아직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최근 31개의 시·군 중 다행이도 일부가 녹색 도시나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CSO³⁾), 기업, 학교와 전문연구단체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상 환경 교육과 학습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의 지방의제 추진 기구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일반 시민 대상의 기후변화 대응

3) 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약자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과도 같이 쓰이는 개념이며, 유럽 및 서구사회에서는 NGO와 같이 CSO도 병행해서 쓰는 경향이 있음.

교육을 포함하여 주제별, 대상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교육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정부의 환경교육 진흥법에 따라 환경체험교육을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신규로 청소년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 실적

구 분	2009	2010	2011	비 고
지원액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지원단체수	10개	10개	10개	

※ 참가단체 (단체당 500 만원 지원): 수원환경운동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용인환경정의, 에버그린21(안산), 구리시미래환경을생각하는모임, 시흥YMCA, 이천YMCA,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2)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 지원금 : 21,500,000원 (국비: 15,000,000원/도비: 6,500,000원)
- 교육 참가인원: 11,460명

(3) 그린홈컨설팅 사업 실적

구 분	2010	2011	비 고
지원액	12,600만원	12,600만원	
방문상담건수	212건	757건	
그린콜건수	200여건	300여건	
그린홈컨설팅 수	101명	110명	

4-2.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

개인과 가정이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과 실천을 용이하게 해 주는 각 자치공동체 사회의 유, 무형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을 목표로 그러한 기반의 구축에 대한 성과를 지표화한다.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금년도부터 녹색생활 실천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이 노력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 지역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 구매하기는 그러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점포가 있어야만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출퇴근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녹색생활지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치공동체 차원의 기반마련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커뮤니티 만들기”의 주제가 된다. 녹색생활지표는 크게 녹색생활 실천지표와 녹색생활 성과지표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녹색생활 실천지표는 녹색가정, 녹색교통, 녹색커뮤니티 등 3대 분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녹색가정 분야는 다시 친환경상품구매 분야 7개 항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4개 내지 5개 항목, 자원절약 및 재활용확대 3개 항목,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량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녹색교통 분야는 자동차의 경제적 이용습관 정착 6개 항목,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녹색커뮤니티 분야는 환경이슈에 대한 인식 3개 항목, 녹색생활 관련 제도 바로알기 4개 항목, 직장에서 녹색생활 실천하기 4개 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둘째 녹색생활 성과지표도 녹색가정, 녹색교통 및 녹색 커뮤니티의 3대 분야로 구분된다. 녹색가정 분야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가 친환경상품 구매 인프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 분야는 동일하다. 단지 세부항목들이 객관적 정량적인 수치들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녹색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차의 경제적 이용습관 정착과 친환경교통수단 이용이 있는데, 그 항목으로 “자가용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있다. 이것을 주민 1인당 1일 평균 자가용 이용 거리로 하면, 커뮤니티 만들기 지표로 될 수 있다. 카풀을 하여 4명이 자가용을 이용하면, 주행거리를 네 사람으로 나누어

각 사람이 1/4로 될 수 있는데, 이는 커뮤니티 만들기 노력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녹색커뮤니티 지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비율 같은 지표항목인데 이는 거의 커뮤니티 만들기 지표로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의식이나 개인의 노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공동체 차원에서의 기반 구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소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4-3.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 시민, 기업 등 민·관·주체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각자의 능력과 책임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뿐 아니라 시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와 달리 시민 생활양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커뮤니티 단위의 다양한 저탄소 실천 활동을 조직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시민참여 사업 등이 필요하며, 이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및 시군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및 녹색실천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파트너십 활동이다. 거버넌스적 기구의 특성상 지방의제21은 기후보호 활동에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뿐 아니라 과정적으로 인식 증진 및 학습 효과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절약, 녹색구매, 지역 먹거리,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기존의 영역별 활동 및 주체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정부 주도로 시작되긴 하였지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 파트너십 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2008년 10월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공공,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와 지자체와 지방의제 21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경기도 그린스타트는

'09년 3월 출범하여 경기도청 및 시군 소등행사, 그린캠퍼스 운동 등 홍보/캠페인 사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도자 과정, 경기도 기후학교, 기후보호도시 국제포럼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초 단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도 그린리더 양성 등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부문별 파트너십으로는 대학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캠퍼스협의회,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파트너십인 Stop CO2 멘터링, 경기도 도시농업 네트워크(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전국귀농운동본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이들 파트너십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 파트너십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파트너십은 지방의제21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다른 기구나 단체에 비해 가장 경쟁력을 갖춘 활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후행동 파트너십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여 파트너십 활동을 측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 주요 지표

5-1. 목표1 :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 양성

5-1-1. 주요 지표 :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초의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

구 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비고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평가를 통해 새로운 평가 지표 마련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른 현황 조사와 방법론 개발	기존 대비 교육과정 개설, 예산 증액, 수강생 수 + 5%	기존 대비 + 10%	기존 대비 + 15%	기존 대비 + 20%	

- 그린홈 컨설팅 건수

연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목표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5-1-2. 보조 지표

- ① 연도별 지자체(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강좌 수와 참가자 수
- ② 연도별 의제 추진기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 수
- ③ 연도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과 수강생 실태 파악
- ④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 환경관련 교육 시간 파악과 연도별 증감 실태 파악
- ⑤ 연도별 기후변화기초시설(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방문객 수/예산지원 현황 파악
- ⑥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CSO가 실시되고 있는 환경 교육 실태와 예산 증감 파악
- ⑦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현황 파악
- ⑧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 실적 파악

5-2. 목표2 :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

5-2-1. 주요 지표 : 각 기초 단체별 기후행동 커뮤니티 수

- 기후행동 커뮤니티의 정의 : 기초 자치단체 아래의 자치공동체 단위를 말하며, 읍/면/동/리/통/반 등과 같은 최소 행정단위를 포함하여 그 중에서도 독립적 자율적인 에너지/환경관리가 가능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단체, 초·중·등 및 대학교, 독립적 건물과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기관, 기타 에너지/환경관리의 관점에서 자율적 독립적 관리공간을 보유한 영리/비영리 사업장 모두를 기후행동 커뮤니티로 정의

연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목표	-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

5-2-2. 보조 지표

- ① 인구 1인당 1일 자가용 이용 이동거리 (km/인.일, 다인탑승의 경우 나눔)
- ② 기초자치단체별 전체 차도 중 자전거 이용 가능 도로(인도 및 차도 포함)의 비율.
- ③ 사업장,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카풀 제도를 조직적으로 도입한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비율
- ④ 고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영리법인의 수
- ⑤ 기후행동 커뮤니티 우수 사례 발굴 수
- ⑥ 그린캠퍼스협의회 가입대학의 수
- ⑦ 도시농업네트워크 활동 단체의 수

5-3. 목표3 :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

5-3-1. 주요 지표 : 5개 부문별 파트너십 구성 및 활동 실적

- 경기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부문으로 에너지, 녹색 소비, 쓰레기 제로 및 자원순환, 녹색교통, 교육·홍보를 선정하여 부문별 파트너십을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활성화한다.

연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목표	-	파트너십 조사 및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기준 대비 파트너십 활동 +20%	기준대비 파트너십 활동 +40%	기준대비 파트너십 활동 +60%	기준대비 파트너십 활동 +80%

5-3-2. 보조 지표

- 의제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부문별 파트너십 활동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① 에너지 파트너십

(1) 그린홈 컨설팅 파트너십 수

- '09년부터 가정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에 의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가정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10년 경기도는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후행동센터 주관하에 그린홈건설턴트 양성 및 그린홈콜센터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가정 에너지 진단 및 주택 개량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린홈 컨설팅을 위한 관련 기구와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함.
- 기존의 그린홈 컨설팅 사업을 시군 단위로 확산하고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 참여자를 다양화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함.

② 시민발전소

-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등의 도입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나 환경훼손 등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지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로 공공 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출자 시민발전소, 에스코 형태의 투자 모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모델 등 다양한 재원조달 모델이 필요함.
-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지역주도, 주민참여형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으로 거버넌스 기반이 우수한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흥시는 (주)시흥시민 햇빛발전을 설립하고 RPS 시범사업과 연계한 시흥시민 햇빛발전소를 추진 중임.

③ 녹색구매지원센터 수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 교육, 녹색매장 모니터링,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반이 마련됨.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소비의 확산을 위한 민관파트너십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④ 쓰레기 제로 선언 도시 수

-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여 모든 폐기물을 100% 순환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

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 구축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선언하도록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함.

⑤ 생활형 공영자전거 지원센터 수

-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별로 행정, 전문가, 시민이 함께 생활형 공영자전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순회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무료수리, 공영자전거 및 개인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을 위한 인프라로 지원센터를 설치함.

⑥ 기후변화 교육센터 수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MOU) ‘학교 기후변화대응 교육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과 협조하여 기후변화 교육센터인 ‘에코그린 등대’를 설치함.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에너지 파트너십 - 그린홈 컨설팅 파트너십 - 시민발전소	-	5	10	15	20	30
녹색구매지원센터	-	5	10	15	20	30
쓰레기 제로 선언 도시	-	5	10	15	20	31
공영자전거 지원센터	-	5	10	15	20	30
기후변화 교육센터 수	-	5	10	15	20	30

6. 추진 전략

6-1.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 양성

- ① 지자체, 의제, 시민단체(CSO)의 시민환경교육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
 - 예산규모 파악
 - 단체장의 의지

- 활동가들의 역량
- 교육 과정 종류와 수
- 수강생들의 만족도
- 수강생들의 관심과 실천의지

② 각종환경시설 실태와 방문자 수

- 환경시설 : 폐기물 처리장(매립지와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재생에너지 단지 (풍력, 태양광, 조력, 지열 등), 생태건물과 주거단지, 교통시설(자전거, car sharing, 전기자동차 등)
- 교육과 홍보 종류 : 단순 홍보와 시민 참여형 홍보, 교육자의 종류(교육 받은 주민/홍보 전문 직원/홍보요원 전무)

③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 예산 확보 방안
- 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실천의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교육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타 단체와 영역 사이의 연계와 협력 교육 방안 마련
- 상호 연계 교육 방안 모색
- 교육의 다양화와 질 담보를 위한 방안 마련

6-2.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

- 단체의 범주별 모범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행동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인정 기준안 마련
- 기후행동 커뮤니티 인증 및 문패 부착
- 경기도 기후행동 커뮤니티 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

6-3.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

- ① 부문별 파트너십 실태를 조사하고 역량 평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 경기도내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형태와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활동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파트너십 역량을 측정한다.

- ② 파트너십 활동을 비교·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경기도 지역별로 파트너십 역량과 인프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파트너십 활동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하여 파트너십이 취약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파트너십 활동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③ 부문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기후행동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트너십 참여 주체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적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분야별 파트너십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이렇게 합시다

7-1.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 양성

- ① 지방정부
 -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을 포함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노력

-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체계적 실시
- 교육 주체들과의 긴밀한 대화의 장 마련
- 기초자치단체가 기후변화(환경) 체험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② CSO

- 환경(기후변화) 교육이 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 인지
- 다양한 수준의 교육 실시(초보, 중간, 고급, 환경전문가 양성 등) 위해 노력
- 차별적인 단계별 교육 내용 다양화
- 교육 독점을 주장하지 말고 타 단체와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과 분업 추구
- CSO 사이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차별적, 특성화 교육 실시 노력
- CSO 통합적 교육 과정 실시로 이수 단계를 상호 인정하고 상호 호환되는 수료 증서 발부 노력

③ 기업

-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배출 최소화, 탄소발자국 도입 노력,
- 지역으로부터 사랑 받는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지역사회와의 공헌, 일자리 창출, 사원 복지 등
-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실시
- 지역 CSO와 적극 협조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시 교육과 견학을 위한 작업장 개방,

④ 전문(연구)기관

- CSO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
- 사회와 격리되어 자기 과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환경과 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 필요시 전문 인력 교육장 파견용인
-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 지원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포럼과 같은 형태의 전문가 network 구축
- 필요시 교육을 위해 기자재 임대

7-2.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

7-2-1. 행정

- 사업장, 단체, 마을 등 제반 공동체의 집단적 커뮤니티 기후행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각 커뮤니티 내 카풀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 자전거 이용 가능 도로 비율 확대

7-2-2. 사업장

-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 참여
- 구성원 민주적 참여에 의한 행동규약(가이드라인) 제정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체계 운영

7-2-3. 시민

-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NGO단체에 자발적 가입
- 마을, 공동주택 단위로 커뮤니티 만들기 참여

7-3.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

7-3-1. 행정

- 부문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 파트너십 활동과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저탄소 녹색 커뮤니티 조성 및 파트너십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파트너십 거점인 분야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민간 참여를 장려한다.

7-3-2. 기업

- 사회적 공헌을 통해 부문별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에너지 절약, 교통수요관리 등에 동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저탄소 녹색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협력한다.

7-3-3. 시민(단체)

- 에너지 절약, 녹색교통 이용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제품의 구매 결정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녹색소비를 적극 실천한다.
- 기후행동 파트너십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기후행동 파트너십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한다.

7-3-4. 학교

- 기후변화 문제를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초·중·고·대학교) 단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7-3-5. 연구기관(전문가)

- 기후행동 파트너십 활동 평가 방법을 개발한다.
- 부문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활성화 전략을 연구한다.
- 기후행동 파트너십에 필요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부문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활동을 지원한다.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녹색생태환경제의제

| 녹색사회경제의제 목차 |

항목(목차)	내 용
1. 의제작성배경	1-1. 로컬푸드 1-2. 사회적경제 1-3. 녹색사회경제 의제작성과정
2. 의제명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3. 의제목표	3-1. 비전 :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지역순환형 대안경제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3-2. 목표 3-2-1. 농업(農)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3-2-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4. 의제현황	4-1. 로컬푸드 4-1-1. 경기도 농업 일반현황 4-1-2. 경기도 농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비교 4-1-3. 학교 급식 등 로컬푸드 정책 부문 4-2. 사회적경제 4-2-1.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4-2-2.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현황 4-2-3.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현황 4-2-4. 경기도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우선 구매 지원 실적
5. 주요지표	목표 1.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지표 1. 경기도 로컬푸드 지수 보조지표 5-1. 5-1-1. 지역농산물의 지역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5-1-2. 경기도 도시농업의 기반을 확대한다. 5-1-3. 경기도 식생활교육을 확대한다. 목표 2.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표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수 보조지표 5-2. 5-2-1.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를 높인다. 5-2-2. 사회적기업 성장지수를 높인다. 5-2-3. 사회경제조직 지속가능지수를 높인다.
6. 추진전략	6-1. 로컬푸드 6-1-1. 지역먹을거리체계를 구축한다. 6-1-2.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 6-1-3.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6-2. 사회적경제 6-2-1.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6-2-2.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한다. 6-2-3.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한다.
7. 이렇게 합시다	7-1. 로컬푸드 7-2. 사회적경제 7-3. 광역의제 및 기초(시군)의제
8.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8-1. 모니터링 주체 및 방법 8-2. 모니터링 범위 및 주기 8-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1. 의제 작성 배경

제2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2010 미래위원회에서는 제3차 「경기의제21」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미래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역적 실천이 강조되는 환경 속에서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이 민선5기의 화두로 대두되며 지방의제21의 거버넌스 측면이 긍정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3차 「경기의제21」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추진목표로 하여 기존의 13개 분야 의제를 5개로 통합하였다. 본 의제는 자원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빈곤극복과 경제활력 제공, 생산 및 소비전환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하여 녹색사회경제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집단을 사회라고 한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스템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위,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적인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경기도라는 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업, 도시, 농촌이라는 독립된 시스템 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보다 큰 틀에서 독립된 시스템과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는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되는 공동경제로 생산경제와 소비경제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각 경제단위 사이의 사회성 및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제상태』를 말한다.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가치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로 생태계보전,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농촌 등의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⁴⁾ 경기도의 녹색사회경제는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각각 논의되고 고민하였던 의제를 각각의 의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주제인 지역순환과 공동체, 소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4)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1-1. 로컬푸드

농업은 본래 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 안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재생산을 반복하여 왔기 때문에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명산업으로 지속되어 왔다.⁵⁾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농업은 지속적으로 도시와 분리되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은 농촌이라는 공간적 한계 속에서 성장해왔으며, 농촌은 도시의 식량생산기지로 변모했다. 농업이 농촌이라는 공간적 한계 속에 갇히게 되면서 농업은 본래 가지고 있던 물질순환시스템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생산된 많은 물질이 도시로 흘러가기만 하고 되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의 극심한 환경오염문제와 농업이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의존토록 만들었다. 또한 식품공급 체계가 세계화되면서(Global Food) 식품 이동거리 연장에 따른 수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역먹을거리체계인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분리된 공간 속에서 작은 단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식품 수송거리 단축, 포장 최소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 억제에 기여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복원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먹을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과는 달리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농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식량자급율도 높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자급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5~26%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이런 도시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2.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 개념⁶⁾의 출발은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피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 데 있으며, 사회적기업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니⁷⁾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5) 자료출처 : 경기의제21 재작성 총괄보고서, 188p,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6)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위한 시론 - 신명호(사회적경제연구센터소장)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 표현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생산 뿐 아니라 소비, 교환, 분배 등 일체의 경제 활동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을 총칭한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와 대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모델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며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협동경제이며 모든 생명을 존중 그 자체로 존중하는 녹색경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외에도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경제 활동조직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저조한 고용율과 고용 없는 성장, 질 낮은 일자리는 사회양극화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보육, 요양,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경기도는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630개, 13,230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으로 시작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관중심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졌다. 더구나 사회적기업은 성장지향적 경영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수익성, 공익성, 윤리성, 친환경실천기업으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는 경제조직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 경제 구조는 사회관계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자연자원의 남용으로 생태계는 황폐화되어졌으며 계층간의 격차, 세대간의 격차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생태계를 복구하고 상부상조의 협동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7)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년 10월 25일, 오스트리아 - 1964년 4월 23일, 캐나다)는 전통적인 경제 사조에 반대한, 헝가리 지식인으로 서구의 시장체계를 분석한 그의 책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으로 유명하다.

1-3. 의제 작성 과정

3차 경기의제 재작성 과정 중 녹색사회경제위원회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는 소통과 협력이다. 녹색사회경제의제의 작성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농업과 사회적기업 영역을 어떻게 녹색사회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의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제재작성소위원들은 두 영역을 무리하게 통합하기보다는 워크숍, 녹색사회경제의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두 영역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일단 녹색사회경제라는 틀 안에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의제를 작성해 보기로 했다. 향후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녹색사회경제의제를 가져가야 할지 다시 고민해 보기로 했다. 또한 특정인이 녹색사회경제의제를 작성하기 보다는 소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하여 역할분담하고,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각 계 전문가와 시군의제 사무국의 의견을 받는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녹색사회경제의제를 완성하였다. 10달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된 녹색사회경제의제의 작성 과정은 아래와 같다.

〈 녹색사회경제의제 작성 Flow-Chart 〉

기간(월)	주요내용	세부내용
2월	위원회 및 임원진 구성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위원 상견례 및 임원진 구성 ▼
4월 초	녹색사회경제의제작성 세부 추진 계획 수립	1차 회의 : 녹색사회경제의제 작성 추진 세부계획 및 의제재작성 소위 구성 완료 ▼
4월 말	목표, 비전, 전략, 과제, 지표 등 기본 골격 설정	전체위원 워크숍 및 2차 회의 : 녹색사회경제의제 목표, 비전, 전략, 과제, 지표(안) 등 세부항목 도출 ▼
5월 중	의제재작성 3차 ~ 9차 회의	1차 자료수집 : 전략 과제 지표 추진전략 세분화 및 의제재작성 소위 위원 지표 설정 관련 자료 수집 역할분담 ▼
6월 초		추가 세부자료 수집 : 의제작성배경 및 현황 작성자료 수집 역할분담, 의제명 작성 방법 논의 ▼

7월 중	의제재작성 3차 ~ 9차 회의	주요지표 및 추진전략 내용 집중 점검
7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작성 배경 및 현황 취합 - 역할 분담된 집필 내용 논의 및 수정 - 주요지표 및 추진전략 수정 및 확정 - 지표지수 산출방법 논의 - 이렇게 합시다 집필방법 논의
7월 ~ 8월		녹색사회경제의제 초안 1차 집필 완료
8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초안 검토 및 수정. - 1차 초안 내용 모니터링 방법 논의
8월		2차 초안 집필 완료
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초안 검토 및 수정, - 재작성 의제 전체위원회의 보고 세부내용 논의
9월 초	의견수렴 10차 ~ 11차 회의, 의제재작성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위원회의 녹색사회경제 위원 의견 수렴 - 의제명 “잘먹고 잘살자 다함께(안)” 도출
10월		전문가 및 31개 기초의제 사무국 재작성의제 내용 설문조사
11월 초		녹색사회경제의제 토론회
11월 중	최종수정 및 집필 1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내용 최종 수정 및 집필 - 의제명: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확정
11월 말	전체위원 보고	푸른경기21 총괄워크샵 최종안 보고 및 전체 의견수렴
12월	마무리	녹색사회경제의제 최종 정리

2. 의제명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3. 의제목표

3-1. 비전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지역순환형 대안경제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3-2. 목표

3-2-1. 농업(農)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의 순환체계와 지역 외에서의 교류체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농업은 저비용으로 경기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게 해주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다.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농업 기반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3-2-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협동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자치 경제시스템이다.

4. 의제현황

4-1. 로컬푸드

4-1-1. 경기도 농업 일반현황

경기도 농가수는 2009년 기준 137,341호로 2004년 142,391호에 비해 3.5%가 감소했다. <표1>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농가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1,727,418명의 3.67%인 430,743명에 불과하며 농가수도 전체세대수 4,359,467호의 3.15%인 137,341호에 머무르고 있다.

<표1> 경기도 총인구대비 농가 및 농가인구 ⁸⁾

(단위 : 명, 호)

시·군별	총인구(A)	세대수	농가인구(B)	농가수	비고(B/A)
2004	10,628,842	3,748,325	476,101	142,391	4.48(%)
2005	10,853,157	3,910,886	456,515	141,503	4.21(%)
2006	11,106,831	4,068,786	437,386	135,853	3.94(%)
2007	11,340,241	4,183,926	440,533	137,373	3.89(%)
2008	11,549,091	4,284,475	434,244	137,670	3.76(%)
2009	11,727,418	4,359,467	430,743	137,341	3.67(%)
수 원 시	1,098,449	406,565	7,559	2,079	0.69(%)
성 남 시	979,035	375,386	3,512	1,039	0.36(%)
안 양 시	623,511	226,022	2,700	810	0.43(%)
부 천 시	884,976	322,246	2,548	786	0.29(%)
광 명 시	318,154	116,989	1,497	465	0.47(%)
평택 시	421,231	158,628	36,654	11,123	8.70(%)
안 산 시	739,493	273,075	6,125	2,012	0.83(%)
과 천 시	72,382	26,203	1,885	566	2.60(%)
오 산 시	163,498	62,410	4,012	1,182	2.45(%)
시 흥 시	413,749	154,703	5,707	1,924	1.38(%)
군 포 시	280,801	100,740	1,216	345	0.43(%)
의 왕 시	142,161	51,636	2,615	750	1.84(%)
하 남 시	150,345	58,078	6,679	1,735	4.44(%)
용 인 시	854,054	307,258	27,645	8,508	3.24(%)
이 천 시	201,285	75,278	27,011	9,238	13.41(%)

8) 자료출처 : 경기도 통계연보 (2010)

안 성 시	177,007	68,097	29,627	9,516	16.74(%)
김 포 시	237,566	85,694	20,410	6,179	8.59(%)
화 성 시	515,162	184,790	43,495	13,787	8.44(%)
광 주 시	247,957	91,154	15,245	4,894	6.15(%)
여 주 군	110,277	43,054	25,764	8,809	23.36(%)
양 평 군	92,529	39,962	25,315	8,822	27.36(%)
의정부시	435,401	162,344	3,887	1,071	0.89(%)
동두천시	95,779	37,832	1,962	580	2.05(%)
고 양 시	951,001	353,270	19,328	6,055	2.03(%)
구 리 시	197,132	73,642	1,823	524	0.92(%)
남양주시	530,699	195,218	17,205	5,110	3.24(%)
파 주 시	331,504	130,118	26,480	8,329	7.99(%)
양 주 시	189,492	69,725	18,701	5,591	9.87(%)
포 천 시	168,246	65,488	21,836	7,425	12.979(%)
연 천 군	46,002	19,461	10,877	4,079	23.64(%)
가 평 군	58,540	24,401	11,423	4,008	19.51(%)

경기도의 경지면적은 2009년 기준 총면적 10,187,585,815㎡ 대비 2,369,141,192㎡로 23.3%이다. <표2>를 보면 2004년 24.2%에서 매년 0.2%씩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지면적비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안양시로 5.2%이며, 가장 많은 시군은 평택시로 46.5%이다. 평택시는 타 시·군에 비해 평야지대가 넓어 경지면적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2> 경기도 경지면적 9)

(단위 : ㎡)

시·군	총면적(A)	경지면적(B)*	비율(B/A)	비고
2004	10,183,831,554	2,465,511,680	24.2(%)	
2005	10,182,513,880	2,447,858,163	24.0(%)	
2006	10,183,339,446	2,428,643,582	23.8(%)	
2007	10,183,893,228	2,407,969,827	23.6(%)	
2008	10,185,606,794	2,387,857,458	23.4(%)	
2009	10,187,586,815	2,369,141,192	23.3(%)	
수 원 시	121,006,257	26,306,845	21.7(%)	
성 남 시	141,708,098	16,216,348	11.4(%)	

9) 자료출처 : 경기도 통계연보(2010), 경지면적 *(전, 답, 과수원면적의 합)

안양시	58,458,643	3,028,946	5.2(%)	
부천시	53,436,931	8,261,812	15.5(%)	
광명시	38,503,654	9,193,765	23.9(%)	
평택시	455,180,304	211,679,364	46.5(%)	
안산시	149,067,410	25,806,354	17.3(%)	
과천시	35,857,770	5,118,461	14.3(%)	
오산시	42,770,397	14,214,160	33.2(%)	
시흥시	135,008,188	37,916,638	28.1(%)	
군포시	36,361,060	5,739,915	15.8(%)	
의왕시	54,010,853	8,646,446	16.0(%)	
하남시	93,040,998	14,665,400	15.8(%)	
용인시	591,357,119	121,144,731	20.5(%)	
이천시	461,294,710	183,480,886	39.8(%)	
안성시	553,477,578	171,135,245	30.9(%)	
김포시	276,549,846	106,809,298	38.6(%)	
화성시	689,227,185	248,546,773	36.1(%)	
광주시	430,967,711	59,690,774	13.9(%)	
여주군	607,722,943	172,406,558	28.4(%)	
양평군	877,754,604	132,329,410	15.1(%)	
의정부시	81,543,530	10,735,355	13.2(%)	
동두천시	95,658,330	10,618,919	11.1(%)	
고양시	267,436,948	70,525,117	26.4(%)	
구리시	33,301,915	6,642,865	19.9(%)	
남양주시	458,054,757	69,444,919	15.2(%)	
파주시	672,425,017	201,335,075	29.9(%)	
양주시	310,224,187	65,926,781	21.3(%)	
포천시	826,475,900	143,019,740	17.3(%)	
연천군	696,216,347	135,015,184	19.4(%)	
가평군	843,487,626	73,539,109	8.7(%)	

4-1-2. 경기도 농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비교

〈표3〉은 전국기준 1인당 농산물 소비량을 근거로 경기도의 전체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이다. 쌀의 경우 소비량 343,526톤보다 158,413톤(46.1%) 많은 501,939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채소류의 경우는 배추 170.3%, 무 218.4%를 포함해서 전체 소비량의 90.9%를 생산하고 있다. 배, 포도, 사과 등 과실류는 59.6%를 생산하고 있어 소비량과 생산량의 불균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소비량의 2배

에서 4배까지 생산되고 있어 경기도의 축산업분야의 비중이 경종이나 원예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경기도 주요 농산물의 생산-소비 비교 ¹⁰⁾

구분	1인당소비량 (전국기준kg/인)	경기도소비량 (톤)	경기도생산량 (톤)	생산량/소비량 (%)
쌀	78.8	343,526	501,939	146.1
채소류	154.0	671,358	610,637	90.9
- 배추	37.4	163,044	277,599	170.3
- 무	20.1	87,625	191,405	218.4
과실류	62.2	271,158	161,492	59.6
- 배	8.5	37,055	88,999	240.2
- 사과	8.3	36,183	4,868	13.5
- 포도	7.1	30,952	49,150	158.8
쇠고기	6.8	29,644	60,173	202.9
돼지고기	18.1	78,906	320,169	405.8
닭고기	8.6	37,491	90,837	242.3

4-1-3.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정책 부문

경기도에서 로컬푸드정책 추진에 대한 현황은 일부 학교급식에 활용되는 농산물 이외에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로컬푸드지원조례의 경우 전북 완주군과 김제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 청송군에서 제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평택시에서만 유일하게 로컬푸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로컬푸드정책의 경우에도 현재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활용한 양평의 로컬푸드, 평택시의 평생평소사업처럼 부분적인 정책추진설계는 존재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역식량시스템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급식 부문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가 비교적 폭넓게 제정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경기 지역 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급식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학교급식을

10) 자료출처 : 2010년 경기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자체 작성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560개교, 2012년 1,120개교, 2013년 1,679개교, 2014년 2,076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48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광주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식재료 중 경기도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자급률이 가장 높은 양평의 경우에도 2010년도 지역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 농산물의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의 30%를 경기지역에서 생산하였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급식 물류체계

식생활교육지원법은 2009년 하반기부터 발효되었으며, 녹색식생활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전통식품 소비 확산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1년 8월 8일자로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식생활교육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단위 운동조직, 행정기관에서 구성한 민관합동위원회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

4-2. 사회적경제

4-2-1.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¹¹⁾

2011년 6월 정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으로 사회적기업 확산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목	내 용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사회적 기업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금 경로 확충 -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기업 진출 확대 및 우선권 부여 - 지방세 감면, 대상별·분야별·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영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사회적, 재무적 성과 모니터링 강화 -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을 통하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으로 사회적기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사회적기업 운동 전개 - 각 부처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 부여 - 지자체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배정 -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직 역량 강화

4-2-2.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현황

가. 경기도는 거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앞선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전담부서의 설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11) 자료출처 : 2011년 6월9일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중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 경기도 사회적기업육성 조례 제정 및 실행 현황 〉

2011년 5월말 기준

구분	광역	기초	비고
조례	1/1	29/31	
육성위원회구성	1/1	25/31	
장기육성계획수립	1/1	20/31	
전담부서 설치	1/1	6/31	

나. 2010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기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 5만5천개의 사회적기업이 전체 고용의 5%, 전체 GDP의 1.3% 차지하는 정도인 영국에 비하면 아직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고용과 지역경제 기여도는 미비한 수준이며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고용은 경기도 총 고용인구 328만명(통계청 2008년 자료) 대비 0.1%에 불과하다.

〈 경기도 사회적기업 현황 12) 〉

2011년 8월 현황

구분	경기도		전 국		비고
	기업수	종사자수	기업수	종사자수	
계	258개	4,824	1,596	28,467	전국대비 16%
사회적기업	98	2,607	555	15,428	1기업당 29명 고용
예비	160	2,217	1,041	13,039	1기업당 13명 고용

다. 조직 형태별 분류로 볼 때 사회복지법인과 상법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사회적기업의 증가와 상법상 회사 설립의 용이성이 주요한 원인이다.

상법상회사	민법상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비영리단체
104	58	20	40	3	43

12) 자료출처 : 2011년 8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현황보고서

라. 사업 분야별 분류로 보면 교육·컨설팅, 식품 등 일부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다양한 분야로까지 사회적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분야	분류
교육문화(69)	교육컨설팅(43), 문화예술(25), 문화재보존(1)
사회복지(32)	보건(5), 가사보육(7), 간병·돌봄(20)
환경위생(52)	청소·경비용역(39), 녹색(13)
제조(92)	식품(47), 물품(37), 사무용품(8)
기타(13)	기타(13)

마.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지역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 주민 주도의 경제 자치 활동이며 마을 단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경제조직이다.

〈 경기도 마을기업 현황 13) 〉

2011년 7월말 기준

구분	경기도	전국	비고
기관수	98개	516	전국대비 19%

※ 참고. 마을 기업 유형 및 현황

-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체 사업 51개 : 수원 행궁솜씨, 평택 민들레옥토 등
- 친환경·녹색 에너지형 공동체사업 19개 : 수원 일하는여성회 부설 신나는 가게, 부천 아름다운강산
-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 28개 : 여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 푸른어린이도서관

* 경기도외 지역 모범 사례

- 교육문화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산청 안솔기마을
- 도시개발 속에 지역공동체와 문화정체성을 추구하는 부산 대천마을

13) 자료출처 : 2011년 8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현황 보고서 및 마을기업 홈페이지

-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대전 한발레츠

4-2-3. 경기도 사회적기업네트워크 현황 1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네트워크와 민관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경기도 각 기초자치체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네트워크 및 지원기관 조지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사회적기업네트워크 현황 >

2011년 12월 말 기준

구분	경기도	시·군	비고
사회적기업협의회 (상근인력)	1(1)	5(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상근인력)	2*(10) 2012년 변경예정	5**(15)	노동부 지원기관 포함
업종네트워크(상근인력)	0(0)	0(0)	

4-2-4. 경기도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우선 구매 지원 실적 15)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우선 위탁을 통하여 성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 11조700억, 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 13조8030억의 예산과 비교 시 공공구매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 경기도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우선 구매 지원 실적 >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비고
물품	4,304,265	경기도, 시·군구 실적 합계
용역	5,628,008	
계	9,932,273	

14) 자료출처 : 2011년8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추진 지침, 2011년 8월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지원단 시군지원조직 간담회 자료

* 광역사회적기업지원기관 : 2011년 12월 중순까지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지원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두 곳에서 운영되었으나 2012년 1월 광역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예정

** 기초사회적기업지원센터 :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추진 중 : 고양, 용인, 안산, 안양, 평택시, 화성, 파주, 김포, 오산)

15) 자료출처 : 2011년 8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현황 보고서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총매출	149,682,353	149,459,055	
총 영업 이익	45,434,997	2,497,845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	290,755	
총 자본금	-	24,787,700	

※ 경기도 사회적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 연례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조사 예정

5. 주요지표

목표 1. 농업(農)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지표 1. 경기도 로컬푸드 지수

경기도의 로컬푸드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안전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더불어 지역농산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농업 기반의 확대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기도 하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지역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와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지역시장점유율, 도시농업기반, 식생활교육지원 등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로컬푸드지수를 산출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수준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시장점유율지수, 도시농업기반지수, 식생활교육지수를 각각 산출한 후 각각 지수에 40%, 30%,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각각의 지수는 의제에 대한 공감대와 실천 기반이 조성되는 2016년의 목표치를 100%로 하여 목표 달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표4〉 경기도 로컬푸드 지수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계	36	51	76	100	123	157
- 지역시장점유율지수	44	62	81	100	116	137
- 도시농업기반지수	36	46	68	100	130	186
- 식생활교육지수	27	41	76	100	124	154

5-1. 보조지표

5-1-1. 지역농산물의 지역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생산과 지역소비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지역농산물의 지역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표3〉에서 살펴보았듯이 쌀, 축산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의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낮은 현실에서 지역농산물의 지역시장점유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능한 한 다양한 품목이 지역 내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지역시장에서 지역농산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들이 지역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시장 점유율을 대표하는 지표로 학교급식에서의 경기도 농산물 비중과 경기도 내 공영도매시장(수원, 안양, 구리, 안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출하비율을 지역농산물의 지역시장점유율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도와 시군의 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 로컬푸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도 지역시

장 점유율 지표로 활용한다.

〈표5〉 지역농산물의 지역시장점유율

(단위 : %, 개)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학교급식에서의 경기도 농산물의 비중	30	40	50	60	65	70
도매시장에서의 경기도 농산물 출하비중	20	22	24	26	28	30
로컬푸드지원조례 및 전담기구 설치유무	2	12	24	36	48	64

5-1-2. 경기도 도시농업의 기반을 확대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소비자들이 생산자들과 생산활동에 대한 농업활동의 체험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주변의 소비자들에 대한 도시농업지원이 필요하며, 도심지 내 텃밭 면적을 일정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6〉 경기도 도시농업 기반

(단위 : 수)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시민농장 수 *16)	41	45	55	67	82	99
주말농장 수 **17)	167	184	223	269	326	395
학교텃밭 수	128	141	171	296	359	435
도시농업공원 수	0	2	5	10	15	31
도시농업지원조례 및 전담기구 설치유무	4	10	24	36	48	64

각 분야별 증가율은 시민농장, 주말농장, 학교텃밭의 경우는 약 10%정도, 도시농업공원의 경우는 20%이상의 면적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표 6〉에서 시민농장이란

16) * 경기도 시민농장현황 : 용인 2, 화성 2, 시흥 2, 안성 1, 안산 7, 군포 3, 수원 5, 일산 8, 성남 2, 광주 2, 남양주 2, 평택 2, 광명 1, 파주 1, 의정부 1

17) 자료출처 : www.weekendfarm.com

도시농업 운동 차원에서 농업인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곳으로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을 말한다. 주말농장은 농업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으로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모두 포함한다. 학교 텃밭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본 바 학교텃밭 현황에 관해 조사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조사자가 임의로 개수를 산출한 것임을 밝히며, 그 내용으로 혁신학교 80곳의 학교 텃밭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학교 텃밭 35개, 일부 조사자가 알고 있는 지역별 학교 텃밭들을 합친 개수이다. 또한 시민농장, 주말농장, 학교텃밭 모두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공원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 한 곳도 없는 상황으로 2020년까지 경기도 모든 지자체별로 설립을 목표로 한다.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와 시군 지원조례 제정 개수와 전담기구 설치 개수도 도시농업 기반을 평가하는 지표에 포함한다.

5-1-3. 경기도 식생활교육을 확대한다.

어렸을 때의 식생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성인에 대한 식생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식생활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지역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어린이 1인당 식생활교육의 회수를 식생활교육 확대를 표시하는 첫 번째 지표로 삼는다. 또한 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식생활교육 관련 직무연수 시행 횟수를 두 번째 식생활교육 확대의 지표로 삼으며,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고, 서로 다른 전통음식이 있는 등 독특한 식문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식생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식생활교육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이를 네 번째 식생활교육 지표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에서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도와 시군에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의 수와 전담 기구의 수를 식생활교육 지표로 설정한다.

〈표7〉 1인당 식생활교육횟수 18)

(단위 : 회, 개)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유치원(보육시설)	2.0	2.2	2.6	3.0	3.4	4.0
초등학교	2.0	2.2	2.6	3.0	3.4	4.0
식생활교육 관련 영양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관련 횟수	0	2	6	8	10	12
지역별 식생활 교육 매뉴얼 개발	0	4	12	18	24	32
식생활교육지원조례 및 전담기구 설치 유무	1	4	24	36	48	64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 식생활 교육이외에 성인의 농업 및 식생활교육 관련하여 경기도 내 각 지자체 별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부학교의 경우 안산1, 수원 1, 평택 2, 파주 1, 고양 1, 광명 1, 시흥 1, 화성 1, 의정부 1, 광주 1, 하남 1로 2011년 현재 12개의 도시농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농부 학교의 경우도 2020년까지 약 10% 증가율을 목표로 확대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 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형성

지표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수

사회적경제 생태계라 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탄생, 성장, 발전적 쇠퇴라는 선순환되는 구조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지면 정부의 지원 정책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기업은 선순환 되어 질 수 있다.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생태계도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지수,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수,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지수가 포함된다.

18) 자료출처 : 경기교육청

〈표8〉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수

사회적경제 생태계지수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계	100	169	444	1,151	2,619	4,561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	30	60	151	333	649	1,101
사회적기업 성장 지수	40	61	162	450	1,087	1,903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 지수	30	48	131	368	883	1,557

5-2. 보조지표

5-2-1.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를 높인다.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비롯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사람, 기업,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의 성장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에는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기업 협의체 및 광역, 기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총 수, 광역, 기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총 상근인력 및 사회적기업 자본, 장기차입금 총액을 포함한다.

〈표9〉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

(개, 명, 억원)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지역별 업종별 협의체 및 지원센터 지수 (개)	10 (12)	23 (28)	46 (55)	71 (85)	88 (105)	105 (126)
사회적지원기관 상근인력 지수 (명)	10 (21)	20 (42)	55 (116)	105 (221)	140 (294)	179 (375)
사회적기업 자본, 장기차입금 지수 (억원)	10 (104)	16 (170)	51 (530)	157 (1,630)	421 (4,380)	817 (8,490)
소계	30	60	151	333	649	1,101

5-2-2. 사회적기업 성장지수를 높인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수와 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질적 성장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성장 지수에는 사회적기업 기관 총 수, 사회적기업 총 종사자 수, 사회적기업 총매출, 사회적기업 서비스 총 수혜자 수를 더한 합을 말한다.

〈표10〉 사회적기업 성장 지수

(개, 천명, 억)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사회적기업 기관 지수 (개)	10 (258)	16 (400)	43 (1,100)	120 (3,100)	295 (7,600)	531 (13,700)
사회적기업 총 종사자 지수(천명)	10 (4.8)	15 (7.2)	36 (17.6)	96 (46.5)	221 (106)	340 (164)
사회적기업 총매출 지수(억)	10 (479)	15 (700)	40 (1,930)	113 (5,430)	278 (13,300)	501 (24,000)
사회적기업 서비스 총 수혜자 지수(천명)	10 (93)	16 (144)	43 (400)	120 (1,120)	295 (2,740)	531 (4,950)
소계	40	61	162	450	1,087	1,903

5-2-3.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 지수를 높인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 지수와 함은 외부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의 자립정도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 순환적 구조 정도를 말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가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지수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 사회적경제조직 회원 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사회적 기업서비스 구매 총액이 포함된다.

〈표11〉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지수

(개, 천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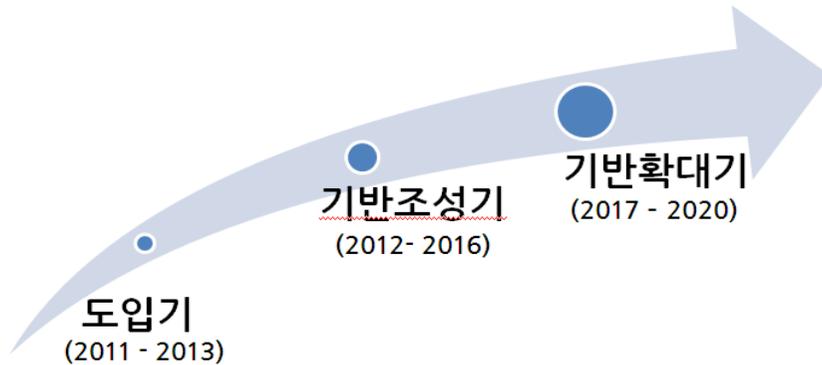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개)	10 (387)	16 (600)	41 (1,600)	112 (4,300)	265 (10,300)	460 (17,800)
사회적경제조직 회원 수 (천명)	10 (19)	16 (30)	41 (80)	112 (217)	265 (513)	460 (891)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지수(억원)	10 (99)	16 (160)	49 (480)	144 (1,430)	353 (3,500)	637 (6,300)
소계	30	48	131	368	883	1,557

※ 상기 2011년 사회적경제조직 자료는 현재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현황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추정치로 기입하였음.

6. 추진전략

6-1. 로컬푸드

〈 단계별 추진 전략 〉



- 2011~2013(도입기) :
의제작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시범사업, 도와 선진 시·군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토대 확보
- 2014~2016(기반조성기)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확대하고 과반수 이상의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기구 확보하여 사업 기반을 조성
- 2017~2020(기반확대기) :
사업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사업이 미진한 지역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여 경기도 전 지역으로 사업기반을 확대

6-1-1. 지역먹을거리체계를 구축한다.

- 자치단체별로 지역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율을 설정한다.

- 지역별로 다양한 품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다품목 소량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보호한다.
- 지역농협과 유통조직,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를 연계한 지역식량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 별로 로컬푸드지원조례를 제정한다.

6-1-2.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

-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상시교육을 실시한다.
- 도심지에서 농업공원, 시민농장 등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도시농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학교텃밭, 옥상농원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 농(農)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지도자과정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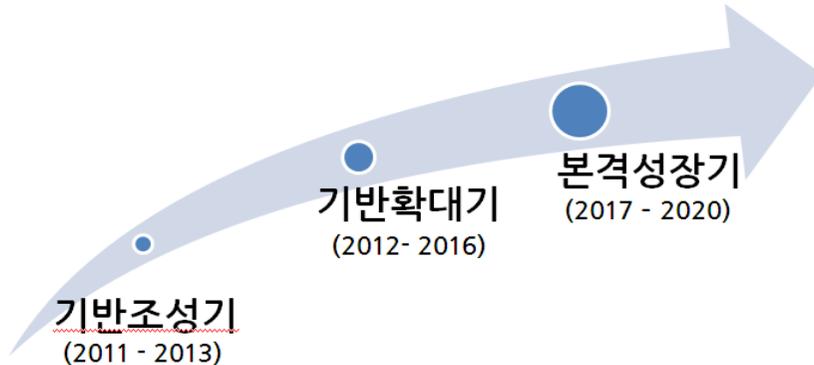
6-1-3.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하여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어 유통되는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식생활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게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생활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강화한다.
- 올바른 먹을거리교육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역 식생활교육지도자를 육성한다.

6-2.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부분의 생태계기반 조성은 삶에 있어서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단계별 추진 전략 〉



- 2011~2013(기반조성기) :
의제작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행정기관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여 사회적경제 기초 토대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관련 네트워크 구축, 전담기구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각 시군 50% 개소로 활동의 장 마련
- 2014~2016(기반확대기) :
기초 토대가 조성된 시군의 모범적 사례를 모니터링한 후 이를 전 시·군으로 확대 사회적 경제 확대하고 모든 지역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지원체계를 구축
- 2017~2020(본격성장기) :
모든 업종별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여 협동 사회 경제가 GDP의 1.3%, 고용의 5%를 책임진다.

6-2-1.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지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만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기업은 선순환 되어 질 수 있다.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기업 지원의 출발이다. 이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생태계도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핵심이다. 전문화된 지원인프라를 통해 탄생, 성장, (발전적) 쇠퇴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 전문화된 지원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를 가지는 다양한 사람·기업·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한다.

6-2-2.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이며 한시적인 정부 지원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행정, 시민사회, 소비자, 종사자 등)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적, 물적 부분을 확대한다.
- 사회경제조직의 발굴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6-2-3.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적 구조를 위하여 지역별로 생산, 소비, 생활 협동조합, 마을단위로는 마을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주된 활동이다. 생산자는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고,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재화의 고갈을 의미한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원순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중심의 아나바다운동 및 나눔장터를 확대한다.

7. 이렇게 합시다.

7-1. 로컬푸드

7-1-1. 행정기관(경기도 및 기초 시·군)

- 농민·소비자·산업(유통,가공)·행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 지역권역별 먹을거리체계를 구축한다.
- 경기도의 도시생태농업을 확대한다.
- 생태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 퇴비만들기 사업을 전개한다.
- 경기도의 지역생산 지역소비 비중을 높여나간다.
- 주2회 지역농산물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
- 학교 급식에 경기도 지역 농축산물의 비중을 높인다.
- 기초 시군구의 지역먹을거리 활동(조례 및 거버넌스)을 적극 지원한다.
- 지역먹을거리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영유아학교,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시민)

7-1-2. 생산자

- 다품종 혼작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법에 힘쓴다.
-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먹을거리 활동에 참여한다.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토양의 유기물함량을 높이는 자가 퇴비의 토대를 마련하여 나간다.

7-1-3. 소비자

- 도시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 지역먹을거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다.
- 지역생산물의 종류와 생산시기를 찾아 소비한다.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지역농산물의 비중확대를 모색한다.
-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생산 먹을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조리하여 먹도록 노력한다.

7-1-4. 판매자(유통)

- 지역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지역 표시를 철저히 한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용 매대를 확대한다.
-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을 적극 유통·판매한다.

7-1-5. 농업 유관기관(농협, 생협 등)

- 기존의 전국물류체계를 탈피한 지역전용물류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지역먹을거리체계의 일익을 담당한다.
- 각 매장 안에 지역먹을거리 전용 매대를 확대한다.
- 소비자들에 대한 지역먹을거리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 지역사회지원농업을 확대 강화한다.

7-1-6. 연구지도기관

- 생태적 지속가능한 농법에 대한 연구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 도시농업 농사방법 연구 및 작목별 재배 기술을 홍보하고 지도한다.
- 자투리 땅을 찾아내어 시민들에게 도심텃밭으로 제공한다.
- 토양에 맞는 퇴비의 적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도한다.
- 농업이 생명활동의 근본임을 적극적으로 일깨워 나간다.

7-2. 사회적경제

7-2-1. 행정기관(경기도 및 기초 시·군)

- 기업, 행정, 지원, 전문가 등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과 서비스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출(투자) 기금을 조성한다.
- 사회적기업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여 확대한다.
- 재이용 재활용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홍보 등을 지원한다.

7-2-2. 사회적경제조직

-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
- 거버넌스 모델로 광역,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구성한다.
-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발굴 및 확대한다.
-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 및 확대한다.
-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문화·교육·관광 산업 모델을 발굴 및 확대한다.

7-2-3. 소비자, NGO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지식 기부자(프로보노)로 참여한다.
- 상품의 재이용-재활용을 확대한다.
- 아나바다 장터 및 지역화폐에 적극 참여한다.
- 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한다.

7-2-4. 연구/조직기관

- 지역, 업종별 사회적 경제 육성 전략을 연구한다.
- 각 지원 조직의 역할 및 인재를 육성한다.
- 사회적기업가의 교육 및 육성에 힘쓴다.

7-3. 광역의제 및 기초(시·군)의제

- 로컬푸드 및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의제(지표) 개발 한다.
- 로컬푸드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현황,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광역 및 기초시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할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 행정과의 거버넌스 실현을 통해 각 영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한다.(조례개정 포함)
- 광역의제, 기초의제, 일반시민들이 소통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들을 발굴한다.

8.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8-1. 모니터링 주체 및 방법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참고하거나 정책수립에 이용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작업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녹색사회경제를 가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현황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갖고 향후 정책제안이나 현황파악, 실천사업을 준비하는 기본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는 담당 행정기관과 각 시군의 실천조직 단위, 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제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니터링 주체는 관련 도민 모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기획, 진행, 평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관된 행정조직 및 지역 실천조직들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녹색사회경제영역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빈곤극복, 경제활력 제공, 생산 및 소비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대표지표가 되는 로컬푸드 지수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측정해 나가야 한다. 모니터링의 세부내용 및 대상은 녹색사회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 논의과정에서 외부의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모니터링 자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구별로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취합가능하며, 로컬푸드와 사회적기업 분야에 대한 지표 개발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도 및 지자체 해당공무원, 기초의제, 전문가그룹,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2. 모니터링 범위 및 주기

모니터링의 범위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 지표의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조지표나 추진전략 등 관련 항목도 모니터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니터링의 주기는 위원 교체 주기에 맞추어 2년을 기본 단위로 실시하여 2020년까지 기본적 평가와 정책수정, 확대여부를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8-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본 녹색사회경제의제의 첫 번째 모니터링의 목적은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이 기본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모니터링 또는 실천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기본자료조사 이후 그 결과치를 통해 목표대비 달성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확인자료로 사용하거나 실천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실천 여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표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각 주체별(생산자, 소비자, 행정, 판매자(유통), 사회경제조직)로 구체적인 세부실천과정에서의 개선점 및 문제점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의제의 목표나 추진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에서부터 진행과정에서의 인적, 경제적 지원이나 민관협력체계 구축, 법적인 보장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녹색사회경제의제 작성에 함께하신 분 -

구자덕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

이우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홍승미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철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서희숙 남양주 시민희망연대 간사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총무

최일수 푸른평택21 자치분과 부위원장,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총무

김덕일 평택농촌희망포럼 운영위원장,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

부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수 산출 방식

※ 참고 1. 지수 산정 방식

- 2011년을 지수 100으로 기준 설정하고, 2011년 대비율을 산정. 총지수와 항목별 지수 관리를 통해 성장률을 파악.
- 2016년 현 시점보다 11배 성장, 2020년 46배 성장을 목표로 산정함.

※ 참고 2. 지수 목표 산출 근거

- 1) 사회적기업 업종네트워크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중분류 수준의 업종네트워크 구축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 대분류(17개 항목) → 중분류(60개 항목) → 소분류(160개 항목) → 세분류(334개 항목) → 세세분류(1천195개 항목)로 표준 분류
- 2) 네트워크 상근자 : 광역, 지원기관 평균 10명, 업종네트워크, 기초지원센터 3명, 기초협의회 2명 목표

구분	네트워크	2011년 현재		2020년 목표	
		광역	기초	광역	기초
네트워크 기관	사회적기업협의회	1	5	1	31
	사회적기업지원센터	2	4	3	31
	업종네트워크	0		60	
	계	12		126	
네트워크 상근자	사회적기업협의회	1	0	10	62
	사회적기업지원센터	10	10	30	93
	업종네트워크	0	0	180	
	계	21		375	

- 3) 자본금 전국평균 45백만원, 사회적기업 평균 차입금 자본금 30%(추정) 수준에서 자본금 100% (제조업평균 부채비율 98%) 수준 확대 목표
- 4)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 비중 GDP, 고용규모 기준 현재 영국 수준 성장 목표
- 5) 평균 고용인력 : 현재 사업체 고용 (경기도 평균 5.3명)과 현재 사회적기업 고용 (19명)의 평균인 12명을 목표

- 6) 경기도 사회적기업 기관 수 목표 : ‘총 고용목표/평균 고용인력’ 기준 산정
- 7) 사회서비스 총수혜자 목표 : 전국 사회적기업 평균 기관당 524명, 예비사회적기업 50% 추정 기준 산정
- 8)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 파악이 되지 못하여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사회적기업의 1.5배, 조합원은 조직당 회원 50명 규모라고 추정 산정. 2020년 사회적기업 수의 1.3배 성장 목표 산정. (농협, 수협, 축협 등은 사회적경제조직 산정에서 제외)
- 9) 공공기관 제품 서비스 구매 목표 : 사회적기업 현재 매출의 20% 추정, 2012년부터 매년 200만원 증가 25% 수준(기관당 4600만원)까지 증가 목표
- 10) 기초 데이터 산정¹⁹⁾

구분	기업수	종사자 수	평균 종사자	총매출	평균매출	총서비스 수혜자	평균 수혜자	자본금 평균
계	258	4,824	19	47,934,616	185,793	93,251	361	31,047
사회적기업	98	2,607	27	26,390,968*	269,296	51,341*	524	45,000*
예비사회적기업	160	2,217	14	21,543,648**	134,648	41,911**	262	22,500**

구분	2010년	전국기관평균	경기도(E)
총매출(천원)	149,459,055	269,296	26,390,968
총영업이익(천원)	2,497,845	4,501	441,061
사회서비스 수혜자수	290,755	524	51,341
총자본금(천원)	24,787,700	44,663	4,376,927

구분	경기도 전체	사회적기업			
		2011년 현재	전체대비	2020년 목표	전체대비
GDP	182,831,671	47,934	0.026%	2,400,000	1.3%
고용	3,283,112	4,824	0.147%	164,000	5.0%
평균고용	5.3	18.7	355%	12.0	228%
사업체수	623,950	258	0.041%	13,690	2.2%

19) * 전국평균 기준 경기도 사회적기업 매출, 서비스, 자본금 추정

** 예비사회적기업 매출, 서비스수혜자, 자본금 사회적기업 50% 수준 추정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마을의제

| 마을의제 목차(항목) |

항목(목차)	내 용
1. 의제작성배경	1-1. 마을의제의 개념 1-2. 의제선정 동기 1-3. 의제작성 과정
2. 의제명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마을”
3. 의제목표	3-1. 비전 : 경기도내 개별 마을단위에서 마을의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의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3-2. 목표 3-2-1. 다양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제 작성 3-2-2.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4. 의제현황	4-1. 의제현황 4-1-1.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4-1-2. 마을의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자발적 활동도 하고 있지만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1-3. 마을의제 작성은 마을만들기에 기본 단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및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주요지표	5-1. 주요지표,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 5-1-1.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현황 5-1-2. 마을의제 작성 현황 5-2. 보조지표, 마을 모니터링 지표 5-2-1. 공동체 활성화 5-2-2.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 5-2-3. 마을의제 작성 5-2-4. 공간 개선
6. 추진전략	6-1.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6-1-1. 마을의제 작성 지원 기구 설치 및 운영 6-1-2.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 제작 및 배포 6-1-3.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6-2.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모임 평가 및 시상
7. 이렇게 합시다	7-1. 경기도 7-2. 기초자치단체 7-3. 경기도민 7-4. 시민단체
8.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8-1. 모니터링 주체 및 방법 8-2. 모니터링 범위 및 주기 8-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1. 의제작성 배경

1-1. 마을의제의 개념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마을의제위원회〉는 마을의제위원회 전체 워크숍 및 실행위원회를 통해 마을의제의 개념을 ‘자발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계승·발전시켜 자연과 더불어 다함께 어울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 과제’로 정의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마을의제는 “주민이 만드는 활동 과제”를 의미하며, 목표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형성”, “정체성 확립·계승·발전”, “자연과 더불어 다함께 어우러짐”이라는 요소를 갖춰야 하며, “자발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만드는 활동과제, 즉 마을의제가 필요하며, 마을의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마을의제는 주민들의 실천활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에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1-2. 의제선정 동기

최근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만들기가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개별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활동과제, 즉 마을의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을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을 하거나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이다. 마을의제 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마을의제 작성과 관련한 경험이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런데 마을의제 작성은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마을 내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우리 마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활동과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제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되는 지는 향후 마을만들기 활동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양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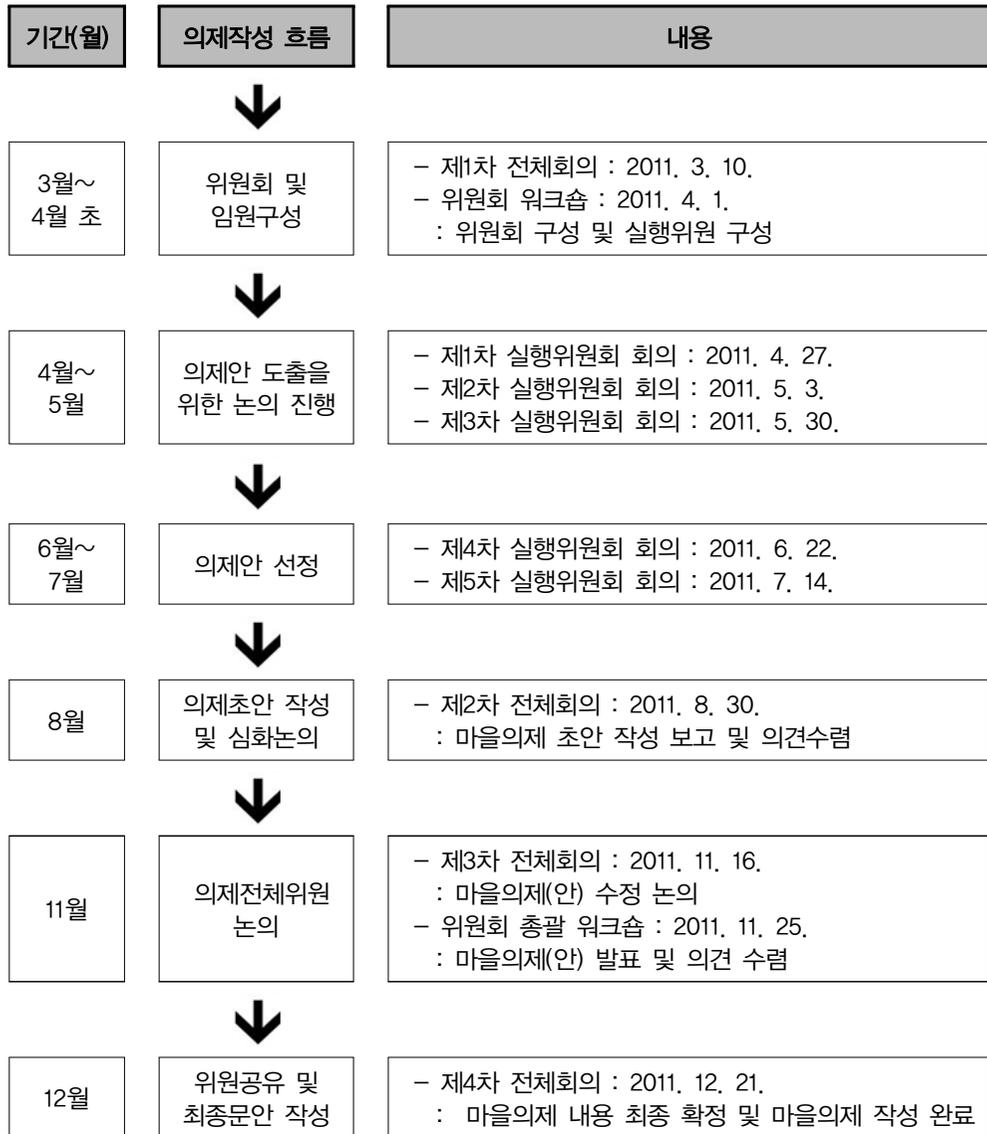
따라서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제 작성과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1-3. 의제작성 과정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마을마다, 주민마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가 다르고 희망하는 마을의 미래상도 다르기 때문에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정답 역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마을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했을 때 마을의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도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마을의제 작성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매력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마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마을의 특성이나 주민의 여건이 달라도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제 작성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달해야 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의제 작성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 마을 단위에서도 마을의제 작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모임이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공간을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해 개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을의제 작성 Flow-Chart〉



※ 마을의제위원회 의제작성TFT (가나다순)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김경선	사)다산문화교육원 상임이사
3	김달수	경기도의원
4	김도근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도시사회분과 위원장
5	김선영	강남대학교 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원
6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원장
7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8	김주석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9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10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11	유희수	세류3동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12	이근호	수원르네상스지원센터 센터장
13	이오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수원지부 부지부장
14	이현선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국장
15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6	황정주	마을공동체 문화로숲 대표

※ 최종 집필자 : 김윤이 위원(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 의제명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

3. 의제목표

3-1. 비전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단위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 마을 단위에서의 실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제의 목표를 설정할 때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의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지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2. 목표

따라서 마을의제의 목표는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마을의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을의제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여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양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제 작성
-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4. 의제현황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마을만들기가 최근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마을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에 한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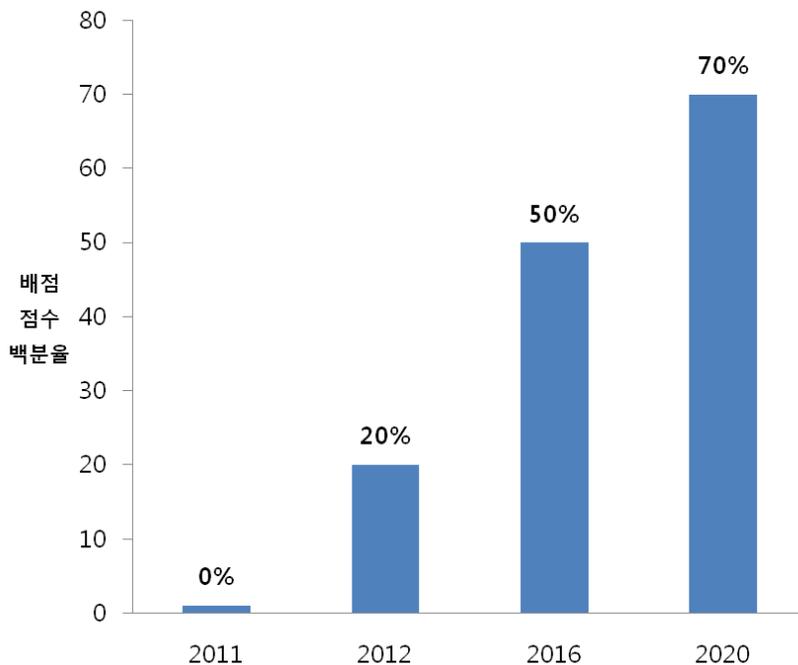
사실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이다.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활동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마을의 미래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도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욕구들이 올바르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활동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초의제가 활동하고 있지만, 기초의제별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들이 다르고 모든 기초의제가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도시대학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실현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주민모임 차원에서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센터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의 마을만들기 관련 경험과 교육 수준, 참여 의식이 다르지만 공모사업 추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사실 마을의제 작성은 마을만들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이 아직까지 공감되지 못하거나 공감은 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락되기도 한다. 물론 동네건기 프로그램이나 마을의 문제와 매력 찾기 프로그램 등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마을의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을의제 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이나 공모사업 계획서 내용에 머무르고 실제로 활동과제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5. 주요지표

- 주요지표 :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
- 보조지표 : 마을 모니터링 지표



5-1. 평가지표

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달성목표는 주요지표인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책정하는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에 의한 경기도 전체 평균 점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것으로 설정한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후인 2012년에는 경기도 100점 만점에 평균 2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6년에는 50%, 2020년에는 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것을 세부달성목표로 설정한다.

- 2012년 : 경기도 전체 평균 20점 이상
- 2016년 : 경기도 전체 평균 50점 이상
- 2020년 : 경기도 전체 평균 70점 이상

보조지표인 마을 모니터링 지표는 세부달성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지표는 개별 마을 단위에서의 마을의제 작성 과정 및 마을의제 실현 과정에 대해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지만, 아직까지 마을의제 작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도 내 모든 마을을 대상하거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지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초기에는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점수가 높은 마을에 대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을의제 작성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단위의 마을의제 작성이 좀 더 일반화되면 제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전체 평균이 50점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마을의제 세부달성목표에 의하면 2016년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는 보조지표인 마을모니터링 지표를 평균 점수화하여 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달성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지표의 경우에는 마을의제 작성과 관련한 질적이 목표를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일부 포함한다.

5-1-1 주요지표 :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

주요지표인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현황’과 ‘마을의제 작성 현황’으로 구분되고,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현황	프로그램 운영 여부	마을의제 관련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지원체계 구축 여부	마을의제 작성 지원 관련 센터 설치	5	
		마을의제 작성 지원 관련 조례 제정	5	
	프로그램 참여 주민모임 수	관할 읍면동 수 대비 10% 미만	5	
		관할 읍면동 수 대비 10% 이상 30% 미만	10	
		관할 읍면동 수 대비 30% 이상 50% 미만	15	
		관할 읍면동 수 대비 50% 이상	20	
마을의제 작성 현황	주민자치위원 회의 마을의제 작성 비율	10% 미만	5	
		10% 이상 30% 미만	10	
		30% 이상 50% 미만	15	
		50% 이상 70% 미만	20	
		70% 이상	30	
	주민모임에 의해 작성된 마을의제 수	관할 읍면동 수 대비 5% 미만	5	
		관할 읍면동 수 대비 5% 이상 15% 미만	10	
		관할 읍면동 수 대비 15% 이상 25% 미만	15	
		관할 읍면동 수 대비 25% 이상 35% 미만	20	
		관할 읍면동 수 대비 35% 이상	30	
	총점			100

5-1-2 보조지표 : 마을 모니터링 지표

보조지표인 마을 모니터링 지표는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 ‘마을의제 작성’, ‘공간 개선’으로 구분되고,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특점
공동체 활성화	소모임 수	마을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 없음	1	
		마을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이 1~4개	3	
		마을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이 5개 이상	5	
	세대간 교류 소모임 수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소모임 없음	1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소모임이 1~2개	3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소모임이 3개 이상	5	
	자원봉사자 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음	1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명 미만	3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5	
	연간 공동 행사의 수	공동행사 없음	1	
		연 1~2회	3	
		연 3회 이상	5	
주민조 직 구성 및 운영	주민대표모임 의 존재 여부 및 운영회수	주민대표모임 없음	1	
		주민대표모임이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모이거나 연 6회 미만 정기모임 개최	4	
		주민대표모임이 있고, 연 6회 이상 정기 모임 개최	7	
		주민대표모임이 있고, 연 12회 이상 정기 모임 개최	10	
	주민대표모임 의 구성방식	단일 단체(모임) 주도로 구성	1	
		2개 이상의 단체(모임) 주도로 구성	3	
		단체(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마을 주민도 참여하여 구성	5	
	주민대표모임 운영방식	주민대표모임 회의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1	
		주민대표모임 회의결과를 기록하지만 마을 주민과 공유 하지 않음	3	
		주민대표모임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마을 주민과 공유함	5	
	마을의 제 작성	작성단계	마을의제 없음	1
			마을의제 작성 준비 중	4
마을의제 작성 중			7	
마을의제 작성 완료			10	
참여주체의 다양성		마을의제 없음	1	
		단일 단체(모임) 주도로 작성	4	
		2개 이상의 단체(모임) 주도로 작성	7	
		단체(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마을 주민도 참여하여 작성	10	

	작성관점	마을의 역사와 전통의 발굴 및 반영	5		
		사회적 약자의 관점 반영	5		
	작성방식	마을의제 작성과정 공개 및 공유	5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마을의제 공유 및 수정	5		
공간 개선	주택의 개방성	사적 공간을 개방하는 주택이 5% 미만	1		
		사적 공간을 개방하는 주택이 5% 이상 10% 미만	3		
		사적 공간을 개방하는 주택이 10% 이상	5		
	공공기관의 개방성	공간 및 시설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이 10% 미만	1		
		공간 및 시설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이 10% 이상 20% 미만	3		
		공간 및 시설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이 20% 이상	5		
	주민공동이용시설 수	주민공동이용시설 없음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 1~4개	4		
		주민공동이용시설이 5~9개	7		
		주민공동이용시설이 10개 이상	10		
	총점			100	

5-2 평가지표의 활용방법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가 총 4개, 마을 모니터링 지표가 총 8개이다.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현황(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참여자 수)과 마을의제 작성 현황(마을의제 작성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발적 마을모임 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세부 항목별로 10~30점을 배점하였다. 5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의제 작성 현황과 관련해서는 최고점 점수구간과 차고점 점수구간을 10점 단위로 배점하였다. 마을의제 작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지원체계 구축 여부와 관련해서는 충족 시 세부항목별로 5점을 부여하고 미충족 시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마을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소모임 및 세대간 교류 소모임 수, 자원봉사자 수, 연간 공동 행사의 수),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주민대표모임의 존재 여부 및 운영회수, 주민대표모임의 구성 및 운영방식), 마을의제 작성(마을의제 작성 단계 및 참여주체의 다양성, 마을의제 작성관점 및 방식), 공간 개선(주택 및 공공기관별 공공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수)으로 구분하여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세부항목별로 7점 또는 10점을 총점으로 2~3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의제 작성관점과 작성방식과 관련해서는 배점 기준을 충족 시 세부항목별로 5점을 부여하고 미충족 시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80〉 평가항목 구성방식 및 활용방법

평가항목		배점	활용방법
마을의제 작성 평가 지표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현황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 (배점×배점기준)+(배점×배점기준)=득점
		지원체계 구축 여부	10 (배점×배점기준)+(배점×배점기준)=득점
		프로그램 참여 주민모임 수	2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마을의제 작성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의제 작성 비율	3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주민모임에 의해 작성된 마을의제 수	3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마을 모니터링 지표	공동체 활성화	소모임 수
세대간 교류 소모임 수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자원봉사자 수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연간 공동 행사의 수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주민대표모임의 존재 여부 및 운영회수	1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주민대표모임의 구성방식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주민대표모임 운영방식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마을의제 작성		마을의제 작성단계	1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마을의제 작성 참여주체의 다양성	1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마을의제 작성관점	10 (배점×배점기준)+(배점×배점기준)=득점
		마을의제 작성방식	10 (배점×배점기준)+(배점×배점기준)=득점
공간 개선		주택의개방성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공공기관의 개방성	5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수	10 배점×배점기준=득점(1개 선택)

5-3. 지표 내용 구성

5-3-1.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 :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현황

■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여부

마을의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지원의 방식은 크게 마을의제 작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과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있다.

우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의제가 무엇인지, 마을의제가 왜 필요한지, 마을의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마을단위에서 마을의제 작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직접 마을의제가 작성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을의제와 관련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제로 마을의제를 작성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마을의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여건, 마을의 역사와 전통 등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마을단위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도 교육, 상담, 현장 지원, 워크숍 진행 지원, 선진 사례 답사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의제 작성을 좀 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센터의 역할에 마을의제 작성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사업유형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 프로그램 참여 주민모임 수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속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이 늘어날수록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마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모임 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개인이 아닌 주민모임으로 설정하고 배점기준을 단순 합계가 아닌 읍면동 수 대비 비율로 하였다. 이는 마을의제 작성은 개별 참여보다는 마을의제를 작성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차원의 참여가 중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인구 수, 행정구역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 프로그램 참여 주민모임 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이수한 경우에 한 해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을의제 작성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5-3-2.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 : 마을의제 작성 현황

■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의제 작성 비율과 주민모임에 의해 작성된 마을의제 수

마을의제 작성이 중요한 가치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마을의제 작성의 필요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을의제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제 작성과 관련한 평가지표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마을의제를 작성한 주민모임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주민모임의 구성과 활동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행정단위에 의한 공간적 경계를 통해 구분할 필요는 없다. 동일한 공간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주민모임은 서로 다른 마을의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마을의제 작성 주체로서 전국적으로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의 주민모임이 마을의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의 미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의제 작성 현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마을의제를 작성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율과 관할 읍면동 수 대비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의 주민 모임에 의해 작성한 마을의제 작성 수이다. 행정의 지원에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와 기타 주민모임의 참여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점수는 동일

하게 30점씩 부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기타 다른 주민모임이 함께 마을의제를 작성한 경우에는 두 가지 평가항목 모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마을의제를 작성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자발적 마을모임은 관할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읍면동수 대비 35% 이상이 마을의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배점기준은 5점으로 하되, 최고점과 차고점은 10점의 배점차이를 둔다.

5-3-3. 마을 모니터링 지표 : 공동체 활성화

■ 소모임 및 세대간 교류 소모임 수

마을 내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모임을 구성하기도 한다. 소모임은 점차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에서 마을 내에서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모임이 많은 마을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독서모임, 걷기모임, 토론모임, 환경살리기모임, 바른먹거리모임, 교육모임 등 소모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 수는 공동체 활성화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단순히 특정 세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인, 청장년, 청소년과 아동 등 세대간 교류가 가능한 소모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자원봉사자 수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다양하다. 마을신문 발행, 마을도서관 운영,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등 직접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자원봉사활동도 있지만 마을 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돌보고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마을은 활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은 제외하도록 한다.

■ 연간 공동 행사의 수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대표모임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마을 일을 주도해가는 경우도 있고 소모임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직장 때문에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어 마을활동에 참여할 엄두를 못내는 이들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민대표모임이나 소모임, 자원봉사활동과는 별개로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수준이 낮은 마을주민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 공동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을잔치나 마을축제 등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연간 3회 이상 개최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5-3-4. 마을 모니터링 지표 :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

■ 주민대표모임의 존재 여부 및 운영회수

어떠한 가치를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 의제 작성과 공동체 활성화, 공간 개선 등을 통한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민대표모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대표모임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주민대표모임은 기본적으로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주민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대표모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통반장 모임이 될 수도 있으며, 행정조직과 무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다. 주민대표모임의 존재 자체보다는 주민대표모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매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대표모임의 구성 및 운영방식

주민대표모임이 구성되면 어떠한 형태든 마을 전체의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마을의 장래모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민대표모임은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단일 단체(모임) 주도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2개 이상의 단체(모임)가 서로 협의하여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단체(모임)에 소속되지 않는 마을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민대표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마을 주민 전체와 비교하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모임의 회의내용과 의사결정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5-3-5. 마을 모니터링 지표 : 마을의제 작성

■ 마을의제 작성단계 및 참여주체의 다양성

마을의제 작성을 주요한 마을의제 지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을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마을의제 작성과 관련하여 배점을 높여 마을의제 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을의제 작성은 마을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마을의제 작성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마을의제 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마을의 작성단계를 크게 ‘없음’, ‘작성 준비 중’, ‘작성 중’, ‘작성 완료’ 4개 단계로 구분하고 마을의제 작성을 완료한 마을에 대해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주민대표모임의 구성방식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단체(모임)가 주도하고, 단체(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마을 주민도 마을의제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하고 점수를 가장 많이 배점하였다.

■ 마을의제 작성관점 및 작성방식

마을의제의 비전과 목표는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마을의제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마을의제를 작성할 때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이를 마을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마을의제를 작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을의제를 작성할 때 마을의제 작성을 주도하는 주민모임이 안내지나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마을의제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의제 작성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마을의제 작성이 완료되면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마을의제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5-3-6. 마을 모니터링 지표 : 공간 개선

마을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의제 작성 주체가 마을로 인식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단위의 주민모임의 경우에는 해당 동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권 중심의 공간 설정도 가능하다. 단, 기본적으로 마을 규모는 최소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생활권(1,000~2,000세대, 800m×800m)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 및 공공기관의 개방성

공간의 개방을 통한 공유는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간 개방의 대상은 주택의 사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의 공간 및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주택의 사적 공간을 마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택과 마을 주민에게 공간 및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순히 개수로 평가하기에는 마을규모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주택과 공공기관의 수에 대비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은 이보다 2배 높은 20% 이상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다. 주택의 개방성과 관련해서 단지형태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를 단위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물 동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 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①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③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④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공동주택 내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개방했을 때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다.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문고, 노인정 등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을 내 접근가능한 곳에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는 것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거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필요에 대응하여 마을 내 빈 집이나 빈 점포,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6. 추진전략

경기도 차원에서 마을의제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기초자치단체가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모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마을의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6-1-1. 마을의제 작성 지원 기구 설치 및 운영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마을의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상설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제 작성 지원 기구의 주요한 역할은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를 제작하고 발간하는 것과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6-1-1.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 제작 및 배포

경기도 차원에서 마을의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만들어지면 마을의제를 작성하고자 하는 주민모임과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주요지표인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와 연계해야 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을의제 작성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직접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주민모임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6-1-2.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마을의제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온 경우에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성 결정은 커녕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을의제 작성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마을의제 작성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기본적인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역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마을의제 작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제 작성 지원 기구가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를 기본으로 하여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해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뒤, 경기도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2.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모임 평가 및 시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마을의제 작성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초자치단체와 우수 주민모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마을의제 작성 평가점수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마을의제 작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모임이 마을의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7. 이렇게 합시다

7-1. 경기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마을의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의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기초자치단체가 마을의제 작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를 제작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마을의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 모니터링 결과 평가지표 점수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와 마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2. 기초자치단체

- 마을의제 작성 지원을 포함하는 조례를 작성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의제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의제 관련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 기초의제 등과 협력하여 평가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7-3. 경기도민

- 소모임, 자원봉사활동, 마을공동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의제 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마을의제 작성을 위한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마을의제 작성과 관련한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마을의제를 작성하는 주민모임은 마을 모니터링 지표를 갖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에 평균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7-4. 시민단체

- 마을의제 작성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한다.
- 마을의제 관련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협력한다.
-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제 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을의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8.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8-1. 모니터링의 주체 및 방법

기본적인 모니터링 방법은 주요지표인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기초자치단체의 마을의제 작성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모니터링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 전체를 총괄하는 주체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기구가 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1차 모니터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는 모니터링은 단순히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량적 평가를 통해 마을의제 작성 현황을 점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의 마을모임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8-2. 모니터링의 범위 및 주기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총 541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의 시·군별로 평균 18개의 읍면동이 있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큰 편이다. 성남시가 48개로 가장 많고,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가평군은 6개로 가장 작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평가지표를 작성할 때 빈도가 아닌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모니터링은 1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지표인 마을의제 작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마을의제 작성 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마을의제 작성 현황을 점검한다. 읍면동 수는 541개나 되기 때문에 보조지표인 마을 모니터링 지표는 주요지표의 평균 점수가 50%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3개 마을을 추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8-3.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모니터링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마을의제 작성 지원체계 구축 현황과 마을의제 작성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기도 내 지역들이 보다 많이 마을의제 작성에 참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뚜렷한 활동과제를 갖고 마을만들기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특히 마을의제 작성 지원체계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마을의제 작성 현황과 함께 마을의제 작성 지원체계 구축 현황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정량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주요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모니터링 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도 일부 포함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면 주요 지표를 통해서도 마을의제 작성 지원체계 구축 현황과 마을의제 작성 현황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개 마을에 한정되지만 경기도 내 93개 마을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마을의제 작성이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보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살아있는
꿈의제1

| 삶의질위원회 의제작성 목차(항목) |

항목(목차)	내 용
1. 의제작성배경	1-1.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평등) 1-2.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참여) 1-3. 삶의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일자리)
2. 의제명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3. 의제목표	3-1.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평등) 3-2.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참여) 3-3. 삶의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일자리)
4. 의제현황	4-1. 삶의질과 차별없는 공간 4-1-1.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경기도 4-2. 삶의질과 시민참여 4-2-1. 참여자치제도록서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 4-3. 삶의질과 일자리 4-3-1. 안정적이고 평등한 일자리 4-3-2. 안전한 일터, 지역과 함께하는 일터
5. 주요지표	<p>목표 1.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평등) 지표 1.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경기도 보조지표 5-1.추진기반 : 관련조례와 정책 5-1-1. 조례와 정책 유무 5-1-2. 다양한 사회 구성원 참여 5-1-3. 평가와 환류 5-2.시행정도 5-2-1. 확산정도 5-2-2. 실효성 5-2-3. 시민인지도</p> <p>목표 2.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 (참여) 지표1. 참여자치제도록서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보조지표 5-3. 주민참여예산 : 개방성, 투명성, 시민권한 5-3-1. 시민참여형식 : 위원구성방식 5-3-2. 시민참여의 개방성 : 조례, 규정 등 5-3-3. 시민제안 반영 절차와 과정 5-3-4.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 권한 정도 5-4. 주민자치위원회 5-4-1. 위원공개모집 여부와 절차 5-4-2. 여성위원비율 5-4-3. 자치 동아리 수 5-4-4. 일상활동 정도 : 분과위원회 활성화 5-4-5. 회의 의결정치의 적절성 5-4-6.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용</p>

	<p>5-4-7. 주민홍보방법</p> <p>목표 3.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일자리)</p> <p>지표 1. 삶의질과 일자리</p> <p>보조지표 5-5. 안정적이고 평등한 일자리</p> <p>5-5-1. 비정규직 현황</p> <p>5-5-2. 동일업무 임금격차(남녀, 정규비정규)</p> <p>5-5-3. 공공기업 여성장애인 고용과 직급</p> <p>5-5-4. 노동안정성기여 우수 사례</p> <p>5-6. 안전한 일터</p> <p>5-6-1. 안전한 일터 실천 사례</p> <p>5-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일터</p> <p>5-7-1. 기업의 지역사회 협력 사례</p>
6. 추진전략	<p>6-1. 민관협력네트워크</p> <p>6-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지방의제21, NGO 및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p> <p>6-1-2. 관련 내용별 민간 역량 강화 지원</p> <p>6-1-3. NGO-지방의제21 연계 강화</p> <p>6-1-4. 의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체계 정착</p> <p>6-2. 시군의제와의 협력에 기초한 공동 모니터링 여론 활동</p> <p>6-2-1. 시군의제 관련 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분과사업연계</p> <p>6-2-2. 모니터링과 보고회, 토론회, 간담회 등 시군 중심 개최</p> <p>6-2-3. 시군의제 위원회 관련 현장 접촉면 확대 - 사업 실효성 제고</p> <p>6-2-4. 광역-기초 지방의제21 사업연계 모델 창출</p> <p>6-3. 의제모니터링 경과와 결과, 의제실현 추이등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p> <p>6-3-1. 의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저변확대</p> <p>6-3-2.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p> <p>6-3-3. 관련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p>
7. 이렇게 합시다	<p>시군의제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후 과제 명시</p>
8.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p>8-1. 격년제 지표 모니터링</p> <p>8-2. 격년제 시범사업</p>

“즐거움에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1. 작성배경

제3차 「경기의제21」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추진목표로 하여 기존의 13개 분야 의제를 5개로 통합하였다. 과정에서 본 위원회는 3개의 사회복지, 성평등, 아동분야를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삶의질에 관한 논의는 개발중심사회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세계 제 2차 대전이후 개발(Development)의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행복한 삶 = 개발을 통한 경제적 풍요’로 인식하게 되었고, GDP로 상징되는 경제적 성장 없이 인간의 행복한 삶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에 의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당면한 환경적 위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인류의 빈곤은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남에 따라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심주제로 부상한다. 따라서 인류는 경제중심의 ‘개발’과 ‘물질적 소비’에 기반 한 경제 성장이 인간 삶의 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본위원회가 삶의 질을 정의하고 의제를 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삶의 질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 정도가 차이가 있어 무엇을 삶의 질에 중심에 둘 것인가는 합의되기 어려운 주제였다.

관련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변화 가능한 것’이라는 확산이래 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노력은 참고할 만하다. OECD는 GDP에 근거한 경제중심의 발전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발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 세계 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²⁰⁾

20) 캐나다는 행복지표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CIW)를 개발 사회발전의 정도를 가능하는 지표로 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탄은 사회발전의 척도로 국민총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사용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는 생태적 효율성, 기대수명, 생활 만족 정도 등을 지표로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지표를 통해 선정된 최상위 국가는 가장 행복한 나라라기 보다는 지구상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이룬 나라를 보여줌. 즉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본 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삶의 질의 문제를 평등, 참여, 일자리의 세 가지 주제로 모아내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을 통해 평등의 문제는 삶의 공간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성, 참여의 문제는 주민참여제도, 일자리의 문제는 행복한 일자리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1-1. 형평성과 공간의 관계성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공간은 주민의 일상과 관계되어 있으며, 살아가는 공간의 환경 및 여건은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와 지역 발전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가 없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간, 시설 등이 계획되어 왔으며, 장애인, 아동, 여성, 이주민은 그러한 공간에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높은 턱과 계단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았으며, 아동의 키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로 아동의 시야는 항상 막혀 있었다. 여성들이 혼자서 어린 아이를 동반하여 외출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국인 중심의 안내표지는 이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위협이 되었다.

관련하여 ‘도시권’에 대한 논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는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공간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간사용권), 도시의 거주민이 도시 공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참여권) 한다고 주장한다. (르페브르 1996, 펜스터 2005). 여성정책에서도 도시 안에서 여성들의 차이가 배제되지 않고, 여성들이 자유로운 여성친화도시가 부상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거주민 모두의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여성 뿐 아니라 노인과 약자를 배려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공간과 삶의 질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형평성 증진과 주민참여의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가치체계가자 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 없는 삶의 공간을 만드는 실천적인 전략적 도구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주목하였

자원을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곧 국민의 행복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지구의 자원을 적게 소비하는 것만으로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만족의 경우, 사회적 자본, 기후적 조건, 풍부한 자연자원, 높은 기대수명과 생활수준, 시민참여정도와 시민참여 여건, 자립적 감정과 감정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HPI)

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양하며,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사회환경을 정비하는 것부터 사회생활의 제약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디자인의 철학이자 가치체계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원적 욕구(Needs)를 수용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Wants)를 존중하는 환경창조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디자인의 철학이자 가치체계이다. 사람이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며, 나아가 사용자(주민)와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용자 참여형의 시스템 구축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포함된다.

1-2. 시민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

발전패러다임의 한계로부터 인류가 얻은 교훈은 거버넌스이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은 정치와 행정만이 아니라 이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다는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직접 결정권을 부여하는 각종 제도(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등)의 도입과 이의 활용 빈도가 지속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화 이후 쇠락하는 수많은 도시들 중 극적으로 재생되는 도시들의 사례 중 공통된 특징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권한을 가진 참여(ex. 미국 로체스터 시티)가 중심에 있다.행복한 지구 지수(HPI)의 생활만족도 분석결과에도 대체로 사회적 자본과 시민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 될 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성숙시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 삶의 만족도 높여준다. 시민참여가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3. 행복한 일자리와 삶의 질

일자리는 일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며 동시에 ‘일을 통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로써 삶의 질을 규정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이다. 일자리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사회적·공공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한 일자리 그 자체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일’에 대한 사회적 기여가 존중되어야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획득하고, 경력을 축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왜곡된 성장 중심주의는 ‘경제성장’을 사회적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어 ‘일자리’는 그 본래의 사회적 의의 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고, 일자리의 주인인 사람은 수단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특성, 즉 직종, 정규-비정규직, 여성-남성 등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보상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일자리 불안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간다. 일자리의 위협에 대한 불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게 된다.

● 의제작성 과정

삶의질위원회는 의제작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워크숍, 광역 의제 작성에 있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시군의제 위원과의 간담회’ 등 더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빌리기 위해 애썼다. 특히 의제작성 과정 전반에 있어 의제작성TFT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50여명의 위원이 한날 한시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조금 더 집약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제작성을 총괄하는 TFT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의제작성 과정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올 한해 주요사업이 의제작성 사업이다 보니 의제작성TFT는 많은 모임을 가진 것이 사실이나 전체위원단위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의제를 실현하고자 기획 중이다. 아래의 표는 삶의질 위원회가 한 해 동안 의제작성 사업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했는지 정리해 놓은 표로서 의제도출 체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표1〉 한눈으로 보는 의제작성 흐름

기간(월)	의제작성흐름	내용
2~3월	위원회 및 임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전체회의 : 위원장, 총무위원, 실행위원 선임 - 제2차 전체회의 : TFT 구성하여 TFT주도하에 의제작성사업 진행 하기로 합의 / 의제작성 TFT 구성
4월~6월	의제안 도출을 위한 논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위원 워크숍 : 의제안 추천 및 관련 논의 - 1차 의제작성TFT 회의 진행 - 행복 토론회 : 의제작성 아이디어 도출 위한 토론회 1회 개최
6월말~ 7월초	의제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의제 : 평등, 참여, 일자리 - 의제명 :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7월초~ 9월중순	의제초안 작성 및 심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작성TFT 2차~5차 회의 진행
9월~ 11월	지역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시군의제위원회와의 간담회 북부, 서부, 남동부 총 3회 진행
11월~ 12월	위원공유 및 최종문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경기21 총괄워크숍 : 타위원회 대상으로 한 의제초안 공유 - 의제작성 TFT 6차 회의 : 최종의제안 검토 - 최종의제안 보고회 및 제3차 전체회의 : 삶의질위원회 전체위원 대상으로 한 최종의제안 공유 및 타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종의제안 공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문안 작성.

〈표2〉 삶의질위원회 의제작성 주요일정

NO	일시	사업명	내용
1	2월 24일(목)	제1차 전체회의	삶의질위원회 임원구성
2	3월 8일(화)	실행위원회회의	의제안 선정방법과 전체위원 워크숍 논의
3	3월 25일(금)	전체위원워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	추천 의제안 검토 및 의제작성TFT 구성 논의
4	5월 16일(월)	의제작성 TFT 1차 회의	의제작성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토론회 기획
5	6월 13일(월)	행복토론회	의제작성 아이디어 도출 및 의제명, 목표지표 등 선정
6	7월 5일(화)	실행위원& 의제작성TFT 합동회의	하반기 기획사업 아이디어 도출
7	7월 18일(월)	의제작성 TFT 2차 회의	의제 목표, 주요지표 논의
8	8월 11일(목)	의제작성 TFT 3차 회의	배경 및 현황, 세부지표 논의 I
9	9월 2일(금)	의제작성 TFT 4차 회의	배경 및 현황, 세부지표 논의 II
10	9월 19일(월)	의제작성 TFT 5차 회의	의제작성을 주제로한 시군의제위원회와의 간담회 기획 및 의제(안) 검토
11	9월 30일(금)	시군의제위원회와의 간담회 (경기 서부권역)	삶의질위원회 의제(안)에 대한 경기서부권역 시군의제 위원회 의견 수렴
12	10월 13일(목)	시군의제위원회와의 간담회 (경기 북부권역)	삶의질위원회 의제(안)에 대한 경기북부권역 시군의제 위원회 의견 수렴
13	11월 2일(목)	시군의제위원회와의 간담회 (경기 남동부권역)	삶의질위원회 의제(안)에 대한 경기남동부권역 시군의제 위원회 의견 수렴
14	11월 25일(금)	푸른경기21 총괄워크숍	의제초안 공유 및 타위원회와의 의제(안) 조율
15	12월 13일(화)	의제작성 TFT 6차 회의	의제최종안 검토
16	12월 19일(월)	제3차 전체회의	최종 의제안 및 2012년 사업기획

※ 삶의질위원회 의제 최종집필 : 임혜경 위원

※ 삶의질위원회 의제작성TFT (가나다순)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2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	류명화	(삶의질위원회 위원장/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5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
6	송원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7	이정희	(삶의질위원회 총무위원/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8	임혜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 의제 최종집필
9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10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2. 의제명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3. 의제목표

목표1.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

목표2.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

목표3.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

4. 의제현황

4-1.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

4-1-1. 경기도민의 다양성

2010년 기준 경기도는 14세미만의 어린이는 2,093천명으로 전국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인구 여성비율은 49.6%이며, 남성비율은 50.4%이다. 노인인구는 1,022천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9.6%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장애인 등록수는 477천명으로 전국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경기도 외국인 거주자수는 266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외국인 거주자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국적이 많으며, 그 중 중국이 50.6%로 가장 높다. 2009년도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27.5%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비율은 1.2%이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9천명으로 전국 최대이며, 2008년 68.2%, 2009년에는 169.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4-1-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환경 특성

경기도민이 살아가는 공간의 시설 및 건축물은 다양한 경기도민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가 2010년 경기도 유니버설가이드라인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환경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구분	환경
공공공간	파손되거나 굴곡이 심한 점자블럭 경계석 턱 낮추기와 보도기울기로 굴곡이 심한 보도 보행이 곤란한 울퉁불퉁한 보도
공공건축물	계단이나 경사로등 단차가 없는 주출입구 휠체어나 유모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보도면의 단차 대기공간의 폭이 좁은 엘리베이터 승강장 위치식별이 어렵고 안내사인이 잘 보이지 않는 공중화장실 어린이나 휠체어를 고려하지 않는 안내카운터 유모차도와 함께 통행할 수 없는 출입문
도시기반시설물	버스정류장과 지나치게 인접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위치를 쉽게 알수 없는 보도육교 동일재료로 마감되어 식별이 어려운 계단 디딤판
가로시설물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가로시설물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중전화 보도면과 단차가 있는 버스승차대
공공정보매체	알기 어려운 버스노선도(작은 글씨, 한국어만 표기, 어려운 그림) 눈에 뜨지 않는 종합안내도 디자인이 강조되어 식별이 어려운 픽토그램

경기도내 공공건축물 및 시설의 환경 특대부분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사례는 대표적인 몇 사례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경기도민의 이해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기도 내의 환경은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활동에 제약과 차별을 줄 수밖에 없다.

4-1-3.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 매체를 디자인 하거나 설치 운영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의 디자인 방향성을 구체화시켜 세부설계지침을 마련하였다(2011).

추진전략에 따르면 경기도는 초기단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정보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표4〉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 3단계 추진전략

구분	연도	주요목표
도입기	2010~2011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작성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입법화 광역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재고 및 기반조성
성장기	2012~2013	광역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산업 육성방안 추진 기초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구축지원 및 유도
	2014~2016	기초지자체별 공공영역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본격적 전개 민간기업 참여지원방안 및 기반마련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실시하여 민간영역으로 확대
정착기	2017~2021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지역산업 및 경제활성화 도모

4-2.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

4-2-1.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즉,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한 씬씀이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예산주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제도에서 중요한 제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고, 유엔에서도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참여 민주주의 확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복구(2003년 시행), 울산 동구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5년 주민참여예산 도입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그 근거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유 없이 교체되는 보도블록 교체 예산 수십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낭비성 예산채정을 막아 내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참여 예산편성 사안의 종류, 예산편성 시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편성 제도 연구회 등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의 성과는 예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지역 재정 및 행정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2010년 6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102개에 이르나, 이 중 실제 적절한 과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진 지역 은 4~5개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1년 9월부터는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 의무시행 즉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갈수록 지방재정과 복지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일부 무원칙한 토목과 건축 예산을 줄여서 복지, 보육,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주민의 요구가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됐고, 일부 시장,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수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부천, 수원, 시흥시 등이다. 부천시는 올해 3월 각 동별로 참여예산주민회의를 구성, 269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5000만~1억원 사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발굴, 설문조사 와 투표 등을 통해 2~3개 사업을 선정해 시에 올렸다. 동 주민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수원시도 2010년 말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참여예산제 시행에 착수했다. 2011년 초부터 구청별 참여예산 시민설명회, 구별 시민위원 모집 및 위촉, 청소년예산학교 등을 개최했다. 그리고 인터넷과 방문접수 등을 통해 166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 구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시흥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

교를 운영했다. 예산학교는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의미, 세입세출구조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 주민들로부터 설문을 받아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양·의왕 등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에 나서는 등 참여예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8월 경기지역에서 수원 시흥 안양 등 17개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조례제정을 비롯해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 9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청년·다문화가정 등 부문별 대표가 전체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경기도내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더욱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인 주민참여도 이어지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4-2-2.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로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공동체 형성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긴밀한 상호부조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며, 자치역량 강화 역시 참여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또 다른 권력화 된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참여주체가 다양하지 않고 참여한 위원들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구성과정에서 여전히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와 위원회 활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위원회 중심의 활동으로 국한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지난 경기의제21 주민자치의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경기지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수준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의제로 추진한 바 있다. 2009년 주민자치

의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위원 선임방식 등에서 한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선임방식에서 공개모집의 비율이 도시형은 65.3%인 반면 농촌은 25% 수준에 그쳐 위원 선임에 여전히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5〉 지역유형별 주민자치위원 선임방식(2009)

구분	그때그때 선임	동장이 주도적으로 선임	위원회 내부에서 선임	참여자들 중에서 선임	공개모집 통해 선임	계
도시형	1.1	1.1	28.4	4.2	65.3	100
농촌형	0	12.5	37.5	25.0	25.0	100
도농복합	0	8.2	28.6	6.1	57.1	100

게다가 공개모집의 방법 및 절차에서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경우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방식이 52.8%로 그 기준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 공개모집의 방법 및 절차(2009)

구분	전혀 안함	응모자를 동장이 선임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후선임	위원들이 선정위원회 구성선임.5	외부인사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임	인턴과정을 거친 후 선임	계
안산	0.0	47.8	34.8	0.0	17.4	0.0	100
군포	0.0	0.0	90.9	9.1	0.0	0.0	100
김포	33.3	0.0	66.7	0.0	0.0	0.0	100
수원	11.1	11.1	66.7	11.1	0.0	0.0	100
안양	6.3	0.0	43.8	50.0	0.0	0.0	100
양주	16.7	0.0	33.3	16.7	33.3	0.0	100
의왕	0.0	33.3	66.7	0.0	0.0	0.0	100
안성	50.0	0.0	16.7	33.3	0.0	0.0	100
화성	18.2	9.1	27.3	27.3	9.1	9.1	100
평택	18.2	0.0	54.5	18.2	0.0	9.1	100
부천	5.6	11.1	77.8	5.6	0.0	0.0	100
고양	0.0	0.0	50.0	45.5	0.0	4.5	100
계	9.4	10.7	52.8	20.1	4.4	2.5	100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비율은 53.4%가 30~50% 수준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은 여전히 절반수준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참여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표7〉 주민자치위원 중 지역유형별 여성비율(2009)

구분	20%미만	20~30%미만	30~50%미만	50%이상	계
계	9.3	29.2	53.4	8.1	100
도시형	5.2	31.3	54.2	9.4	100
농촌형	50.0	31.3	18.8	0.01	100
도농형	4.1	24.5	63.3	8.2	100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할 활성화 정도에 있어 회의에만 참석하는 경우 2.5%, 분과활동이 일상적이지 않은 비율이 19.9%이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25.5%로 48%정도는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8〉 지역유형별 주민자치위원 역할 활성화 정도(2009)

	회의에만 참석	분과활동이 일상적이지 않음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정도	분과위원회별 모임가짐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담당	분과별 역할분담 실제기확집행	계
계	2.5	19.9	25.5	11.8	15.5	24.8	100
도시형	1.0	26.0	26.0	12.5	16.7	21.9	100
농촌형	6.3	18.8	18.8	6.3	18.8	18.8	100
도농형	4.1	26.5	26.5	12.2	12.2	32.7	100

특히 분과는 구성되어 있으나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21.1%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표9〉 지역유형별 분과모임 활성화정도(2009)

	구성되어 있지 않음	정기적이지 않고 필요시 모임	정례화되어 있음	계
계	15.5	63.4	21.1	100
도시형	14.6	65.6	19.8	100
농촌형	25.0	62.5	12.5	100
도농복합형	14.3	59.2	26.5	100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행사정도에 있어서는 센터 재정 등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27.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나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심의등의역할을 하고 있다.

〈표10〉 지역유형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행사정도(2009)

	동장 자문심의기능 지원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심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결정권	프로그램관련 재정에 대한 결정권	센터 재정 등 전반에 관한 결정권	계
계	3.7	31.1	4.3	33.5	27.3	100
도시형	4.2	26.0	4.2	35.4	30.2	100
농촌형	12.5	37.5	6.3	25.0	18.8	100
도농복합형	0.0	38.8	4.1	32.7	24.5	100

주민의견 수렴방법에서도 일정한 참여자 이외에 일반주민을 포괄하여 의견을 듣는 간담회나 직접 주민의 만나는 경우는 각각 8.1%와 3.7%로 낮게 나타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소통에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표11〉 지역유형별 주민의견 수렴방법(2009)

	자치위원 통하는 것 외 특별히 없음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기존 참여자 와 일반주민 대상 설문조사	기존 참여자들과 간담회	일반 주민들까지 포함 한 간담회	조사기간 정하거나 위원들이 직접주민 만나 수렴	계
계	19.9	25.5	22.4	20.5	8.1	3.7	100
도시형	14.6	28.1	22.9	21.9	9.4	3.1	100
농촌형	56.3	12.5	12.5	12.5	6.3	0.0	100
도농복합형	18.4	24.5	24.5	20.4	6.1	6.1	100

도시, 농촌, 도농복합형 도시 등 지역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선임방식이나 절차,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권한정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활성화 정도는 여전히 낮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함
- 참여관련 지표개발에 있어 도시, 도농복합,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할 것을 제안함.
- 교육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역량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이상 북부권역 간담회(2011.10.13)〉

- 다양한 지표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표로 집중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됨.)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주가 되도록 지표구성을 고민할 것을 제안함.

〈이상 남동부권역 간담회(2011.11.02)〉

특히 본 위원회가 의제작성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제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끌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3. 행복한 일자리

일자리 안정성은 무너진지 오래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언제나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민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경기도민의 생활 및 의식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노동종사자를 제외한 고용노동자는 71.9%이며, 상용직 종사자는 3 무7%로 2005년 43.3%에서 4.6% 줄어들었고, 반면 임시직은 2005년 17.9%에서 2009년 26.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12〉 경기도민의 종사상의 지위

구 분	종사상의 지위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05	43.3	17.9	9.6	7.2	15.6	6.4
2006	46.1	18.0	8.7	8.9	12.5	5.8
2007	45.4	15.9	9.7	7.3	16.0	5.8
2008	41.2	21.7	8.9	7.2	15.7	5.3
2009	38.7	26.5	6.7	7.6	15.3	5.2

* 출처 2009년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재구성

고용불안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되는데, 실제 임시직이 급격히 늘어난 2008년과 2009년의 경기도민의 일자리 만족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09년 일자리에 대한 만족은 14.2%인 반면, 불만족은 53.7%로 일자리와 관련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표13〉 경기도민의 일자리 만족도

구분	일자리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2006	29.9	45.9	24.2
2007	32.9	44.7	22.4
2008	13.8	30.0	56.3
2009	14.2	32.1	53.7

* 출처 2009년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재구성

특히 일자리가 불만족한 이유와 관련하여 일의 종류, 복리후생, 안정성에 관한 불만이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변화가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일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2006년 6.1%에서 2010년 14.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도 0.9%에서 3.2%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14〉 경기도민의 일자리 불만족 이유

구분	일자리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					
	임금	안정성	일의 종류	복리후생	근무환경	기타
2006	55.1	16.3	6.1	0.9	12.6	9.0
2007	55.7	14.0	6.8	0.8	14.5	8.1
2008	57.6	13.8	5.9	0.7	14.2	7.8
2009	54.7	15.3	5.6	1.0	15.4	8.1
2010	47.9	18.1	14.2	3.2	14.8	1.7

* 출처 2010년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재구성

경기도민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경기도민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일을 통한 경제적보상과 자아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고용구조의 변화로 일터의 복리후생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한다.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이 가져다주는 고용불안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2011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 정규직 임금이 255만원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125만원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6.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2000년에 정규직의 53.7% 수준이던 비정규직임금이 2010년에 46.9%로 낮아진 것으로 임금격차가 해소되기보다는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15〉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0~2010)

(단위 : 만원, %)

	2000. 8.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 출처: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각종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세 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일자리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인한 각종 고용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도 관심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1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 8851명의 4.56%에 이르는 403명이었으며, 도 산하기관만 감안했을 때는 17.2%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요구되는 활동이다. 또한 행복한 일자리의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모델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5. 주요지표

2012년 : 기초조사, 기초지표 마련
2014년 : 기초지표의 10% 높이기
2016년 : 기초지표의 20% 높이기
2020년 : 기초지표의 40% 높이기

본 위원회는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을 목표로 차별없는 공간에 대한 접근, 주민참여, 행복한 일자리 세 가지 의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의제는 본 위원회가 고민하여 설정한 창의적 의제로 의제출발의 기준선으로 삼을만한 기초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2012년 의제에 대한 기초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2년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주기별로 10%씩 지표를 높여가는 것으로 의제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 또한 기초지표 설정에 있어 2012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농촌, 도동간의 지표에 차별성을 두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삶의 질 지표는 평가항목을 구체화해줄 전략을 중심으로 보조항목을 정리하였으며, 모니터링에 필요한 배점기준은 2012년 모니터링 설계시에 구체화하고자 한다.

〈표16〉 경기도 삶의 질 지표

지표	보조지표		평가 항목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	추진 기반	조례와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²¹⁾ 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다.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정책이 조례로 제정되어 공공디자인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	관련 위원회가 있다.	
		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30% 이상이다.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 이주민 참여가 있다.	
	시민적 공감대	시민교육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교육한다.
		시민모니터링	도시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활동이 있다. 시민모니터링 결과가 환류되어 반영된다.
주민 참여 지표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 구성방식	공개모집 구성비율이 50% 이상이다.
			공개모집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개추첨한다.
		다양한 계층참여	위원 구성시 성비, 세대간 균형을 고려한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위원회의 역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이외에 교육 및 평가를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 이외에 교육, 평가,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예산편성의 시민권한	주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안예산의 결정권한	결정된 우선순위의 예산반영이 70% 이상이다.	
		결정된 우선순위의 예산반영이 100% 이상이다.	
	주민과의 소통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이 3회 이상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이 8회 이상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이 15회 이상	
주민 자치 위원회	위원회 구성방식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공개모집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개추첨한다.	
	다양한 계층참여	위원 구성시 특정성의 비율이 70% 미만이다. 세대간 구성이 다양하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역할	회의 참석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활동한다.
			분과위원회로 편제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으며 활동한다.
			분과위원회별 역할분담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권한	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다.
			주민자치센터 재정전반에 결정권을 가진다.
		주민과의 소통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한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행복한 일자리	노동 격차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여간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간다.	
	행복한 일자리 발굴	행복한 일자리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듣는다.	
		경기도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일자리의 기준을 만든다.	
		행복한 일자리의 기준을 경기도민에게 홍보한다.	
		경기도내 행복한 일자리를 발굴, 선정하여 알린다.	

■ 지표1.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

보조지표 5-1. 추진기반

5-1-1. 조례와 정책 유무

경기도내 시·군·구의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조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경기도는 2011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범조례안을 제시하여 각 기초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권고 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도시전반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추진체계, 조례 및 정책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1)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원적 요구를 수용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존중하는 환경창조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디자인의 철학이자 가치체계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21세기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다.

5-1-2. 다양한 사회 구성원 참여

유니버설디자인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이해가 공간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정에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성, 장애인등 다양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5-2. 시민적 공감대

5-2-1 : 시민교육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진행하여 인식증진을 통해 경기도민 스스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도정에 반응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이 단순히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관계에 있어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나가야 한다.

5-2-2. 시민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을 모니터링하여 그 불편을 해소하거나, 접근성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고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가져온다. 또한 모니터의 결과를 통해 정책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모니터 활동이 점차 증가하도록 해야 하겠다.

■ 지표2. 주민참여 지표

주민참여 지수를 높여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이다. 실제 두 가지 주민참여제도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제도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보조지표는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위원회 구성방식, 다양한 계층비율, 위원회의 역할, 참여자들의 관한, 주민과의 소통 5가지 하분류하고, 평가지표는 제2기 주민자치의제에서 활용했던 평가지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단,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반영하였다.

보조지표 5-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5-3-1. 위원회 구성방식(공개모집, 절차)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한 경우 응모자가 많은 경우 공개추첨의 원칙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5-3-2. 다양한 계층 비율(남녀, 세대, 사회적약자)

위원회 구성시 남녀, 세대간 비율을 고려한 위원선발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회적 약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3-3.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이 회의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이외에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현장 실사, 주민의견 수렴 등의 자체활동이 활성화 되어 역할이 높아지고 그 과정을 통해 주체역량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

5-3-4.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 권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낸 예산규모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지 살피고 주민들을 위한 좋은 예산, 지속가능한 정책 예산이 편성되는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만큼 확대되는가가 시민권한의 핵심이 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한사업에 어느 정도 수준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권한의 척도가 된다.

5-3-5. 주민과의 소통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 찾아가는 예산사랑방, 장애인, 청소년 등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필요가 있다.

보조지표 5-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5-4-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공개모집, 절차)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위원선정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응모자가 많은 경우 동장 또는 위원회가 선임하거나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개모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에서 응모자가 많은 경우에만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4-2. 다양한 계층 비율(남녀, 세대, 사회적약자)

주민자치위원회의 농촌지역을 제하고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여성비율로 정하기 보다는 특정성이 7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세대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비율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어야 다양한 주민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

5-4-3.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최소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이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단위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그 역할을 높일 수 있다.

5-4-4.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상 최고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순한 자문의 역할이 아니라 결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보람도 높이게 된다.

5-4-5. 주민과의 소통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센터 운영과 관련한 활동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지역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된다.

■ 지표 3. 행복한 일자리

5-5-1. 노동격차해소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노동의 안정성과 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5-2. 행복한 일자리 발굴

행복한 일자리는 일자리의 안전성과 기업 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일터일 것이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면서 성차별과 폭력이 사라진 일터가 될 것이다. 의제차원에서 행복한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인지를 모색해 보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행복한 일터를 선정하는 등 행복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간다.

6. 추진전략 : 네트워크와 홍보전략

● 민·관 협력 네트워크

- ▶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지방의제21, NGO 및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
- ▶ 관련 내용별 민간 역량 강화 지원
- ▶ NGO-지방의제21 연계 강화
- ▶ 의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체계 정착

● 시·군의제와의 협력에 기초한 공동 모니터링과 여론 활동

- ▶ 시·군 의제 관련 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분과 사업 연계
- ▶ 모니터링과 보고회, 토론회, 간담회 등 시·군 중심 개최
- ▶ 시·군 의제 위원의 관련 현장 접촉면 확대 - 사업 실효성 제고
- ▶ 광역-기초 지방의제21 사업 연계 모델 창출

● **기획사업을 병행한 홍보전략**

- ▶ 삶의 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경기도민 설문, 교육, 시민캠페인
- ▶ 언론과 연계한 이벤트 추진(도전, 행복한 일터!)
- ▶ 행복체감도 조사를 통한 삶의 질 측정

7. 이렇게 합시다

● **경기도가 할 일**

- 경기도 및 시·군에 삶의 질 의제에 대한 정책제안
- 경기의제21과의 네트워크 및 자료, 정보제공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및 개선

● **경기의제**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 시군의제 대상 교육 및 홍보, 언론 활동 전개
- 행복한 일자리 발굴 기획사업
- 경기도민 행복체감도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의제 확산

● **시·군의제, 관련NGO**

- 삶의 질 의제를 지역의 분과의제로 반영하여 시·군단위에 확산
- 관련 의제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토론회 및 여론 활동
- 기획사업에 적극 참여

● **경기도민**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권리의식 갖기
- 교육 및 시민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8.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은 격년제로 실시한다. 2012년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 2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은 시·군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시군의제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또한 경기도내 시·군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 농촌, 도동간의 차별화된 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해 간다.
- 보조지표인 행복한 일자리는 경기도차원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특히 기획사업과 연계하여 행복한 일자리 시민조사, 행복체감도 조사와 연계한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와 연계하여 행복한 일자리의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 활동도 가능 할 수 있다.
-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는 관련한 다양한 기획사업 및 교육, 홍보, 도민캠페인에 집중하여 활동한다.
- 모니터링의 배점기준은 2012년 기초조사 평가지를 구성하면서 세분화할 예정이며, 기초조사 이후에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경기도,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2011)
경기도, 2011년도 경기도 공공디자인 업무현황(2011)
경기도청 통계자료 경기도민의 생활과 의식(2009, 2010)
내일신문, 2011년 8월 19일 기사- 경기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쟁결음, 곽태영기자
민주노총,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2011)
수원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2011)
이현재,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2010)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9 주민자치의제 사업결과보고서(2009)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각종 자료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지속가능성평생의제

“보존되는 생태계 · 성숙한 녹색경제 · 풍요로운 삶의 질”

1. 의제 작성 배경

1-1. 지속가능성 지표의 필요성

- 21세기 인류에게 있어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발간된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구체화 되었고 지난 20년 간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 및 지수 등 지속가능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에너지·자연자원 공급의 한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위기,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계량화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간·지역간 지속가능발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제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 경제, 환경 등 국가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문들과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지표나 지수로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세계 106개 국가에서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부합하는 지표 및 지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²²⁾ 현재의 환경·자원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국가 및 지역 발전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단위의 77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단위에 기초한 일괄적인 지속가능성 지표와 기준으로는 지역의 문화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22)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p. 3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 물론 지역 수준(regional level)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작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 간에 비교가능한 적정지표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다 더 난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기초 통계자료조차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은 지역의 환경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지역정책당국이 환경적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 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표 모니터링 결과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주요 의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민관 거버넌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 〉

구분	내용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뿐인 지구’ 라는 슬로건 표방, ‘지속가능발전’ 에 관한 논의 시작 • 70년대 환경훼손과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통의 과제로 부상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유엔환경계획 설치 결정 환경보전원칙을 권고하는 유엔인간환경선언 선포
환경과개발에관한 세계위원회 (WCED)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CED가 1987년 발간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에서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공식적 용어가 널리 알려짐 •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로 정의
유엔환경개발회의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맞이하여 리우에서 개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 선언’ 과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 21」 채택 •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구체화 • 의제 21’ 추진 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실적 종합 평가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 강조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WEHAB)’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에 합의 • 2005년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공식화하여 이행에 착수 합의

1-2.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의 목적

- 우리나라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지방 지속가능발전 활동이 2002년 WSSD,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보고서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될 만큼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니터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지방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경기도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비롯하여 30개 시군에 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추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 부재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 로컬 거버넌스 기반 조성, 다양한 의제 발굴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등에서만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 즉 행정과의 연계 및 정책 피드백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거점인 경기도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DIs)를 개발하여 경기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 결과는 지역의 환경 및 경제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이 환경적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주민 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민관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 통합을 지원하는 종합 지표 체제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과정

-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 경기도의회, 외부 전문가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작성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안)을 바탕으로 시범 모니터링을 과정을 주관하였다.

지속가능성 의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 Flow-Chart

기간(월)	주요내용	세부내용
2월	지표 개발 방향 제안	위원장 선출(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제안 및 논의 - 1차 회의(2. 17) ▼
3월	주요 이슈 논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주요 이슈 논의 - 2차 회의(3. 23) ▼
4월	비전-목표-전략-세부과제 논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비전-목표-전략-세부과제 논의 - 3차 회의(4. 6), 4차 회의(4. 20) ▼
5~6월	지표 초안 작성	경기개발연구원(고재경 연구위원) 협력 지표 초안 작성
7월	지표 초안 의견수렴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초안 경기의제21 분야별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 5차 회의(7. 21)
8~9월	지표 초안 보완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초안 보완 지표 초안 시범 모니터링 계획 수립 - 6차 회의(9. 16) ▼
10~11월	시범모니터링 의견수렴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안) 시범 모니터링 결과 분석 - 7차 회의(11. 3) ▼
11월	시범모니터링 결과보고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안) 시범 모니터링 결과 경기의제21 분야별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차 회의(11. 25) ▼
12월	지표 작성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작성 2012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측정 계획 수립

2. 의제명

보전되는 생태계 · 성숙한 녹색경제 · 풍요로운 삶의 질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보전되는 생태계 · 성숙한 녹색경제 · 풍요로운 삶의 질”을 비전으로 하여 6대 목표아래 17개의 전략과제 및 64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3. 의제목표

① 녹색경제로의 전환

- 녹색생산과 소비,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건전한(good) 경제성장

②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③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환경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④ 수요자 맞춤형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 고령화 대응,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 도시 어메니티 증진, 문화여가 활동의 향유,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⑥ 책임 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배려

- 시민참여 활성화, 능력 있는 시민, 미래세대 배려

4. 의제현황

4-1.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 화석연료 및 자연자원 고갈, 물부족 심화, 생물종 멸종, 기후변화, 열대림 파괴 및

사막화, 식량 위기 등 지구 환경문제 심화하고 있다. OECD 보고서²³⁾에 의하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등의 적신희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²⁴⁾, 그 피해가 저개발국,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기후 부정의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2007년 유엔총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형평성, 세대내 지역 간,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 세계화, 기술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로 산업기압지역, 고용소득의 양극화²⁵⁾,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어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편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10)로 OECD 국가 중 최저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대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환경·에너지 문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모델로 녹색경제 패러다임 확산되고 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저탄소 발전전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이에 MB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주요전략으로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국가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자원 관리, 녹색경제를 주요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발전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된다.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의 내용으로는 국제협력 및 합의 이행의 국가 단위 대응 전략으로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

23) OECD(2009), *Environmental Outlook 2030*

24) 토마스 프리드먼은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트렌드의 하나로 지구온난화를 꼽음.

25) 정부·민간 합동작업단(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p. 11

이라는 비전 아래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리고 지역별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수립·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의제 21」 28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 21」 수립과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2010년 12월 기준 전국 248개 지자체 중 221개(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205개) 지자체가 「의제 21(Agenda 21)」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실천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지방의제21 작성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²⁶⁾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대 전략 및 이행과제〉

I.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II.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1) 국토·도시의 통합성 강화 및 구조 구축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3) 지속가능한 연안해양환경 관리 4) 토양오염 관리체계 강화 5) 지속가능한 습지관리 기반 마련 6) 생물다양성 확보 7)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8)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방재 대책 9) 지속가능 발전 교육·홍보 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탄소저감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2) 탄소배출원의 투명성 제고 3)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원 증대 4) 기후변화 조기대응체계 구축 5) 국가 식량 안보체계 확립 6)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 발굴 강화
III.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IV. 경제 및 산업 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1)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진 2)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3)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4)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 5) 공공보건의료 강화	1)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2)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3)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증대 4)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26) 권기태(2011),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방의제 21”, 『한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연구』, 전국지속가능발전 정책워크숍 자료, p. 26

〈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 방향 〉

전략	정책 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4-2. 경기도 주요 계획의 정책 방향

-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 민선 5기 공약은 복지, 균형발전, 경제, 생활환경 등 5대 분야 14개 전략 포함하고 있다.
-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2010~2014)은 9개 분야 129개 과제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 종합계획(2011~2020)은 4대 목표와 8대 기본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 경기도 주요 정책 및 계획 과제 〉

I. 민선 5기 공약 주요 전략 과제			
따뜻한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 부모안심 보육 실현 	행복한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물, 녹색환경 조성 • 좋은 학교·평생교육 기반 마련 •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지원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종합발전 추진 • 체계적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 남북협력 기반조성 		새로운 경기도
활기찬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 		

II.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2010-2014)			
대한민국 녹색신산업 중심지 경기도	1.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3. 산업구조 고도화 4. 녹색경제기반 조성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변화 적응 체제 확립	6.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7.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8. 에너지 절약 및 자립 강화
녹색도시 교통의 글로벌 선도지역 육성	5. 녹색도시 교통의 조성	도민참여형의 녹색생활 혁명 추진	9. 생활 속의 녹색실천
III. 경기도 종합계획(2011-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역할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 건강한 녹색사회 실현 •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거점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체계 완성 •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 •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녹색교통체계 완성 • 품격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실현 • 매력 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4-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과제

주요 과제	내용
녹색경제로의 전환 및 지역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생산과 소비,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 - 건전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 기상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필요 - 에너지 효율성 향상 - 분산형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의 이용과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용량은 0.51Gha로 생태적자 발생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는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에 대응한 공동체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는 지속가능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노인 일자리,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사회 기반 조성 - 사회 취약계층 소득 증대, 주거, 에너지, 건강, 환경,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
도시 어메니티, 삶의 질에 대한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향상으로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 증가 - 녹색건물, 녹색교통 등 에너지 절약형 도시 인프라의 중요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합리적인 규범을 토대로 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증가 - 민관 파트너십이 확대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투자

5. 주요지표

5-1. 지표 선정 시 고려사항

- 평가의 일관성, 측정의 편의성을 위해 최대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지표 선정
-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지표는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 활용 및 필요 시 별도 설문조사 진행
- 사회적 경제 확대, 기후변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녹색성장 등 패러다임 변화와 경기도 주요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표에 반영
- 민관 파트너십 확산을 위해 ‘경기의제21’ 분야별 지표를 검토하여 모니터링 활동과 지속가능성 평가 연계
- 64개 지표의 하위 지표를 다수로 제시하여 지표 운영의 신축성 부여

5-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6대 목표와 17개 과제 및 세부 지표

목표	전략	지표
I. 녹색경제로의 전환	1-1. 녹색생산과 소비	1-1-1. 기업의 녹색경영 1-1-2. 산업구조 고도화 1-1-3. 녹색소비
	1-2.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1-2-1. 로컬푸드 활성화 1-2-2. 친환경농업 1-2-3. 사회적 기업
	1-3. 건전한(good) 경제성장	1-3-1. 경제성장과 소득 1-3-2. 고용 안정 및 안전 1-3-3. 실업률 1-3-4. 중소기업 육성
II.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	2-1.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2-1-1. 자연재해 피해 2-1-2. 취약계층 적응 2-1-3. 물순환 2-1-4. 토지이용 2-1-5. 적응 기반
	2-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2-2-1. 온실가스 배출량 2-2-2. 에너지 효율성 2-2-3. 탄소집약도 2-2-4. 신재생에너지 2-2-5. 정책기반
III.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1. 환경질 개선	3-1-1. 대기질(NOx, PM10, O3) 3-1-2. 하천 및 호소 수질 3-1-3. 실내공기질
	3-2. 생물다양성 증진	3-2-1. 자연보호구역 3-2-2. 생물다양성
	3-3.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3-3-1. 수자원 3-3-2. 에너지 3-3-3. 폐기물 3-3-4. 생태발자국
IV. 수요자 맞춤형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4-1. 저출산 고령화 대응	4-1-1. 보육 4-1-2. 노인 일자리 4-1-3. 노인 복지
	4-2.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사회	4-2-1. 성평등 인식 4-2-2. 가족친화인증 프로그램 4-2-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4-2-4.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4-3.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4-3-1. 복지 서비스 4-3-2. 사회적 취약인구 4-3-3. 장애인 복지 및 일자리 4-3-4.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V.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5-1. 도시 어메니티 증진	5-1-1. 녹색건물 5-1-2. 녹색교통 5-1-3. 공원녹지 5-1-4. 주거생활만족도 5-1-5. 저탄소 녹색마을
	5-2. 문화·여가 활동의 향유	5-2-1. 문화시설 5-2-2. 체육시설 5-2-3. 문화예술 활동 참여 5-2-4. 공공도서관 이용
	5-3.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5-3-1. 자살율 5-3-2. 범죄율 5-3-3. 교통사고 발생률 5-3-4. EQ-5D 삶의 질 5-3-5. 의료서비스 5-3-6. 문화적 다양성
VI. 책임 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6-1. 시민참여 활성화	6-1-1. 주민참여 6-1-2. 지방의제21 지원 6-1-3. 주민참여 제도
	6-2. 능력있는 시민	6-2-1. 자원봉사활동 참여 6-2-2. 주민역량 강화 교육
	6-3. 미래세대 배려	6-3-1. 청소년 복지 6-3-2. 아동복지 6-3-3. 교육의 질 6-3-4. 미래세대 정책참여

5-3. 지속가능성 지표 시범 평가 결과

5-3-1. 녹색경제로의 전환

전략	지표	세부지표	단위	긍정 방향	최근 추세	최근 현황 (기준년 '06-10)				
녹색 생산과 소비	기업의 녹색경영	녹색전문기업·기술·사 업 인증 증가율 ※ 증가율은 자료 부족	기업	건	+	↗	7('10)	19('11)		
			기술	건	+	↗	85('10)	116('11)		
			사업	건	+	↘	5('10)	1('11)		
		ISO 14001 인증 기업	%			↘	0.33('06)	0.29('09)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에너지 효율성	toe/ 백만원		-		↘	0.015 ('06)	0.011 ('09)	
		서비스업 총 부가가치 비중	%		+		↗	0.617 ('06)	0.618 ('09)	
녹색소비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		+		↗	65('07)	82.5('10)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개소		+				1개('11)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시장점유율 지수								
		도시 농업 기반 지수								
		식생활 교육지수								
	친환경농업	친환경 농가수	%		+		↗	3.7('06)	5.7('10)	
		친환경 농업 면적			+		↗	2.7('06)	4.2('10)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수								
※ 인증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수		개		+		↗	87('10)	101('11)		
		명		+		↗	2,591('10)	2,861('11)		
건전한 (good) 경제 성장	경제성장과 소득	1인당 GRDP	백만원/ 인		+		↗	16.71 ('06)	18.49 ('09)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		+		↘	7.7('06)	1.0('09)
			북부/남부 균형발전			-		↗	1.91('01)	2.05('08)
		재정지립도	%		+		↘	75.2('06)	72.5('11)	
	고용 안정 및 안전	비정규직 근로자	%		-		↗	30.81('06)	32('11)	
		산업재해	재해율	%		-		↘	0.87('06)	0.81('10)
			사망만인율	명		-		↘	1.79('06)	1.35('10)
		재정지립도	%		+		↘	75.2('06)	72.5('11)	
	실업률	실업률	%		-		↗	3.6('06)	4.0('10)	
		청년실업률	%		-		↗	6.9('06)	8.4('10)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부가가치	%		+		↗	58.9('06)	59.3('09)		
	중소기업 생산액	%		+		↘	49.4('06)	47.6('09)		

5-3-2.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

전략	지표	세부지표		단위	긍정 방향	최근 추세	최근 현황 (기준년 '06-'10)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 피해 규모	인명	명	-	↘	8('06)	5('10)
			재산	백만원	-	↗	68,004('06)	74,953('10)
	취약계층 적응	장기요양보호		명/1인	+	↘	0.69('09)	0.99('10)
		미급수인구 비율		%	+	↘	7.4('06)	4.3('09)
		풍수해 보험 가입		%	+			7.5('10)
	물순환	불투수 면적		%	-	↗	7.7('06)	13.4('07)
		하수재이용		%	+	~	10.8('08)	10.8('09)
	토지이용	하천부지 점용		%	+	↗	3.91('06)	3.93('10)
		산림 면적		%	+	↘	52.1('06)	51.8('10)
		경지 면적		%	+	↘	19.0('06)	17.8('10)
	적응기반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녹색시민 양성		명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tCO2	-	↗	69,961천('04)	81,188천('07)
	에너지 효율성	GRDP 대비 에너지소비량		toe/백만원	-	↘	0.15('06)	0.12('09)
	탄소집약도	청정에너지 사용		tCO2/t oe	-	↗	3.25('03)	3.44('07)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	+	↗	2.76('06)	2.2('09)
	정책기반	기후변화종합계획 이행						

5-3-3.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	지표	세부지표		단위	긍정 방향	최근 추세	최근 현황 (기준년 '06-10)	
환경질 개선	대기질 (NOx, PM10)	NOx	1시간	회/ 관측소	-	↘	34('07)	11('10)
			24시간	회/ 관측소	-	↘	14('07)	10('10)
		오존		회	-	~	17('07)	17('10)
		PM10		회	-	↗	481('06)	1,933 ('10)
	하천 및 호소 수질	주요 하천 수질	한강수계	개소/ 지점	+	~	1/13('08)	2/13('11)
			임진강 수계	개소/ 지점	+	↘	5/9('08)	4/9('11)
			안성천 수계	개소/ 지점	+	~	1/15('08)	2/15('11)
		주요 호소 수질		개소/ 지점	+	↘	7/29('08)	5/29('11)
		생태하천 복원		백만원	+	↗	21,094 ('08)	690,942 ('11)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회/ 시설수	-	~	0.25('07)	0.23('10)
생물 다양성 증진	자연보호구역	별도관리구역		%	+	~	2.77('10)	2.77('10)
	생물다양성	주요 서식처 철새 개체수						
		비오톱 지도 작성		개	+	↗	1('08)	3('10)
자연 자원의 현명한 이용	수자원	1일 1인당 급수량		ℓ	-	↘	330('06)	314('09)
		지하수 이용량/개발가능량		%	+	~	48.5('06)	51.6('09)
	에너지	1인당 가정 에너지 소비		toe/인	-	↗	0.57('06)	0.61('09)
	폐기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일	-	↗	0.83('06)	0.87('09)
	생태발자국	1인당 생태발자국		gha			3,8165 ('06)	
생태적자		g/인			-3.31 ('06)			

5-3-4. 수요자 맞춤형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	지표	세부지표		단위	긍정 방향	최근 추세	최근 현황 (기준년 '06-10)	
저출산 고령화 대응	보육	전체 보육시설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개	+	↗	13.1('06)	18.2('10)
			유아 보육시설 정원	%	+	↗	47.7('06)	62.7('06)
		직장 보육시설	보육시설 증가율	%	+	↘	11.6('07)	8.0('10)
			보육아동 수 증가율	%	+	↗	8.0('07)	14.8('10)
			보육교사 증가율	%	+	↘	21.4('07)	13.6('10)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시설 증가율	%	+	↘	14.7('07)	9.7('10)
			보육아동 수 증가율	%	+	↗	7.9('07)	12.0('10)
			보육교사 증가율	%	+	↗	9.1('07)	15.2('10)
		노인 일자리	노인 경제활동 참여		%	+	↘	34.3('06)
	노인 복지	노인 복지시설	노인천명당 복지시설수	개	+	↗	0.26('06)	0.83('10)
노인 복지시설 정원			%	+	↗	1.1('06)	2.5('10)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	+	↗	80.51('09)	88.3('11)		
가족 친화적 이고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 인식	성평등 교육		회	+	↘	79('07)	60('10)
	가족친화 인증 프로그램	가족친화인증 프로그램 시행		개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		%	+	↘	49.3('06)	47.9('10)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	-	↗	40.12('07)	40.53('10)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위원회 여성참여		%	+	↗	31.5('06)	35.7('09)
		5급이상 여성 공무원		%	+	↗	7.1('06)	9.0('09)
		핵심 부서 여성 공무원		%	+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복지 서비스	복지예산		%	+	↗	14.70('06)	16.15('07)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	↗	3.8('06)	4.2('10)
	사회적 취약인구	기초생활수급자		%	+	↘	1.9('06)	1.77('10)
		독거노인		%	+	↗	17.55('07)	22.3('10)
	장애인 복지 및 일자리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천명당 생활시설	개	+	↗	0.14('06)	0.21('10)
			장애인 생활시설 정원	%	+	↘	0.96('06)	0.88('09)
		장애인 고용		%	+	↗	1.57('07)	2.22('10)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	↗	11.2('07)	12.3('10)

5-3-5.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전략	지표	세부지표	단위	긍정 방향	최근 추세	최근 기준년 ('06-10)	현황 (06-10)	
도시 어메니티 증진	녹색건물	녹색건물 관련 인증		건	+	↗	163('06) 692('10)	
		그린홈		%	+			
	녹색교통	대중 교통	버스이용	대	+	↗	0.72('07)	0.83('10)
			철도이용	역사수/	+	↘	1.35(07)	1.32('10)
		녹색교통	친환경자동차	%	+	↘	0.008('07)	0.001('10)
			자전거 이용	m/인	+	↗	0.18('07)	0.24('10)
	공원녹지	1인당 공원면적		m3	+	↘	18.1('06)	17.9('09)
		시가화면적대비 도시공원		%	+	↘	5.4('06)	5.0('09)
주거생활 만족도	주거생활만족도		점	+	↗	21.1('07)	37.9('10)	
저탄소 녹색마을	저탄소 녹색마을 수			+				
문화·여 가 활동의 향유	문화시설	문화공간		개	+	↗	4.74('06) 7.01('09)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개	+	↗	3.07('06) 6.19('09)	
	문화예술 활동 참여	문화관람	문화관람 인구비율	%	+			
			평균 문화관람횟수					
	동아리 모임 활동							
	공공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시설		개	+	↗	0.9('06)	1.2('09)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간 이용자소수 비율	%	+	↗	3.65('06)	5.80('09)
			시민 1인당 연간 대출책수	권	+	↘	5.77('06)	3.04('09)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자살율	인구 십만명당 자살율		인	-	↗	20.5('06) 29.5('10)	
	범죄율	인구 십만명당 범죄발생률		건	-	↘	3,949('06) 2,970('09)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	↘	11.4('06) 10.39('09)	
		교통안전지수			+	↗	75.1('08)	79.2('10)
	EQ-5D 삶의 질	EQ-5D 삶의 질		%	+	↘	0.962('06) 0.957('08)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병상수	+	↗	6.7('06)	8.09('09)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점	+	↗	17.7('06)	42.9('10)
	문화적 다양성	한국어 교육	서비스 비율	횟수/ 17구	+	~	33.59('09)	33.46('10)
			지도사수	명	+	↘	256('09)	204('10)
		이동양육	서비스 비율	횟수/ 17구	+	↗	33.1('09)	36.3('10)
지도사수			명	+	↘	308('09)	186('10)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실적		가정수	가구	+	↗	2,390('06)	3,015('10)	
		지도사수	명	+	↘	573('06)	390('10)	

5-3-6. 책임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전략	지표	세부지표		단위	긍정 방향	최근 추세	최근 (기준년 '06-10)	현황 '06-10)
시민 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 비율	%	+	↗	0.095('07)	0.148('10)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주민 비율	%	+	↗	0.0019 ('08)	0.002 ('10)
		위원회 개최		건/ 위원회	+			
	지방의제21 지원	지방의제21 예산		백만원	+	↘	900('07)	800('10)
	주민참여 제도	주민참여 관련 조례		건	+			
능력 있는 시민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	+	↗	3.45('06)	8.68('09)
		헌혈자		%	+	↗	1.28('06)	1.41('09)
	주민역량 강화 교육	평생 교육	성인인구 당 평생교육 학생자 비율	%	+	↘	52.69 ('07)	15.53 ('10)
			평생교육프로그램 일반	개	+	↗	14,682 ('09)	17,788 ('10)
			평생교육프로그램 입시	개	+	↗	42('09)	30('10)
평생교육 참여 비율			%	+			16.2%('10)	
미래 세대 배려	청소년 복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수/ 십만명	+	↗	0.45('06)	0.89('10)
		청소년 수련시설		개/ 십만명	+	↗	0.81('06)	4.53('10)
		청소년 문화존		개/ 십만명	+	↗	0.16('06)	0.66('10)
		아동청소년 동아리 지원		건	+	↗	94('06)	440('10)
	아동복지	아동복지교사		명/ 십만명	+	↘	108.9('06)	96.2('09)
		지역 아동 센터	아동인구 십만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개	+	↗	88.2('06)	109.9('09)
			아동인구 십만명당 아동센터종사자수	명	+	↗	208.2('06)	251.1('09)
		아동학대		건	-	~	1,139('06)	1,225('10)
		소년소녀 가정		명	-	↘	334('06)	189('10)
	교육의 질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	↘	25.4('06)	21.6('10)
	미래세대 정책참여	청소년 정책참여		%	+			

5-4. 지속가능성 지표 시범 평가 시사점

-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통계 자료 활용 가능,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과제는 향후 통계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임.
-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지표 자료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평가 필요
-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경우 특히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에 대한 자료 축적과 모니터링 필요
- ‘수요자 맞춤형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책임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과제 등은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병행 필요

< 지속가능성 시범평가 결과 >

목 표	주요결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에너지 효율성 증가, 녹색소비는 긍정적 방향 • 사회적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 부문은 향후 모니터링 필요, 친환경농업 부문은 증가 추세 •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남북부간 소득격차 확대, 재정자립도 감소,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생산액 비중 감소 등 건전한 경제성장 부문 취약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증가, 하천부지 점용 증가, 산림면적, 경지면적 감소 등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증가 요인 • 온실가스 배출 증가, 탄소집약도 증가는 부정적 신호, 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 추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하천 수질은 대체로 개선 추세, 호수 수질은 정체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부족 •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 반면 급수량, 폐기물 발생량 감소
수요자 맞춤형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증가, 증가율은 둔화, 노인 복지시설도 증가 추세, 하지만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최근 감소,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개선 • 독거노인 비율 증가, 장애인 인구 대비 시설 정원 감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자전거 등은 점차 개선, 1인당 공원면적 증가, 주거생활 만족도 증가 • 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및 만족도 등 인프라 증가, 하지만 문화활동 향유 등은 자료 부족으로 모니터링 필요 • 자살률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문화적 다양성 관련 통계만으로 평가에 한계,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책임 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 참여 주민, 지방의제21 예산 등 시민참여 부문 약간 개선, 통계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참여 활동, 제도적 기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자원봉사 활동 증가, 평생교육 등 주민역량 교육 증가 등 사회적 자본 증가 • 청소년 대상 문화 공간, 수련시설, 동아리 활동 증가 • 미래세대 정치참여는 모니터링 필요
-------------------	--

6. 추진전략

6-1. 매년 지속가능발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서로 발간

- 통계자료, 모니터링 활동에 의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표는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 설문조사, 심층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2년마다 평가하여 정량적 평가 보완

6-2.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과 정책 피드백 기능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모니터링 자료 제공으로 정책의 상충성 방지 및 행정계획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지속가능성 추이, 도민의 정책만족도 등을 토대로 정책 수요 파악 및 우선순위 도출
 -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모호한 개념을 구성 요소별로 측정가능한 형태로 제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지침 역할
- 기초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안)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 영국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정부 삶의 질 지표 개발, 활용 권고²⁷⁾

27) 커뮤니티 안전, 환경, 커뮤니티 통합과 참여, 경제적 복지 등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영역을 포괄하는 45개 지표 및 기타 지표(국가 통계가 없지만 중요한 지표) 제시

6-3. 경기도 주요 정책,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정책 홍보

-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표하여 도민 이해 증진 및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세부 과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결과 제시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주요 과제,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공무원의 인식 향상에 기여
- 학교 지속가능발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주제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6-4.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사업 발굴

- 지속가능발전 진단은 목표에 대한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관 협력 촉진기제로 작용
 - 행정만으로 정책 집행과 모니터링에 한계
- 지속가능발전 취약 부문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모범사례를 만들어 성과를 공유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정책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6-5. '경기도민 인식 및 생활조사' 연계 활용 및 통계 구축

-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경기도민 인식 및 생활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지표 반영 및 개선
 - 서울서베이의 기초적인 정보는 도시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설정에 지침 역할
- 지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시계열 D/B를 구축하여 정책 모니터링에 활용함으로써 행정통계의 한계 보완
- 생물다양성 보호, 교육, 시민참여 등 계량적 통계 확보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여 결과물을 정책 자료로 활용

7. 이렇게 합시다

7-1. 경기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공동의 경기도 지속가능성 관리 협력 체계를 갖춘다.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의 도정에 반영하고 그 성과 적극 홍보한다.
- 경기도 주요 정책 자료 및 통계 현황을 공유한다.
- 경기도민 인식 및 생활조사 항목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정성평가 설문을 실시한다.

7-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개발연구원 등 주요 도정 기관과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정기적인(격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측정과 보고서 발행을 추진한다.
- 지표 평가를 보완하면서 도민과의 용이한 소통을 위해 생태발자국 측정을 격년으로 추진한다.

8. 모니터링

8-1. 모니터링 주체 및 방법

- 정책지표의 경우 경기도의 통계 결과 협조를 얻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개발연구원(환경정책연구부), 기타 지속가능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자료의 수집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한다.
- 생물다양성, 녹색사회경제 등의 지표의 경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5개 분야별 의제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연동하여 측정하고 시군의제21 및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사업 성과를 반영한다.

8-2. 모니터링 범위 및 주기

- 6대 목표 전 범위에 대한 정량평가와 도민 생태발자국 조사 및 삶의 질 정성평가의 격년 실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요구와 평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제7기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	권기태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기획실장
3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평가관리과장
4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의모임 대표
5	김낙경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7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8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9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0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1	한순금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팀장
12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13	김현삼	경기도의회 도의원(기획위원회 위원)
14	송영주	경기도의회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15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제3차 경기의제21 작성



시·군·구의지사항협의제

“때론 또 같이, 나눔과 협력으로 만드는 책임 있는 지방의제21”

1 의제작성배경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확산

1992년 UNCED (유엔환경과개발에관한회의)에서 의제21(Agenda21)이 채택된 이후, 경기지역에는 안산(1996)과 수원(1998)에서 처음 지방의제21을 시도 또는 추진하였고, 광역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로써 경기도는 1998년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경기도의 지방의제21 활동을 시작함.

그 이후 약 10여년이 흐른 2008년 6월, 경기도에는 동두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창립하였고, 지방의제21 민간사무국을 설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경기지역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31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활동하기에 이르렀음.

〈 표1. 경기도 내 시·군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립연도 〉

구분	설립연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립지역
	1996	안산시 (2001)*
	1997	수원시
	1998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1999	광명시, 성남시, 평택시, 의왕시
	2000	부천시, 의정부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포천시, 용인시, 고양시
	2001	안산시, 김포시, 안성시, 연천군,
	2002	파주시, 가평군, 남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2003	오산시(2007)*, 화성시,
	2005	양주시,
	2007	오산시
	2008	하남시

* 표는 지방의제21을 창립하였으나, 정상화되지 않다가 재창립의 과정을 거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임. ()안의 숫자는 재창립 연도.

■ 광역-기초 지방의제21 협력을 위한 지속적 노력

푸른경기21은 창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푸른경기21 창립초기에는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창립과 의제작성을 촉구하고, 도내 관련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의 지방의제21 추진 지원을 촉구하여 도내 지방의제21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음.

도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확산됨에 따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광역과 시군 지방의제21 연계 강화를 위해 푸른경기21 조직 내 시군 지방의제21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과를 신설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방의제21 관계자간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도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간 사업 내용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푸른경기21 위원 구성 시 시·군의제 추천 위원의 푸른경기21 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도내 권역별 시군 공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동가를 위한 실무자 연수를 개최하여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하나 된’ 네트워크로서 거듭나야 할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푸른경기21이 지속적으로 광역-기초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광역-기초 간 현안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임.

그러나 31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현실은 시군별 지역 특성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시군별 행정구역의 크기, 인구규모, 자연적 특성과 재정여건 등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등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지역적 특성은 지방의제21 추진 여건과 특성에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지방의제21 추진 역량의 지역적 편차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의제21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력 체계로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동일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적 실천을 지향하는 네트워크로서 상호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적 편차를 넘어 조직과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15년간 경험을 축적한 민·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산, 지방의제21

1998년 출범이후 약 15년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써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며 네트워크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음. 이러한 경험은 개별 조직으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만의 것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21세기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써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함. 나아가 지방의제21의 사회적, 공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로서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두 가지 역할

광역단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적 지원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함.

■ 체계적인 시·군 협력을 위한 의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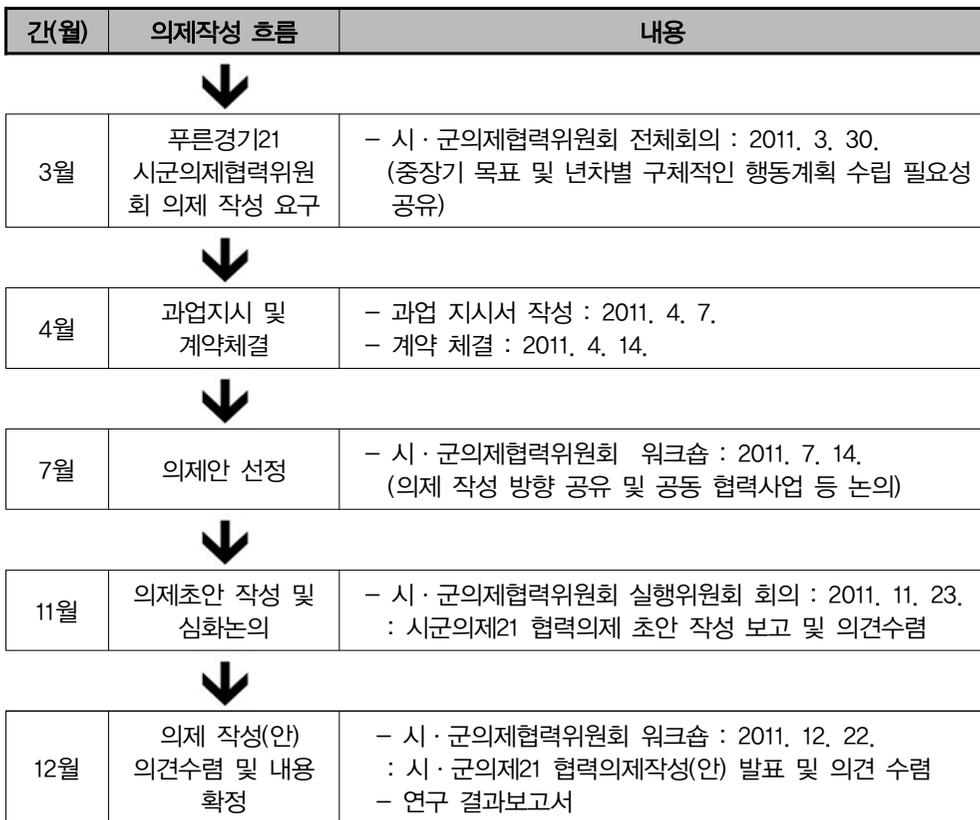
푸른경기21은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의지와 협력의 방향을 명확하고 폭넓게 공유하기 위한 ‘의제’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음.

제3차 「경기의제21」 의제 재작성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제2기 ‘경기의제21’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지역의 도시지속가능성 지표로서의 경기의제21, 경기도 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

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기반 한 ‘경기의제21’ 실천전략 마련,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하는 2011년 제3기 경기의제21을 재작성하고 있음.

푸른경기21 제3차 ‘경기의제21’ 재작성에 발맞추어 푸른경기21은 도내 시군 지방의 제21 추진기구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동시에 지원체로서 광역-기초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간 협력 과제를 ‘의제’화 함으로써 ‘경기의제21’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함.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작성 Flow-Chart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의제명 : 따로 또 같이, 나눔과 협력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지방의제21

비전 : 사람, 지방의제21,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시민 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 목표
-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교류하며 만드는 책임있는 지방의제21
 - 학습하며 일하는 역량있는 활동가, 능력있는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 광역, 기초 간 협력적 사업 추진 기반 강화
 - 함께 기획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향력 있는 지방의제21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사회적 자산, 지방의제21 네트워크

단계별 목표	제1단계 목표 추진기반정비 2011~2013	제2단계 목표 사업연계강화 2013~2014	제3단계 목표 의제내용 연계 확대 2014~2016
주요과제	협력의제개발 협력대규모개발 -조직구성과운영 -사업추진 -체계적교류협력 민관파트너십 프로그램 의제실천 시상	협력대규모 적용 -조직점검 -협력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구축 의제이행보고서 민관협력인프라확대 사회적책임보고서	광역기초 의제연계 역량있고 책임있는 민관협력기구 평가 협력의제 수정

2. 의제명

따로 또 같이, 나눔과 협력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지방의제21

3. 의제비전과 목표

3.1 비전

- 사람, 지방의제21,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 ‘시민 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네트워크

3.2 목표

- 위원 -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교류하며 만드는 책임있는 지방의제21
- 실무역량 강화 - 학습하며 일하는 역량있는 활동가, 능력있는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 광역·기초 간 협력적 사업 추진 기반 강화
 - 함께 기획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향력 있는 지방의제21
- 하나 된 네트워크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민관협력의 사회적 자산, 지방의제21

3.3 단계별 목표

의제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기반 정비, 사업연계강화, 지방의제21 내용의 연계강화를 핵심 목표로 단계별 의제목표를 설정함.

〈표〉 경기지역 시·군의제21 협력의제 단계별 목표

단계	핵심과제	주요 활동 목표	추진일정
의 제 작 성			2011
1	추진기반 정비	지방의제21 조직기반 정비 지방의제21 인적역량 강화기반 정비 지방의제21 사업연계 기반 정비	2012~2013
2	사업연계 강화	지방의제21 조직 연계 확대 지방의제21 인적 역량 강화 지방의제21 사업 연계 확대	2013~2014
3	의제연계 확대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조직의 유기적 연계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 역량 강화 확대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업의 유기적 연계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내용의 유기적 연계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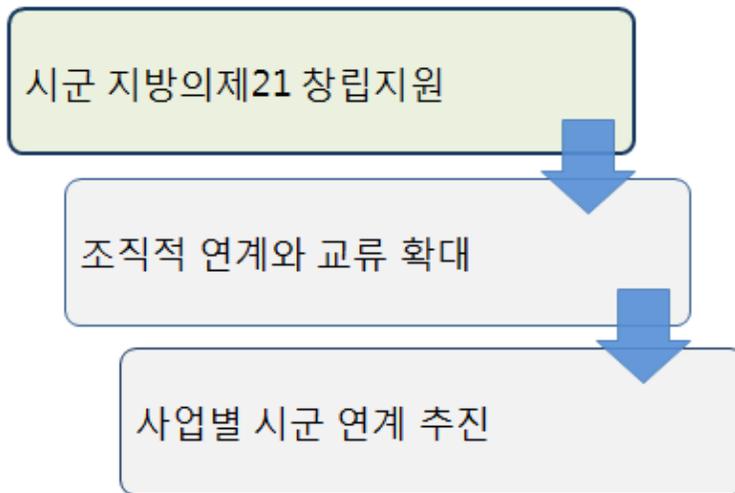
4. 의제현황

4.1. 광역·기초 협력을 위한 노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도 내 시·군 지방의제21 협력 과정 변화 추이

1998년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으로 출발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조직 지원과 시군의 지방의제21 작성 지원을 초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확산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역과 기초 시군과의 조직적 연계와 협력적 사업추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음.

2008년 푸른경기21 10년 활동 평가를 위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또는 협력 정도’를 채택함. 이는 광역의제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고유 위상 및 실천 형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시군과의 협력 정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광역기초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흐름>

■ 도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창립지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1998년 제1기 경기의제21인 ‘푸른경기21’을 작성할 때부터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에 지방의제21 작성 및 추진기구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푸른경기21’ 작성 시 경기도의 환경 현안을 고려하여 8분야 의제를 작성하면서, 작성 분야를 지역별로 분담하였고, 주관단체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기초 지자체들이 시급히 의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기초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립을 자극하기 위함이었음.²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창립 이후 초기 사업 추진 시에도 도내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의제 관련 실천사업을 공모하여 실천사업을 진행하였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 등 지역 대표자들에게 지방의제21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지방의제21 작성 및 실천에 대한 일선 시군의 이해를 협조를 위해 21개 시군 지방의제21 담당자 교육을 경기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등 행정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2000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조직 내에 ‘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년 6월에는 시흥의제21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였고, 경기지역 시군의제21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경기지역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운영위원장 13인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의제 활성화를 위한 푸른경기21과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또한 2000년에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경기도로 유치하여 행정과 시민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조직적 연계와 교류를 통한 시·군의제와의 협력 기반 확대

2000년 설립한 교류협력위원회는 2001년 정식 분과 중의 하나인 ‘교류협력분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해마다 단위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푸른경기21 운영위원회에

28) 푸른경기21 10주년 보고서 제2장

참여하는 시군의제21 대표의 수도 2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였음. 이는 광역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로서 도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음. <표 참조>

<표> 푸른경기21 내 기초의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변화 추이

연도	단위조직명	구성과 특징	푸른경기 운영위원 수
2000	교류협력특별위원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와 공무원	2인
2001	교류협력분과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2인
2002	기초의제협의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대표자회의 성격 시군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추천하는 자 포함	2인 (위원장과 총무)
2003	교류협력위원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장	4인 + 1인 (위원장과 권역간사 4인)
2007	기초의제협력위원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장	
2011	시군의제협력위원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장	

2001년에는 시·군 지방의제21추진기구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였으며, ‘경기지역 기초의제 실무자 연수 및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음.

2002년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에 ‘기초의제협의회’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기초의제 추진기구 대표자회의로서의 성격을 지니도록 하였으며, ‘기초의제협의회’에는 기초의제 사무국장 뿐 아니라 기초의제에서 추천하는 위원까지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였음.

2003년에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관계자 연수, 기초의제 사무국장단 워크숍 등이 추진되었고, 운영위원장 간담회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음.

■ **공동 사업 중심의 시·군의제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 확대**

2004년 이후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한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정착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간담회 등 교류 사업 보다는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 사업이 확대되었음.

〈표〉 2004~2006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내용

연도	사업	세부내용
2004	권역별 공동사업	▶ 남부: 지역 상호간 청소년 하천생태교실 ▶ 동부: 한강 상류 네트워크 구성 사업 ▶ 서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사업 ▶ 북부: 한북정맥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지방의제21 실무자 리더십 개발
	지방의제21 공동사업과 발전방향 토론회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와 공동주최 ▶ 광역·기초의제21 공동사업 및 발전방안 논의
2005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훈련, 지방의제21 활동 아젠다 토론을 통한 비전 점검과 역량강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백서 제작	▶ 기초의제별 의제의 내용 및 추진기구 운영 규정, 기초의제별 주요사업 및 분과·예산 현황
2006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지방의제21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2007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 지방의제21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조사연구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연구
	권역별 공동사업	▶ 동부: 삼도접경 유역공동체 기반구축 사업 ▶ 서부: 탄소발자국 시범 도시 추진 ▶ 남부: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방향모색을 통한 경기 남부권역 의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 북부: 경기북부 의제 합동 워크숍
2008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 간사학교 및 사무국장단 연수
	기초의제협력위원회	▶ 기초의제협력위원회 전체워크숍
	권역별 공동사업	▶ 동부: 삼도접경 유역공동체 기반구축 사업(지속사업) ▶ 서부: EM 정보 및 활용 가이드북, 리플렛 제작, 홍보캠페인, 가정 내 EM 활용 모니터링 전개 ▶ 남부: 경기남부권 지방의제21 기후변화 공동워크숍 ▶ 북부: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의제협력위원회 워크숍
2009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 간사학교 및 지방의제21 사무국장 역량강화 연수
	기초의제협력위원회	▶ 전회회의, 간담회, 토론회
	조사연구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과 평가지표 개발연구
	권역별 공동사업	▶ 동부, 북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선진지 연수 ▶ 서부: 경기서부권역 기초의제21 위원 공동워크숍 ▶ 남부: 경기남부권역 지방의제21 공동워크숍

2010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 실무자 워크숍
	기초의제협력위원회	대외협력세미나, 워크숍, 전국사무국처장단 워크숍
	권역별 공동사업	▶ 동부: 청소년 경안천 대탐사 ▶ 서부: 경기서부권역 시민사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 남부: 평택호 물줄기 청소년 공동탐사 '가람은 숨이다' ▶ 북부: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교구개발 북부권 기초의제워크숍

■ 푸른경기21 사업별 시·군 연계 추진을 통한 협력 강화 확대

2007년 이후에는 시군의제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의 제안을 수용하여 <기초의제협력위원회>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시·군의제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 전반에 있어서의 주도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또한 기초의제협력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의 수도 당초 2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였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는 '경기의제21실천사업', '청소년 환경대탐사', '환경교육한마당', '다양한 공모사업',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를 비롯한 사업 전반을 기초의제와의 공동 작업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13개 분야의 '경기의제21' 실천사업 및 모니터링 시 시군의제21이 주요한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표> 의제실천위원회별 사업 참여(대상) 시·군 및 시민단체·기초의제 현황(06~08)

실천위원회	연도	기초 지자체 대상 현황	기초의제 포함하여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수(기초의제 수)
산림·녹지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7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 7(1)
	2008	16개 시·군	해당 지역 시민단체 15(9)
습지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27개 시·군	해당 지역 시민단체 23(9) + 경기개발연구원

수질·하천	2006	7개 하천 14개 시·군 대상	해당 지역 시민단체 6(3)
	2007	5개 하천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1)
	2008	7개 시·군 8개 하천	해당 지역 시민단체 7(4)
폐기물	2006	31개 시·군 / 5개 시·군	31개 시·군 기초의제 / 5개 시·군 기초의제
	2007	4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해당 지역 시민단체 4(2)
		1개 지역 대상 시범 모니터링	해당지역 기초의제
2008	10개 시·군(40개 사업장)	모니터링 요원 모집하여 실시	
도시 계획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주민 자치	2006	2개 시·군	기초의제 협조 통해 실천위원회 직접 주관
	2007	4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해당 지역 기초의제
	2008	4개 시·군	4개 시·군 기초의제
성평등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30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17)
	2008	31개 시·군(약 800여개 기관)	31개 시·군 시민단체(19)
보육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2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31개 시·군 (국공립 시설 354개소)	실천위원회에서 각지자체 도움 얻어 직접 주관
농업	2006	15개 시·군 / 8개 시·군	9개 시·군 시민단체(2) / 8개 시·군 시민단체(1)
	2007	7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3)
	2008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006	31개 시·군 및 8개 지역 업체	5개 시·군 시민단체(5)
	2007	7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해당지역 시민단체(4)
	2008	31개 시·군	29개 시·군 시민단체(24)
에너지	2006	7개 시·군	7개 시·군 시민단체(0)
	2007	7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및 7개 시·군 대상 설문조사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6개 시·군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사회 복지	2006	31개 시·군	25개 시·군 시민단체(14)
	2007	31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기초의제 협조 언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31개 시·군	10여 개 지역 복지협의체 간사 및 공무원 등
문화	2006	31개 시·군	기초의제 협조 언어 실천위원회 직접 주관
	2007	-	기초의제 협조 언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 사업대상(참여) 지역 수와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 단체가 2개 이상 지역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의제실천 또는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대상 또는 참여주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의미

■ 보다 적극적인 사업성과 공유와 의제 연계를 위한 노력 필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역·기초 연계, 기초·기초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음. 푸른경기21의 이러한 노력은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의 결과를 시군으로 확산하고, 시·군의제21 추진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이 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과의 연계와 협력을 요청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게 됨으로써 시·군의제21 추진 기구는 지역 고유의 지방의제21실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광역·기초 협력 사업도 추진해야하는 실무적 부담을 져야만 했음.

따라서 협력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너지를 위해서는 지방의제21 네트워크 단위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보다 구조화된 사업 협력 추진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간 지역 지속가능발전 과제로서 '지방의제21 내용 연계'를 확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4.2 지방의제21 위원 구성과 역할의 협력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위촉 위원 현황

2010년 3월 현재 경기지역 시군의제에서 위촉한 지방의제21 위원 총수는 3,215인에 달하고, 시군별로는 연천군 60인에서 가평군 397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해당사자 그룹별로는 기타 및 개인 참여가 32.%, NGO 20%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47.4%, 남성 52.6%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인적구성내용 현황 참조) 지역에 따라 지방의제21 위촉 위원의 수와 이해당사자 그룹별 참여 정도에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

■ 푸른경기21의 현재 위원 구성 원칙

2007년부터 푸른경기21은 위원 수를 300인 내외로 확대하고,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부터 각4인씩 총12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푸른경기21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또한 푸른경기21은 기초의제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 ‘광역-기초 간 유기적 사업 연계’를 위해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푸른경기21 위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광역-기초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위원 위촉과정과 절차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중 위원 위촉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곳은 18개 시·군에 이르고, 이 중 용인시와 김포시는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다른 곳은 정관 또는 회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위촉 과정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추천(분과위원회, 각계 또는 각계 대표자, 수시 추천,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권유 등)을 명시한 곳과 자천(공개모집, 참가신청 제출)을 명시한 곳 등 그 경로가 다양하고, 위촉 절차에 있어서도 시장, 운영위원장, 회장, 집행위원장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에 따라서 지방의제21 위원의 자격 기준과 책임에 대하여도 그 해석과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구로서의 공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음.

■ **위원의 역할과 권한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지방의제21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위원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제21에 대한 위원 간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의 지방의제21 내 역할 수행에 따른 직무 연수 체계와 지방의제21 위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따른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위원 위촉 범위와 위촉절차를 공식화하고,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있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인적구성내역 현황(2010)〉

(단위: 명)

권역	지역명	총계	분야별										성별		
			여성	청소년	농민	NGO	행정	노동 노조	기업 산업	과학 기술	장애인	기타 (개인)	남	여	
	경기도														
동부	광주시	74	14	0	5	24	2	0	6	0	0	23	21	53	
	양평군	116	25	20	30	12	1	5	10	2	5	8	56	60	
	여주군	80	2	0	11	6	14	0	5	15	0	27	63	17	
	용인시	143	7	0	9	9	3	0	13	0	0	102	74	69	
	이천시	-	-	-	-	-	-	-	-	-	-	-	-	-	
	하남시	70	2	4	1	10	0	0	6	1	0	46	28	42	
서부	광명시	152	0	29	0	62	31	0	7	11	0	12	80	72	
	군포시	97	5	5	1	34	24	1	14	9	0	4	54	44	
	김포시	74	17	0	3	7	26	0	14	7	0	0	50	24	
	부천시	84	1	6	0	27	8	0	23	6	1	12	50	34	
	시흥시	112	6	2	1	34	16	1	1	10	1	40	55	57	
	안산시	141	7	0	0	32	29	3	10	18	0	42	76	65	
	안양시	78	4	0	0	13	21	0	11	17	2	10	57	21	
	의왕시	72	6	9	1	12	5	0	14	0	0	25	37	35	

남부	과천시	72	1	0	0	2	1	0	0	2	3	63	54	18
	성남시	101	0	3	0	30	5	0	0	0	0	63	24	77
	수원시	99	9	0	1	22	11	0	20	12	0	24	69	30
	안성시	166	7	0	5	35	11	0	23	15	0	70	85	81
	오산시	70	3	3	3	6	4	1	21	11	3	15	47	23
	평택시	160	3	5	1	20	3	1	17	21	0	89	86	74
	화성시	130	7	3	24	26	18	2	4	16	0	30	72	58
북부	고양시	101	4	3	5	11	2	0	5	0	1	70	53	48
	구리시	110	2	0	0	94	1	0	7	0	0	6	66	44
	남양주시	105	4	2	0	4	6	0	30	0	0	59	68	37
	연천군	60	15	0	22	3	2	0	4	14	0	0	45	15
	의정부시	111	4	0	0	51	16	0	7	12	0	21	62	49
	양주시	67	3	0	3	6	2	0	15	17	2	19	46	21
	파주시	100	5	1	5	2	10	1	11	4	0	61	71	29
	가평군	397	185	0	42	74	24	16	33	5	0	18	126	271
	포천시	185	2	0	10	9	4	1	20	15	1	123	75	110
	동두천시	미수립												
	계		3,215	344	93	182	643	284	32	350	230	18	1,042	1,750
		100.0	10.7	2.9	5.7	20.0	8.8	1.0	10.9	7.2	0.6	32.4	52.6	47.4

4.3. 지방의제21 실무자의 협력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 실무자 현황²⁹⁾

경기도 내 시·군 지방의제21 사무국 활동가 총수는 71인으로 직급별 근속연수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29)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0

〈표〉 사무국 실무자 근속기간 비교

구분	근속년수					
	계(명)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사무국장	29	4	4	3	4	14
팀(부)장	11	2	0	3	4	2
간사	31	11	10	4	3	3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실무자 총원과 활동 여건

2010년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현황에 따르면³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 실무자의 평균 근속월수는 26개월로 나타남. 이는 현장의 실무 경험이 역량강화를 위한 요소로 변환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일 뿐 아니라, 30~34세 평균 근속월수³¹⁾ 보다도 매우 짧은 것으로 사무국 실무자의 안정적 활동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의제21 사무국 실무자 선임을 위한 절차는 대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실무자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복부관리 규정, 여비규정, 회계 규정 등을 대부분 갖고 있지 못함. 또한 해임 기준이 없어 임기 만료에 의한 퇴사 외에 위원과 사무국장, 사무국장과 행정과의 갈등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사례도 있음.

실무자 선임 방식의 불명확성은 지방의제21의 공공적 운영의 토대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교육·훈련 체계

푸른경기21은 2001년 이후 해마다 실무자 연수를 개최하고 있음. 연수 내용 기획을

30)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0

31) 통계청, '2010년 5월 청년층, 고령층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서 임금근로 취업경험자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9개월로 전년에 비해 1개월 감소했다. 특히 30~34세의 경우 임금근로 취업경험자들의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35개월로 연령이 높아지면 근속기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일자리 이직 사유는 보수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2.5%로 가장 많았고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6.9%), 전망이 없어서(10.2%) 등으로 나타났다.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구성, 해마다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기획하여 연수를 운영함. 실무 훈련보다는 교류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사무국 실무역량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08년 이후에는 지방의제21실무자 연수는 근무 연한과 역할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간사와 사무국장을 각각 구분, 연수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근무연한에 대한 충분한 고려,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내용 등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연도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2004	지방의제21실무자연수	지방의제21 실무자 리더십 개발	
2005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리더십 훈련을 통한 자기점검, 커뮤니케이션 훈련 통한 활동역량 강화, 지방의제21 활동 아젠다 토론을 통한 비전 점검	
2006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지방의제21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2007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지방의제21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2008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기초의제 사무국장단 연수 및 간사단 연수	
2009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푸른경기21간사학교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무국장 역량강화연수	
2010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실무자워크숍 '소통'	
2011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	지방의제21활동가아카데미	

지속가능발전운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 의지, 경험 등을 가진 실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인선기준과 투명하고 공식적인 인선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제21 실무 경험을 통해 실무자가 지역의 건강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역량있는 네트워크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이 필요함.

4.4. 지방의제21 광역-기초 간 협력적 사업 추진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 사업의 다양성과 상호 연계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내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수행한 주요 사업 목록을 취합하여 지방의제21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과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해당 사업을 분류하였음. (표, 참조)³²⁾

〈표〉 2008~2010 주요 추진사업 유형 및 사업 분포

사업유형	사업 구분	관련 사업 추진 개수	사업추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수
의제 목적 사업	민관협력 증대노력	2	2
	단체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5	3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20	11
	지도자 (강사) 육성	30	17
	의제 지표 작성 (의제 재작성포함)	11	9
의제 실천 사업	환경분야 (자연생태분야 포함)	76	26
	기후변화대응	36	20
	사회분야 (문화, 복지분야 포함)	34	15
	마을만들기	17	12
	경제분야 (교통, 에너지 분야 포함)	8	6
계		239	

사업 분류표에 의하면 가장 많은 추진기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이 추진된 분야는 의제실천사업 중 환경분야로 26곳 추진 기구에서 총 76개가 추진되었고, 가장 적은 수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업이 추진된 분야는 의제목적사업 중 민관협력 증대 사업으로 2곳 추진 기구에서 2개의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난다. 유사한 영역의 사업 다수가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연계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업연계의 가능성과 필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동기획, 협력적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

동일한 이슈 또는 유사한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의 공동기획과 협력적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산, 인력, 기획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협력적 사업 추진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3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0,44쪽~55쪽 자료를 기초로 자료를 재구성함.

4.5.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간 광역-기초의 유기적 협력 추진 기반 강화

- 지방의제21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위원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방의제21 실무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기지역 광역기초 지방의제21 추진 토대를 건설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사회적 책임성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음. 이는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추진기구 간 사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폭넓게 확산하는 기초적인 전략임.
- 민관협력의 토대 위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지방의제21 네트워크’ 구축은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주요 전략이며 동시에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시급한 과제임.
- 지방의제21 위원과 실무자의 인선 기준을 명문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 과제, 추진 방식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지방의제21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일은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민관 협력기구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며, 지방의제21의 협력적 사업성과를 효율적으로 사회에 확산하는 일은 지방의제21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하나 된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추진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임.

5. 주요과제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협력 매뉴얼 개발과 적용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 파트너 기구로서의 지방의제21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위원 위촉 원칙과 위촉 절차, 실무자 선임 기준과 절차 명문화 하여 책임있고 역량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실무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함.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제 규정과 원칙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사

업 추진 원칙과 사업기획을 위한 공동의 틀 개발, 사업 보고서 등 각종 양식 등 개발하여 공동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및 위원과 실무자의 활동 지원 체계 마련과 적용**

지속가능발전이슈와 지역 지속가능발전 운동, 지방의제21 추진원칙,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지방의제 네트워크로서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과 실무자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함.

■ **사업의 공동 기획과 협력적 추진**

사업의 공동기획과 협력적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단계적 확대함.

협력적 사업 추진 모델 개발 : 공동사업, 협력사업, 지원 사업 등 사업비 출처, 사업의 책임성, 관련 기구간 협력 정도에 따른 협력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의 협력적 추진 형식과 내용의 다각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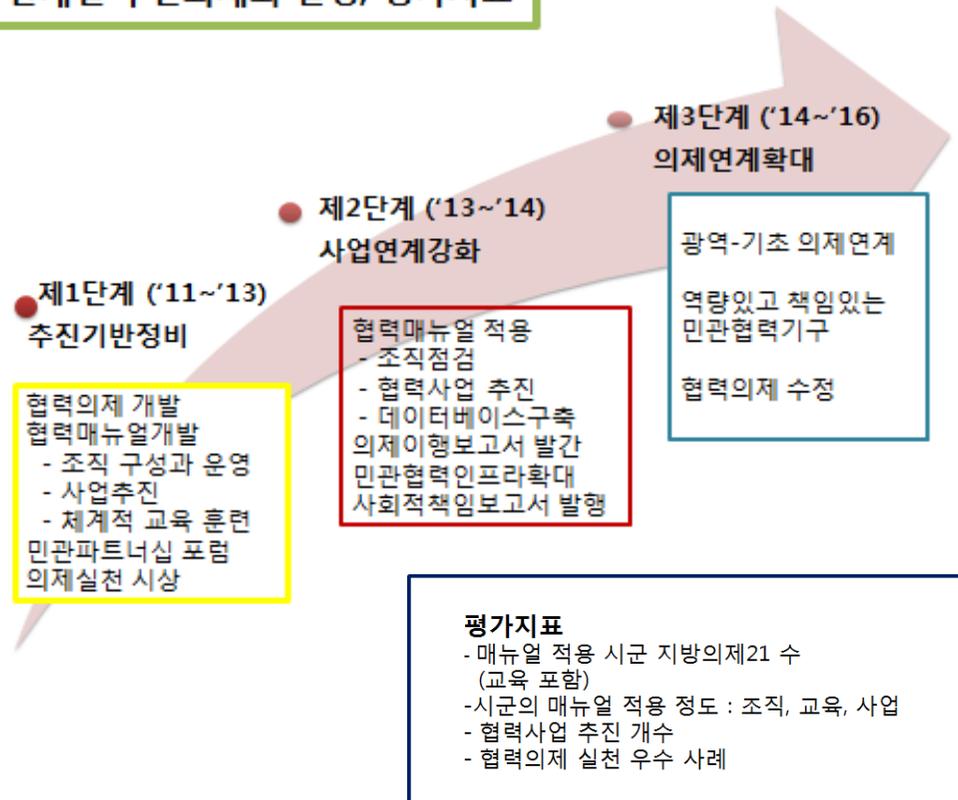
광역-기초 지방의제21 내용의 연계 방안 모색 : 경기지역의 지속가능성 진단을 위한 공동과제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군 지방의제21 내용을 조화롭게 연계한 광역-기초 지방의제21 연계 추진 방안 모색

하나 된 네트워크, 지방의제21의 사회적 위상 제고

- 의제 이행 보고서 발행 정례화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현황과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업성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포럼정례화
- 민관 파트너십의 협력적 인프라 구축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업 성과의 사회적 확산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회적책임보고서 제작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 공유와 확산

6. 단계별 주요과제의 추진일정과 평가지표

단계별 추진과제와 일정, 평가지표



구분	과제	추진일정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1	지방의제21 제반규정과 원칙 제안						
2	사업 추진 매뉴얼 개발						
3	매뉴얼과 원칙 적용						
4	협력사업 모델 만들기						
5	협력사업 모델 적용						
6	광역기초 지방의제21 내용 연계						
7	교육-훈련 체계 제안						
8	체계적 교육-훈련 추진						
9	경기지방의제21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의제 이행보고서 발행						
10	민관 협력 포럼 운영						
11	민관 협력 포럼 정례화						
12	민관 협력 인프라 확대 구축						
13	경기지역 공동보고서 발행						
14	시군 협력 정도 모니터링						
15	협력의제 지표 점검과 수정						

7.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모니터링은 의제 이행보고서 발행을 정례화함으로써 의제 실천 정도 뿐 아니라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협력적 현실을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관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의제 이행 보고서 주요 내용은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지표 변화 모니터링, 단계별 주요 추진과제의 실현 정도, 지방의제21 관계자 대상의 ‘협력관계 만족도’ 조사결과,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 등을 포함 하도록 함.

■ 평가 지표에 의한 협력 정도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와 시·군의제 협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개 지표를 선정함.

평가지표

- 매뉴얼 적용 시군 지방의제21 수
(교육 포함)
- 시군의 매뉴얼 적용 정도 : 조직, 교육, 사업
- 협력사업 추진 개수
- 협력의제 실천 우수 사례

단, 지표 모니터링은 2012년 개발 예정인 관련 매뉴얼의 내용을 기초로 상세 지표를 조정, 보완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달성 목표는 2013년 첫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해마다 시군의 협력정도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방의제21 협력관계 만족도 평가 설문 실시

해마다 경기도와 시·군 지방의제21 위원 (행정포함)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협력관계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평가 설문 내용에는 광역과 시·군, 시·군과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간 정보 공유 정도, 협력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하고, 설문 결과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기초로 시군 협력 정도의 변화를 점검함.

8. 추진전략

- 「시·군의제21 협력의제」를 위한 푸른경기21의 추진 전략은 위원과 실무자 등 지방의제21 주요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의제21의 사회적 책무성을 명확히 하여, 지역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견인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의제 추진 주체의 선정 : 시군의제협력위원회를 추진 주체로 함.**

시·군의제협력위원회는 의제 추진 주체로서 푸른경기21뿐 아니라 경기지역 시·군의제21 추진기구 위원 모두가 의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업에 의제실현을 위한 실천 사업을 주요 과제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의제이행보고서의 정기적 발간과 공유**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실천은 경기지역 모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인적 구성, 사업 추진 형식 뿐 아니라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군의제21 협력의제」의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경기지역 지방의제21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임. 체계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효율적이고 역량있는 네트워크로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역할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이행 성과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포럼 정례화**

「시·군의제21 협력의제」는 지방정부의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의제21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제21의 구성과 활동 현실은 지방정부의 민관협력 의지를 방증하는 하나의 지표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21세기, 민관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하는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전략임.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우수 실천에 대한 시상 정례화**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발굴하여 시상을 정례화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제21추진기구, 위원, 실무자, 우수 사업 등을 선정하여 시상을 정례화 함으로써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실천을 통한 지방의제21 네트워크의 유대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도, 2007,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9,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과 평가지표 연구」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8, 「푸른경기21 10주년 」 , 푸른경기21 10년 활동 평가보고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9, 정기총회 자료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0, 정기총회 자료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0,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 및 평가지표 개발연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9, 사회적책임보고서

제3차 경기의제21 작성



국제교류협력의제

“글로벌·로컬 지속가능한 경기도”
Think Globally, Act Locally!

1. 의제작성배경

■ 국제적인 합의와 권고로 탄생한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

UN은 1992년 UNCED (유엔환경과개발회의)의 결과물로 채택된 의제21 (Agenda21)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 (제28장)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시민참여에 기초한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추진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기초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단위 민관협력기구(Local Governace Mechanism)로 도입된 것이 한국의 지방의제21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방의제21은 지구적 지속가능발전과제에 대한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 (Global - Local 연계)임과 동시에 지구적 책임을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견인 주체로 볼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추진 주요 이행 수단으로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과제 즉,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침과 더불어 빈곤퇴치와 건강, 소비형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조 하면서, 그 이행수단으로 재정확충, 기술이전, 과학발전, 교육, 홍보 확대 등과 함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글로벌 이슈로써 제기되고 또 21세기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는 지구적 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제21 출발 자체가 국제적 합의와 교류의 산물로서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행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협력의 주요과제이며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 이기도 하다.

■ 지방의제21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강화 필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1999년 창립 이후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지방의제21 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연수로부터 시작된 국제교류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국제동향 정보 제공, 구체적인 사업 연계를 위한 국제교류, 제3세계 지속가능발전현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내용과 네트워크를 확장 하고 심화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역 지속가능발전운동 네트워크인 푸른경기21은 최근 NGO, 지방정부, 의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주요 파트너로 부터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푸른경기21 10주년 평가보고서³³⁾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푸른경기21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의제21 활동에 있어서 지구적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국제 연대 활동을 위한 지속적 국제연대와 네트워킹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푸른경기21은 2011년 1월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이제는 그 동안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방의제21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의제명

글로벌 · 로컬, 지속가능한 경기도
Think Globally, Act Locally!

33) 푸른경기21 10주년 평가보고서, 2008,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3. 의제비전과 목표

3.1 비전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동향과 함께하는 지방의제21
- 지역지속가능발전 운동을 견인하는 지구적 책임실천, 지방의제21
- 아시아 지속가능발전운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십, 지방의제21

3.2 목표

- 지속가능발전 국제정보와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방의제21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지방의제21
- 국제화된 지역단위 지속가능성관리 도구 도입을 촉진하는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 교육·훈련 체계로서 추진역량 강화하는 국제교류협력

3.3 단계별 목표와 과제

- 푸른경기21 창립이래로 꾸준히 축적해 온 국제교류활동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국제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제21 추진 사업의 수를 확대하고, 그 경험과 활동성과를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지방의제21의 지구적 책임 실천의 폭을 확대함을 물론 한국 지방의제21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교류협력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단계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함.

〈표〉 국제교류협력의제 단계별 목표

단계	1단계 2011-2012	2단계 2013-2015	3단계 2016 -
목표	국제교류협력의제개발 사업추진기반 확대	도시지속가능성 제고를 위 한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관리 사업과 프로그램 도 입과 적용 활동성과의 국제적 공유와 확산	지방의제21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의제개발 교육, 훈련 체계로서 국제 교류협력 확대
활동 과제	• 해외연수단 운영 : 아시아네트워크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회의 참가자 파견		
	• 지속가능발전정책동향 정보 제공 정례화		
	• 광역-시군을 연계하는 국제동향 학습-연구 모임 조직 운영		
		• 파트너 국제교류협력지원강화 • 글로벌-로컬 연계 시범 사업 수 확대 • 지방의제21 활동성과의 국제적 공유와 확산	• 아시아지속가능발전지원 사업 확대 방안모색

4. 의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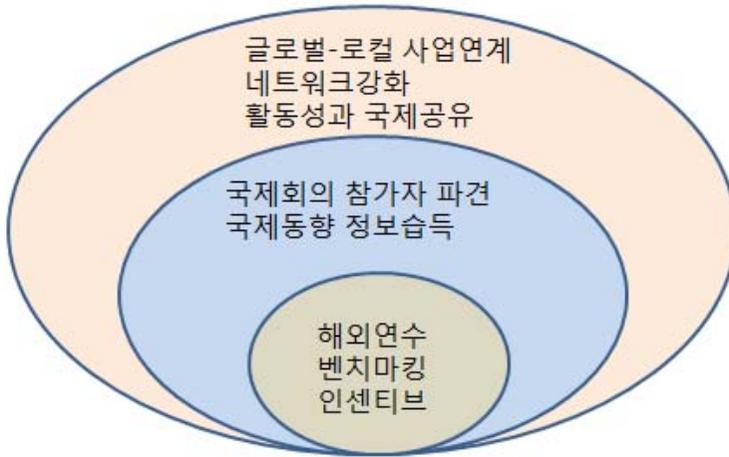
4.1. 푸른경기21 국제협력사업의 영역과 경험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로부터 시작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1999년 창립이래로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국제협력 사업의 형식과 내용은 푸른경기21의 성장과 함께 변화 발전하며 그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온 것이다. 다음의 표는 푸른경기21 창립 이후 추진해온 국제협력사업의 영역과 경험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연도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단 파견 네트워크 / 사업연계	국제포럼 등 개최	비고
1999	• 선진지연수 (일본)			
2000	• 선진지연수 (일본) • 선진지연수 (서유럽)			
2001	• 선진지연수(호주 등) • 선지지연수 (필리핀)			
2002		• Rio+10, WSSD (남아공)	WSSD 준비학교 정책포럼 WSSD 개최	
2003	• 동남아연수 (인도) • 연수단파견 (일본)			
2004	• 여성분과 (호주) • 생활환경분과(일본)			분과
2005	• 도시계획분과(유럽) • 자연생태분과(러시아)			분과
2006	• 쿠바,캐나다 연수 • 일본 연수단 파견	• ICLEI 세계총회(케이프타운)	• 국제포럼-지속가능발전과 • 기후변화, 지방정부의 역할	
2007	• 아시아연수 (태국)	• 생태발자국워크숍(영국)	• 생태발자국세미나, 안내서 • 생태예산세미나, 안내서 • 중앙성 폐철도부지 활용방 안 국제포럼	
2008	• 아시아연수 (태국)	• 세계도시포럼(난징)	• 경기지역 생태발자국 산정 • 시군 생태발자국 사업연계 • 사회적책임보고서	
2009	• 아시아연수 (태국)	• ICLEI 세계총회 (에드몬튼) • UNFCCC COP16 (포즈난) • ESD-J 아시아워크숍 (일본)	• 국제포럼 : ICLEI CCP • GFN 간담회 지원 (부산) • 사회적책임보고서 • 지속가능발전교육 보고서1.	
2010	• 아시아연수 (태국)	• Resilient Cities (본) • 생태발자국국제포럼(시에나) • UNFCCC COP17 (칸쿰) • ICLEI 미래도시 (인천)	• 국제포럼 : 그린캠퍼스 • 우리동네 그린맵 만들기 • 한국지방정부정상포럼 주관 • 사회적책임보고서 • 지속가능발전교육 보고서2. • 매솟 난민을 위한 학교 설립	
2011	• 아시아연수 (네팔) • 유럽그린캠퍼스연수 • 농업선진지연수파견	• Resilient Cities (본) • UNFCCC COP18 (더반)	• 그린캠퍼스 국제포럼 • 그린맵 국제포럼 • 사회적책임보고서	
2012		ICLEI세계총회(브라질) UNCSD (브라질)		국제 협력

○ 푸른경기21 국제교류 형식과 내용의 변화 경향

1999년 일본 선진지연수로 시작된 푸른경기21 국제교류활동의 초기 형식은 ‘해외연수’이다. 지방의제21 해외연수는 푸른경기21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지방의제21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의제21 추진에 기여가 큰 위원에 대한 인센티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 추진된 아시아 해외연수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아시아 지원프로젝트를 기획, 자발적 모금을 통해 미얀마난민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건축’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실천하였다.



<표. 푸른경기21 국제교류 형식과 내용 확대경향 >

푸른경기21의 국제교류는 해외연수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하여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정책 동향과 적용 경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국내 지방의제21 추진사업에 도입, 적용하였다. 국내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기도 하고,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제 포럼, 국제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도 하였다. 푸른경기21은 국제교류와 지방의제21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푸른경기21 국제 네트워크의 실질성을 강화해 왔다.

〈표〉 푸른경기21 글로벌네트워크 파트너와 관련 국제회의

참가단 파견 주요 회의	글로벌네트워크 파트너	비고
UN 및 글로벌 파트너 주관 지속가능발전 관련회의 • UN WSSD • ICLEI 세계총회 • ICLEI 기후변화적응회의 • ICLEI 생태교통 세계회의 • UNFCCC 당사국총회 • GFN 생태발자국 세계포럼 • ESD 아시아네트워크 워크숍 • 지방정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회의	• ICLEI • ICLEI를 통한 UNFCCC • ICLEI를 통한 UN • GFN (생태발자국네트워크) • ESD-J (지속가능발전교육) • UNGC (UN글로벌컴팩트) • CCA (아시아교회협의회) • WMEC (매숯난민교육협) • WGN (세계그린맵네트워크) • 그린캠퍼스 네트워크	

4.2. 지속가능발전 핵심 이슈, 도시·도시화 그리고 지방정부

■ 지속가능발전 핵심 이슈로 부상한 도시·도시화

유엔 자료에 따르면 인류 출현 이래 최초로 도시 거주인구비율이 농촌 인구비율을 넘어서었다.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경험한 도시화 정도는 인류가 과거 4000년간 축적해 온 도시 역량과 같은 규모이다.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거대화된 도시와 도시화 현상은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도시의 구조와 체계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 것이다. 화석 연료 의존성이 높고, 자원 집약적인 생활양식이 구조화 된 현재의 도시체계가 미래 인류의 생활 기반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탄소 중립적이고 자연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한 경제 구조를 가진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이슈가 된 것이다.³⁴⁾

■ 지역 지속가능성 견인 주체,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주민, 선거권을 가진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필요와 요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담당하는 정부기구로서 지역 민관 협력 체계와 거버넌스의 형식과 내용을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게 채용하고 있는 지 여부는 곧 지방정

34)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2011, ICLEI submission for Rio+20 Compilation Document for Zero Draft, Unpublished.

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이슈인 것이다. 지방의제21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방정부는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고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지방정부는 물, 폐기물, 보건과 위생, 대중교통, 재난 관리, 행정,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또한 건물 건축과 관리, 토지 이용, 지역 투자 예산 운영, 민원 대응 등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건물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 오염원과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를 줄이는 등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방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책임있게 수용하는 정부 기구이다. 그러나 유엔의 관점에서의 지방정부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9개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 중 하나의 주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도시·도시화 이슈의 중대성과 도시 지속가능성 책임 관리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ICLEI, UCLG, WMCCC는 멕시코협약(2010)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UNEP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단위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ccCR 도시온실가스관리등록프로그램) 개발, 출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COP16)는 합의문에 지방정부를 ‘Governmental Stakeholder’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음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4.3. 높아지는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 기대

■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푸른경기21 역할 확대 요구 증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

는 이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지역 시민사회와 시민, 의회,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요 파트너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른경기21 네트워크 파트너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푸른경기21 10주년 활동평가보고서(2008)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푸른경기21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구적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국제연대 활동을 위한 지속적 국제 연대와 네트워킹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푸드마일 (Food Mile),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등 기후변화 관련 생활 속 실천프로그램 개발,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를 의제의 실천 활동 영역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제3세계 가난한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5.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 「국제교류협력의제」 모니터링은 의제 이행보고서 발행을 정례화함으로써 의제 실천 정도 뿐 아니라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에 필요한 국제적 정보를 경기 지역 지방의제21 관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의제 이행 보고서 주요 내용은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수행한 국제교류협력 사업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사업경험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로 제공함.
- 평가 지표에 의한 협력 정도 모니터링 실시
 - 주요과제 실시 여부 점검

- 해외연수 실시 여부와 협력적 운영 평가
 - 국제회의 참가자 파견과 회의 결과 공유 정도 점검
 - 국제동향 정보 제공 시스템 정례화
 - 지방의제21 국제교류협력 사업 만족도 평가
- 지방의제21 국제협력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과 연구 활동 강화
- 상설 학습과 연구 활동 조직 운영
 - 국제협력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체계 모색
 - 국내외 네트워크와 연대 강화를 위한 활동과 학습 연계

제3차 경기의제21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

■ 생물다양성위원회 의제작성 소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2	강성주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3	김미옥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꽃마리자연학교 교문
4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5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6	이미정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교육팀장
7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8	송수경	경기도 환경정책과 계장
9	제종길	도시와 자연연구소 소장

■ 기후행동21위원회 의제작성 소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대표
2	이대수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3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5	김선영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
6	김동현	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가

■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의제작성 소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구자덕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
2	이우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3	홍승미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4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	안철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6	서희숙	남양주 시민희망연대 간사,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총무
7	최일수	푸른평택21 자치분과 부위원장,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총무
8	김덕일	평택농촌희망포럼 운영위원장,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

■ 마을의제위원회 의제작성 소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김경선	사)다산문화교육원 상임이사
3	김달수	경기도의원
4	김도근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도시사회분과 위원장
5	김선영	강남대학교 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원
6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원장
7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8	김주석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9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10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11	유희수	세류3동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12	이근호	수원르네상스지원센터 센터장
13	이오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수원지부 부지부장
14	이현선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국장
15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6	황정주	마을공동체 문화로숲 대표

■ **삶의질위원회 의제작성 소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2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	류명화	삶의질위원회 위원장 /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5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
6	송원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7	이정희	삶의질위원회 총무위원 /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8	임혜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9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10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	권기태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기획실장
3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평가관리과장
4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의모임 대표
5	김낙경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7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8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9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0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1	한순금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실장
12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13	김현삼	경기도의회 도의원(기획위원회 위원)
14	송영주	경기도의회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15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시범모니터링 >

- 연구책임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 임지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김희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주정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각 의제 작성(안)은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에서 연구 제안하였고 시·군의제협력위원회 및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검수
- 향후 시범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정 가능